

사랑방의 젊은 그들 진경을 찾아 헤매다

사랑방의
젊은 그들
규슈를 품다

하영선 편

12



EAI
EAST ASIA INSTITUTE

EAI 사랑방이란



미래 한국의 국제정치학자와 외교관을 육성하고자 2013년에 시작한 EAI 교육 프로그램이다.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이끄는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매 학기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수행하고 답사여행을 통해 역사와 국제정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사랑방 25기 명단〉

김채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석사과정
김희선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국제학 전공 (국제정치, 국제법)
권성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예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 정치외교학 전공
최은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석사과정

〈계획서〉

1일차 [1월 6일 수요일]

- 08:40-10:20 인천공항->나가사키 공항
11:10-11:30 칸데오 호텔 (20분)
11:30-12:30 점심 [江戸びし/나가사키 짬뽕] (1시간)
12:45-14:15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평화공원 (1시간 30분)
14:35-15:50 글로버 가든 (1시간 15분)
16:00-16:30 데지마 (30분)
16:40-17:10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30분)
*역사박물관은 시간관계상 방문하지 못했음.
17:20-17:30 쇼오겐 본점 (10분)
17:40-17:55 호텔 [CANDEO HOTELS Nagasaki Shinchi Chinatown] (20분)
18:05-19:30 석식 [鰯そ乃だ/스시 소노다] (1시간 25분)
19:30~ 호텔 [CANDEO HOTELS Nagasaki Shinchi Chinatown]

2일차 [1월 7일 목요일]

- 08:00-08:40 호텔 [CANDEO HOTELS Nagasaki Shinchi Chinatown] (40분)
09:10-09:50 26성인기념관 (40분)
11:20-12:00 해상자위대 사세보자료관 (40분)
13:20-14:20 점심 [갤러리 아리타] (1시간)
14:20-14:50 규슈 도자기문화관 (30분)
16:00-17:15 한일교류박물관 (45분), 임진왜란 출정지 (30분) (총 1시간 15분)
19:00-19:30 칸데오 호텔 텐진 (30분)
19:30-21:00 석식 [博多 喜多郎寿] (1시간 30분)
21:00~ 칸데오 호텔 텐진

3일차 [1월 8일 금요일]

- 07:30-08:30 칸데오 호텔 텐진
10:00-10:50 일청강화기념관 (50분)
11:20-12:10 점심 [카레혼포 모지코 레트로점] (50분)
12:10-12:40 모지코 레트로 거리 (30분)
14:00-15:00 규슈국립박물관 (1시간)
16:00-17:00 텐진 지하상가 (1시간)
17:15-19:15 후쿠오카 공항에서 석식 (2시간)
20:35-22:10 귀국

〈목차〉

1.[김채린] 북한의 핵무장의 “제도적 비가역화”: 하노이 이후 북한의 핵교리 전환과 한미의 대응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4
2.[김희선] 자주와 독립 사이: 천하질서의 붕괴와 국제법 언어의 정치 데지마/일청강화기념관(시모노세키 조약 기념관).....	20
3.[권성준] 17세기 네덜란드 상인과 일본 도쿠가와 막부: 공포의 거래 데지마/일본 26성인 기념관.....	43
4.[박예진] 미-중의 서태평양 공간 인식과 전략 구상 해상자위대 사세보 자료관.....	68
5.[최은호] 중일전쟁 전후 일본과 조선의 보편 근대에 대한 도전: 근대 초극론과 서인식의 역사철학 글로벌 가든/규슈 국립박물관.....	90
[부록] 다음 기수를 위한 사랑방 25기의 답사 준비 꿀팁.....	116

북한의 핵무장의 “제도적 비가역화”: 하노이 이후 북한의 핵교리 전환과 한미의 대응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김채린

서울대학교 외교학전공 석사과정

I. 서론

1. 연구 배경

북한의 지속된 핵무장을 추동하는 근원적 동기는 과연 무엇인가? 1990년대 제1차 북핵 위기 이래 30여 년간 지속된 핵개발 과정에서, 북한은 202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채택하며 핵 보유를 완전히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입법화된 해당 법령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령토 완정, 근본 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라고 규정된다. 또한 동 법령은 조선이 보유한 핵무력의 사명을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 공격으로부터 국가 주권과 령토 완정, 인민의 생명 안전을 수호하는 국가방위의 기본 역량”으로 명시한다 (조선신보, 2022). 즉, 조선의 핵무력은 한반도 영토 완정을 실현하는 ‘위력한 수단’임에 동시에 핵무력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새로운 양상에 대해 상이한 해석들이 존재한다. 일군의 학자들은 북한의 핵무장을 한반도 내 권력균형의 근본적 전환을 지향하는 ‘수정주의적(revisionist)’ 행태로 규정하는 한편, 다른 진영에서는 이를 제약된 구조 속에서 체제 생존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존주의적(survivalist)’ 선택으로 이해한다. 북한의 핵무장을 인식하는 시각 자체가 정치 성향에 대한 일종의 리트머스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영화된 해석 틀은 ‘북한의 시각’ 자체를 정책의 공식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본고는 북한의 핵무장이 이념적 극단성에서 기인하는 현상타파적 시도도, 단순한 생존을 위한 임시방편도 아닌, 일종의 제도화 내의 비가역화 과정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 HI)의 경로의존(path dependency)에서 일부 개념을 차용한다. HI에 따르면

제도(institutions)는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을 특징으로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에 대한 저항—즉 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한 제도의 경로 전환(path switching)이나 역행(reversal)은 점점 더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 제도는 고착(lock-in)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Rixen et al., 2016, 27). 즉,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비가역화가 가능한 것이다.

본 연구는 ‘제도적 비가역화(institutional irreversibility)’이라는 개념을 제안함으로써, 핵보유라는 정책적 선택이 법, 담론, 그리고 교리를 거쳐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로 고착되는 과정을 관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접근으로부터 하여금 핵무장 자체의 동기나 성격에 고착되기 보다, 핵정책이 다양한 국가전략의 층위에서 구조적인 요소로 변하는 매크로(macro)적인 성격을 포착하는 데에 의의를 둔다.

2. 선행 연구 검토

기존 연구들은 현실주의·이상주의·구성주의, 억지(deterrence) 이론, 혹은 미치광이(madman) 이론 등을 활용해 북한의 핵추구 동기를 해석해 왔으며 (Kwon 2022; Cheung and Haggard 2021; Park 2022; Alexandrova and Lee 2021), 북한의 핵추구 동기를 국제적 위상, 지도자 심리, 엘리트 구성, 대외안보 강화라는 네 축으로 설명해 왔다 (Kim 2021).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대부분 ‘외부 위협 대응’이라는 단일 동인에 과도하게 수렴해 있기에, 북한이 왜 타 후견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력이 취약해진다 (Kim 2021).

수정주의적 독해에서 북한은 “무력 사용을 통해 한반도 내 권력균형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는 국가, 즉 현상 파괴자(status-breaker)로 위치한다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2023). 이들 학자들은 주로 북한이 장기간의 경제적 제재 및 인도주의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경험적 근거로 제시하며, 이를 한반도 내의 “정치·군사적 상황을 지배”하고 남북 군사력 균형의 역전을 지향하려는 장기 목표의 신호로 해석한다 (우승지, 2013; 윤덕민, 2019). 반면 생존주의적 해석은 북한의 핵개발을 체제 내재적 공격성의 산물이 아니라, 제약된 구조 속에서 생존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용적 선택으로 이해한다. 북한이 현상유지의 전면적 전복을 지속적으로 회피해 왔고, 오히려 ‘지속적 위기 수준’의 관리에 가까운 행태를 반복해 왔다는 점은 핵전력이 대외전략의 ‘외교 수단’으로 작동해 왔음을 시사한다. 즉 핵무장은 정권 생존을 보장할 뿐 아니라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는 “선택적 분열(selective disruption)”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대북 선택지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 및 유도한다는 것이다 (박진휘, 2013; 이수원 & 하상섭, 2023).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을 단순히 현상타파와 비-현상타파의 양분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북한 고유의 통치체계 및 그들의 표현법에 충분히 주안점을 두지 못한다. 북한은 2005년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선언한 이후, 당의 노선, 헌법, 관련 법률 등 통치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규범적 장치들에 ‘핵보유’와 ‘핵무력’을

명시적으로 삽입하였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의 핵무장은 단순한 군사·안보적 수단을 넘어, 체제 유지와 통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국가 운영 기제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제도적 성격이 공고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홍민, 2015).

한편, 강대국 중심의 국제 비확산체제는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핵보유를 추동하는 북한에 대하여 압박과 제재를 가해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을 위시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수평적 핵확산 방지 시스템 하의 국제사회 제재는 북한의 외교·경제적 고립을 초래하여 인도적 상황에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가(cost)’는 결과론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촉발시키지 못하였다. 북한은 오히려 대북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며 재외공관의 일방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등, 제재로 촉발된 ‘고립’에 적응하여 이를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려는 양상을 보인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북한의 공식적인 핵 정책이 30-40년간의 핵 개발이 이미 시행된 후인 2022년에야 비로소 공개되었다는 사실이다. 김씨 정권은 핵전략과 대외적인 핵 정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핵 능력 고도화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 후, 대외적인 안정을 확보한 시점에서 전략 및 정책을 설계한 것이다 (김진하 외, 2024). 이는 곧 북한이 인식하는 핵 전략의 필요성이 국가 체제 존속 그 자체와 연관된 사활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2022년의 핵전략은 2013년 발표된 병진노선의 효력을 사실상 대체하는 동시에, 핵보유국으로서의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공식화하는 계기로 기능하였다.

II.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의 핵교리와 적대적 두 국가론

1. 하노이 결렬: 외교적 단절과 전략적 재조정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단절은 북한의 이후 노선을 전환시키는 촉매(catalyst)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2018년 한반도 정세는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재개되었고, 4월 판문점 선언,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었다. 이 시기 북한은 2018년 4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병진노선의 종결과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선언하기도 했다 (김창희, 2019). 표면적으로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자세로 읽힐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노딜(No deal)’로 결렬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남한의 적극적 중재와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파국으로 마무리되면서, 김정은의 대남 불신은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고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은 ‘조건부 비핵화’라는 기존의 협상 노선을 사실상 폐기하고, 핵보유국 정체성의 제도적 공고화로 경로를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회담 결

렬 이후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2019년 8월 5일자 친서는, 양국 정상 간 오간 현재까지의 마지막 친서라는 점에서, 하노이 결렬이 남긴 정동(affect)과 인식의 잔류를 포착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한반도 남부에서 실시되는 연합군사훈련은 도대체 누구에 대한 것이며, 봉쇄시키려 하며 물리치고 공격하려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한국군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부족이나 7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란 육군과 싸우고자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개념적으로나 가설적으로, 전쟁 준비 연습의 주요 타깃은 우리의 군대입니다. 이는 우리의 오해가 아닙니다. ... 군사력의 차이는 차치하고, 저는 한국을 공격하거나 전쟁을 시작할 의도가 없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진정 없습니다. 문제는 이 [한미군사]훈련을 하면서, 왜 그 누구도 생각하기를 꺼리는 잔혹한 동족상잔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 자신들이[남한이]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느냐는 것입니다 (이정철, 2025, p. 390-392).

이러한 문면의 긴장 자체가, 하노이 결렬이 북한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내면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체제안전 보장을 획득하고자 했으나, 그 시도가 좌절됨에 따라 외교적 경로에 대한 기대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핵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착수한 것은 이러한 전략적 재조정의 직접적 귀결로 이해할 수 있다.

2. 2022년 핵무력정책법

북한의 핵무력 노선은 물리적 능력의 축적을 넘어, 법·제도적 정당화의 단계를 거쳐 고착화되었다. 특히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이하 ‘핵무력정책법’)는 이러한 전환을 상징하는 문서이다. 이 법령은 핵 사용 가능 조건을 복수로 제시하는 한편, 핵무력이 수행하는 임무를 이중적으로 규정하는 구조를 포함한다. 첫째 임무는 대미 억지 차원의 핵 보유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둘째 임무는 남북관계에서 핵을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전적 임무를 부여한다는 점에 있다 (하영선, 2026).

이러한 제도화는 2022년 이전부터 축적된 담론적 예고와 맞물려 있다. 예컨대 김정은은 2023년 3월 20일 노동신문 보도에서 핵 반격 가상 종합훈련을 지도하며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전쟁을 실제로 억제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 공격 태세를 완비할 때에야 전쟁억제의 중대한 전략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앙일보, 2023).

특히 주목할 것은 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언급한 ‘핵무력의 제2 사명’이다: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의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주시보, 2022).

이 발언은 핵무력정책법의 핵심 내용을 사전 예고하는 것으로서, 핵무력의 목적이 ‘억제’를 넘어 ‘공세적 사용’의 가능성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핵무력정책법은 단순한 법적 형식화가 아니라 핵 운용 독트린의 실질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적 선택의 영역에서 법적 규범의 영역으로 격상시키며 ‘법적 성문화’를 시도한 것이다.

3. ‘적대적 두 국가론’의 공식화

‘적대적 두 국가론’이 처음 본격적 동력을 획득한 것은 2023년 12월 31일 발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2023). 다만 주목할 점은 이러한 기조가 돌연 출현했다기보다,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강경 기조가 특정 시점에 공식화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이례적으로 강경한 반응(2023년 9월 하순-11월 초), 드론의 한국 영공 침범 등은 미국과 서울을 향한 북한의 경화된 자세를 미리 보여주었다(Lee, 2024).

이와 관련해, 해당 회의에서 2022년 경제 성과에 대한 언급은 이례적으로 제한적이었고, 2023년 목표 제시 또한 절제된 톤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은—2022년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고 우리는 분명히 전진했다”는 극히 미온적인 표현을 포함해—북한이 경제 분야에서 뚜렷한 성장 성과를 제시하기 어렵고, 경제에 대한 기대를 관리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얻은 군사분야의 자신감” (이승열, 2024) 같은 요인이 결합하며 보고의 상당 부분이 안보 상황과 국방 계획에 집중된 것은, 북한이 강경 노선을 지속·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Carlin and Lee, 2023).

더 나아가 김정은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현 국제질서가 “명백히 ‘신냉전(new Cold War) 체계’로 전환되었”다고 진단하고, ‘다극화(multipolarization)’를 반복해 언급했는데, 이는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의 ‘다극 세계(multipolar world)’ 발언과도 결을 같이한다. 이 인식은 중국·러시아로의 기울기(pivot)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미국이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에 갖는 전략적 가치 자체를 재평가(또는 재조정)하는 방향의 장기적 외교노선 변화를 함축한다 (Carlin and Lee, 2023). 실제로 전원회의 보도는 다음과 같이 ‘반제자주’ 국가들과의 연대, 그리고 국제적 규모의 공동 투쟁을 천명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나라 집권당들과의 관계발전에 주력하면서 나라의 대외영역을 보다 확대강화하며 변천하는 국제정세에 맞게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드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 우리 국가의 지지력대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국제적규모에서 반제공동행동, 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해나갈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로동신문, 2023).

여기서 김정은 정부의 차후 노선으로 선정된 ‘다극 세계질서(multipolar world order)’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북한은 스스로를 패권전략에 반기를 드는 “국제적 규모”의 “공동 투쟁” 주체로 위치시키며, 이러한 어구는 이전부터 축적되어 온 ‘반제자주’ 담론의 연장선에서 반복된다. 예컨대 2024년6월의 북·러 정상회담 보도에서 북·러 관계를 “반제자주(anti-imperialist independence)”를 이념적 기반으로 재확인한 표현은, 북·중 관계에 관행적으로 부여되어 온 ‘반제자주’의 이념적 정초를 북·러 관계에도 이식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2023년 7월 쇼이구 방문 이후 반제 담론이 북·러 관계에서 가시화되었고, 같은 해 9월 회담 이후 “반제자주를 이념적 기초로 한다”는 공식화가 최초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김정은이 의회 연설에서 “반제자주”를 ‘불변의 일관된 제1 국책’으로 규정하고 “국제적 규모의 반제 공동행동과 공동투쟁”을 촉구한 맥락과도 맞물린다 (한호석, 2024a).

이러한 대외 인식과 동시에, 대남 인식의 제도적 재구성으로서 ‘적대적 두 국가론’은 다음과 같은 언어를 통해 더 노골적으로 표면화된다.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로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수 없다는것입니다.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표현때문에 미국의 식민지줄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문제를 논한다는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담론적 수사는 “대한민국것들”이라는 용어이다. 그 전까지 김씨 남매가 주로 사용하던 “괴뢰”가 ‘꼭두각시’라는 의미를 담더라도 ‘한민족’으로서의 동족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면, “대한민국 것들”은 ‘동족에서 배제된 대상’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는 해석이 제시된다 (한호석, 2024b). 또한 김여정이 2023년 7월 11일 담화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했고, 이후 관행적으로 이중꺾쇠를 제거해 “대한민국”을 사용한다는 관찰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법률상의 국가(de jure state)로 승인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의 국가(de facto state)로는 취급하는 미묘한 변화를 내포한다는 해석과 연결된다 (한호석, 2024b). 이러한 담론적 경계설정은 제도적 비가역화의 또 다른 차원을 구성한다. 기존의 민족 담론과 통일 담론을 해체함으로써,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인식 틀이 구축되는 것이다.

다만, 북한은 자신들에게서 ‘일방적인 공격자’의 이미지를 벗기기 위하여 항상 담론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자신들의 핵무력이 “일방적” 선제공격 수단이 아니라는 점 또한 강조하는 것이다. ‘적대적 두 국가론’이 공개된 며칠 후인 2024년1월16일, 김정은은 다음과 같은 시정연설을 한다:

우리가 키우는 최강의 절대적힘은 그 무슨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키워야만 하는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방위력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 전쟁이라는 선택을 할 그 어떤 리유도 없으며 따라서 일방적으로 결행할 의도도 없지만 일단 전쟁이 우리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주권사수와 인민의 안전,생존권을 수호하여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림할것입니다 (조선신보, 2024)

이는 표면상 ‘생존’과 ‘자위’의 논리로 핵무장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서술이다. 그러나 곧이어 김정은은 다음과 같이 덧붙이며 군사적 충돌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위기 서사를 재강화한다: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존하고있는 특수한 환경과 미국놈들의 주도하에 군사적인강경화로 지역정세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현실을 랭철하게 고찰해보면 물리적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높아지고 위험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조선신보, 2024).

라고 덧붙이며 군사적 충돌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위기 서사를 재강화한다.

이 맥락에서, 공표 이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 서사는 더욱 직접화된다. 예컨대 2024년 1월8-9일 화성-11형 근거리 전술핵미사일 발사대차를 조립하는 공장 시찰 보도에서 김정은은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지와 역량과 능력이 있으며 앞으로도 드팀없이 계속 확대
강화해나갈 것이다 (연합뉴스, 2024).

“초토화”라는 언어가 명시하는 것은 핵습격임이 분명하다. 북한은 “압도적인 전략적 억제력으로 (적을) 일거에 무력화”하는 습격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였음을 드러낸다. 결국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과 ‘두 국가론’의 공표는 단일한 변곡점이라기보다, 관행 속에서 장기간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온 “사실상의 두 국가 현실”을 공식적으로 언어화하고, 그동안 지향해 온 전략적 자립을 ‘정면돌파전’의 형태로 제도화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중구, 2024).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군비통제 논의마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사문화된 협상 틀을 고수하는 것보다 핵무장국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그에 상응하는 군사 교리를 구축하는 편이 훨씬 더 큰 전략적 이득을 산출한다고 확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정철, 2025).

또 하나 주목할 사항은 공표 이후 북한 관영매체가 한국 관련 언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2024년 12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은 한국 국회가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고 전했으나, 별도의 해석적 논평은 최소화했다. 이러한 절제된 어조는 2016년 북한 매체가 국회 표결 이후 약 4시간 만에 박근혜 탄핵 소식을 신속히 보도했던 사례와 뚜렷이 대비되며, 북한이 남한을 언급함에 있어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유환, 2024).

III. 한미의 대응: 제도적 비가역화에 대한 적응

한국과 미국의 대응은 “적대적 두 국가론”이 전면화되던 시기 각각 집권 중이던 정부의 대북 인식과 위협평가, 그리고 국내정치적 제약에 의해 규정되었다. 북한의 제도적 비가역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의 신뢰성 강화와 동맹 조율 메커니즘의 정비를 통해 이에 대응하고자 했다. 이러한 대응이 북한의 비가역화 전략에 대한 ‘적응(adaptation)’의 성격을 띠는지, 아니면 여전히 ‘비핵화’를 실현 가능한

목표로 전제하고 있는지는 분석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의 기조 변화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의 정점으로는 2023년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들 수 있다. 선언은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명시했다. 또한 양 정상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핵 및 전략 기획을 논의하고,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설립을 선언하였다 (외교부, 2023).

NCG는 2023년 출범 이후 단발적 이벤트가 아니라, 최소 2025년까지 ‘원칙-절차-연습’을 축으로 하는 연속적 트랙으로 운영되었다. 구체적으로, ① 2023년 7월 18일 서울에서의 출범 회의(1차) 이후, ② 2023년 12월 15일 워싱턴 D.C.에서 2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③ 2024년 6월 10일 서울에서 3차 회의가 열렸으며, ④ 2024년 7월 11일에는 한미 「핵억제 및 핵작전 지침(Guidelines for Nuclear Deterrence and Nuclear Operations)」 서명이 이루어졌다. ⑤ 2025년 1월 10일 워싱턴 D.C.에서 4차 회의가, ⑥ 2025년 12월 11일에는 5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아울러 워싱턴 선언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을 가능케 하는 협력, 한반도 핵억제 적용 관련 연합 교육·훈련의 강화, 그리고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table-top simulation) 도입을 포함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對)한국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enduring and ironclad)”, 북한의 대남 핵 공격은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swift,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고, 미국은 전략핵잠수함(SSBN: nuclear ballistic missile submarine) 기항 등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regular visibility)도 예고했다.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without preconditions)”를 추구한다는 문구를 병치하였다.

당시 CSIS는 워싱턴 선언을 1953년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과 병렬적으로 위치할 정도로, 미국의 핵보장(nuclear guarantee)의 의미와 실행을 구체화하는 문서로 평가하면서, NCG의 활동이 (i) 유사시 미국 핵작전과 관련된 공동 핵 기획 및 실행(joint nuclear planning and execution), (ii) 미 전략사령부(U.S. Strategic Command)와의 연습, (iii) 항공·해상 기반 핵운용 가능 자산(nuclear-capable assets)의 정례적 전개, (iv) 한국 군 인력에 대한 핵억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Cha, 2023).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워싱턴 선언의 텍스트 자체가 “협력(cooperation)”과 “공약/약속(commitment)”을 반복적으로 전면 배치함으로써, 확장억제의 ‘정치적 신뢰성’과 ‘동맹 조율 메커니즘’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성명/선언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키워드가 협력과 공약(약속)이며, 그 외에도 동맹(alliance), 핵/비핵(nuclear/denuclearize), 억제(deterrence)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2023). NCG 설립은 한미 간 핵전력 관련 정보공유, 핵자산 운용, 전력기획 및 전략기획 논의를 제도화(또는 상설화)하는 시도로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NCG는 확장억제를 ‘선언적 공약’에 머물게 하지 않고, 협의·기획·연습으로 연결하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 선언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두 정상의 친필서명 부재 등을 근거로, 워싱턴 선언이 법적 이행의무를 담보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이행 의무가 없는” 정치적 문서에 가깝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한호석, 2023). 또한 선언의 문구를 면밀히 검토하면, 미국이 한반도 핵 사용과 관련해 한국과 “협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make every effort to consult)”을 약속한다는 식의 표현이 포함되는데, 이는 강행규정이자기보다 ‘최선노력(best-efforts)’ 조항에 가까워, 일종의 이중 구속적 확약(double-binding commitment)으로서의 강제력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볼 때, 워싱턴 선언과 NCG의 운용은 북한의 제도적 비가역화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적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선언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여전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초점이 억제력 강화와 동맹 조율 메커니즘 정비에 맞춰져 있다는 점은, 한미가 사실상(de facto) 핵무장 북한과의 공존을 관리해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선언적 수준에서는 비핵화를 목표로 유지하면서도, 운용적 수준에서는 핵 북한에 대한 억제 관리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괴리는 북한의 제도적 비가역화 전략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반증하는 동시에, 한미 양국이 직면한 정책적 딜레마—비핵화 목표의 공식적 유지와 핵 현실에 대한 실질적 적응 사이의 긴장—를 드러낸다.

어찌 되었든,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공세성에 대한 ‘대응의 초석’으로 기능하였으며, 그 당시 설립된 NCG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장기적·구조적 현실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관건은 이러한 억제 메커니즘이 북한의 추가적인 핵 능력 고도화와 담론적 경계설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선언적 목표와 ‘핵 현실 관리’라는 운용적 필요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IV. 결론: 제도화된 구조적 제약과 ‘이벤트 정치’의 한계

2022년의 법제화, 2023년의 법적 성문화 및 담론적 경계설정, 그리고 2024-5년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핵정책은 완전한 ‘제도적 비가역화’의 궤도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이 향후 대북 외교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는, 트럼프 2기 출범을 계기로 ‘유화 국면’ 재현 가능성이 제기되는 현 시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의 재집권 직후 북·미 대화 재개의 가능성이 거론되던 시점에 조선중앙통신 연설을 통해 자신의 대미 인식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였다: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립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이었습니다. … 현재까지도 미국의 정책들이 버릇처럼 입에 올리는 미국은 절대로 적대적이지 않다는 그 교설이 세상사람들에게 이상한 괴설로 들린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 제반 현실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최강의 국방력, 이것만이 유일한 평화수호이고 공고한 안정과 발전의 담보임을 매일, 매시각 절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정철, 2025, p. 335).

이어, 김정은은 2025년 9월 22일에 트럼프의 구애에 다시금 응답하며 두 지도자 간 “좋은 기억”을 인정하는 한편,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터무니없는 집착을 버린다면” “평화적 공존”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okolin, 2025). 위와 같은 발언들은 미국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패권을 영위하는 한 미국과의 관계 정립은 불가하다는 김정은의 확신을 응축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대미 정책은 상대적 재래적 열세 속에서도 우월성을 투사하려는 시도, 그리고 강대국에 의한 외교적 인정을 갈망하면서도 종속에 대한 경계가 이중으로 작용하는 보완적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정철, 2025). 북한에 있어 이제 미국과의 지위 대등성—즉, 동등한 대화 상대로 인정받는 것—은 자국의 전략적 야심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된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가능케 하는 북한 측 근거는 복수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스스로를 ‘전략국가’로 규정하는 담론적 기반에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정학적 연쇄 속에서 자신을 ‘전략적 요충지’로 위치시키는 자기인식이 결부되어 있다. 둘째, 남한이 하노이 ‘노딜’(No deal)의 충격 속에서 북한이 좌절했을 것이라고 평가한 것과 달리, 북한은 ‘북방외교 회복’이라는 성과를 향해 외교적 좌표를 재조정하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2018–2019년의 시기 동안 북한은 북·미 및 북·중 관계를 두고 ‘저울질(hedging: 위험분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정철, 2025), 북·러 관계를 ‘원상 복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재구축함으로써 2025년 현재까지도 군사국가로서의 미래를 전망하는 경향이 지속된다.

예컨대 2025년 9월, 중국 열병식에 참석한 국가들은 상징정치의 차원에서 향후 평양과의 외교적 교류를 재개·확대할 의사를 사실상 표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낳는다. 이 맥락에서 트럼프가 북한과의 접촉을 재차 거론하는 이유 또한,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정학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기능하며 협상·관리의 대상이 아니라면 오히려 비용이 증대되는 행위자로 자리 잡았다는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북한 붕괴론’은 설명력과 정책적 유효성이 제한적이며, 오히려

북한의 체제 지속, 핵무장, 그리고 대외 협력의 재구성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실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

김정은 집권 초기 지도부가 김일성·김정일의 ‘통일 유산’을 호명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전위기구의 기능을 (명목상으로) 유지했던 것과 달리,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전까지 그러한 수사적 연속성이 실질적 정책과 지속적 협력으로 구체화되지 못했고, 민족통일 담론이 대체로 의례화되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지선, 2025).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제창과 이후 유사 성향 국가들과의 연대는, 한반도 질서를 전복하려는 수정주의적 의지의 표출이라기보다 하노이 결렬, 한미일 안보체제 강화, 대안적 국제질서의 부상이라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는 ‘실용적 재조정’으로 해석하는 편이 더 타당하다. 본고가 제시한 ‘제도적 비가역화’ 개념은 바로 이러한 재조정이 일회적 정책 선택이 아니라, 법·제도·담론의 층위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로 고착되는 과정임을 포착하고자 한 것이다.

북한은 현 단계에서 자신들의 대미 ‘현상 유지(status quo)’를 전제로, 미국과의 관계를 ‘굴복-보상’의 비대칭 구도가 아니라 동등한 협상 당사자 간의 교섭으로 재정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 대미 협상은 더 이상 체제의 사활이 걸린 일회적 결단이라기보다,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관리·조정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양상에 가깝다. 이를 시사하는 최근의 단서로, 북한은 2026년 1월 4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행동을 두고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조선중앙통신 문답’ 형식을 통해 “주권침해행위” 및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난하였다. 다만 같은 내용이라도 정식 ‘담화’가 아니라 문답 형식으로 첫 반응을 제시했다는 점은, 대외 메시지의 격(格式)과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향후 대미 메시지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두려는 신호적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겨레, 2026).

그러나 향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더라도 그 자체가 실질적 성과로 직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과도하다. 특히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 철회하라는 요구가 협상의 전제처럼 작동하는 한 (하영선, 2026),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종합하면, 북·미 간 개인적 친분의 재현—소위 ‘브로팬스’—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 친분 자체를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panacea)으로 간주하는 것은 분석상 중대한 오류가 된다. 핵심은 정상 간 분위기 변화가 아니라, 북한이 이미 제도화한 핵보유국 정체성과 ‘두 국가론’이 협상 공간에 부과하는 구조적 제약, 그리고 이를 둘러싼 상호 인식의 비대칭이 지속되는 한 ‘이벤트 정치’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대북 정책은 정상 간 친분이나 일회적 회담 성사 여부가 아니라, 북한의 제도화된 핵 현실을 전제로 한 억제·관리·점진적 관여의 복합적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참고문헌

2) 국문

고유환. 2024. “두 개 국가론과 자유통일론”. 『논쟁, 두 개 국가론』. 서울: 국회 동북아평화공존포럼. 15-24.

김진하·조한범·정성윤·오경섭·박형중·한기범. 2024.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 전환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김창희. 2019. “북한 병진노선의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으로 전환”. 『한국정치정보학회』 22(2). 1-28.

로동신문. 202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12월31일.

박진휘. 2013. “북한의 핵 개발과 외교 전략: 선택적 분단의 지속 메커니즘”. 『국제정치논총』 53(2).

우승지. 2013. “북한은 현상유지 국가인가?: 김정일 시기 북한의 국가성향 고찰”. 『국제정치논총』 53(4).

윤덕민. 2019. “핵무장을 둘러싼 북한의 전략 평가: 왜 우리는 북한 핵무장을 막는 데 실패하고 있는가?”. 『Strategic Studies』 26(2).

이수원·하상섭. 2023. “북한의 핵 운용 전략 변화 연구: 핵 관련 규범 분석을 통하여”. 『통일과 법률』 26.

이승열. 2024. “조선로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4년 남북관계 전망”. 『이슈와논점』 2177호.

이정철. 2025. 『북미 대립과 친서 외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중구. 2024.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북관계 전망”. 『통일정책연구』 33(1). 29-54.

이지선. 2025.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남북협력 전략 재편: 국제개발협력을 활용한 ‘역설적 평화 접근’”. 『Korea and World Politics』 41(3). 135-172.

아산정책연구원. 2023. “2023년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이슈브리프』.

외교부. 2023. “워싱턴 선언 (국문, 영문)”. 4월27일.

연합뉴스. 2024. “외교부, 김정은 '대한민국 초토화' 발언에 "말장난 불과"”.
『연합뉴스』 1월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202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12월 31일. <http://www.mfa.gov.kp/view/article/19059>

중앙일보. 2023. ““킬 체인’ ‘참수 작전’ 꿈도 꾸지 말라는 핵 카드 엮포.”
『중앙일보』 3월23일.

조선신보. 2022.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조선신보』 9월9일.

조선신보. 2024. “김정은원수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조선신보』 1월 16일.

자주시보. 2022. “[전문] 김정은 위원장 “지금 우리 무력은 그 어떤 싸움에도 자신
있게 준비되어 있다””. 『자주시보』 4월 26일.

하영선. 2026. “2026 한반도 시나리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넘어 공생의 길로”. 『EAI
2026 신년특집 보이는 논평』.

한겨레. 2026. “북 “미, 베네수엘라 주권 유린…불량배·야수적 본성 드러내””. 1월4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37986.html>

한호석. 2023. “[개벽예감 537] 워싱턴 선언은 내버려야 할 오작품”. 『자주시보』 5월
1일.

한호석. 2024a. “[개벽예감 591] 새로운 반제동맹조약의 효력은 무기한, 위력은
무한정”. 『자주시보』 6월 24일.

—. 2024b. “[개벽예감 569] 통일의 길에서 평정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다”.
『자주시보』 1월8일.

홍민. 2015. 『김정은 정권 핵무기 고도화의 정치경제』. 서울: 통일연구원.

3) 영문

Alexandrova, Iordanka, and Dong Sun Lee. 2021.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Envisioning Assured Retali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21(3). 371–400.

Carlin, Robert L., and Rachel Minyoung Lee. 2023. “North Korea Makes a Still More Conservative Turn at Party Plenum”. *38 North*, January 5.
<https://www.38north.org/2023/01/north-korea-makes-a-still-more-conservative-turn-at-party-plenum/>

Cha, Victor. 2023. “An Assessment of President Yoon’s State Visit to the White House.” *Critical Questions*.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heung, Tai Ming, and Stephan Haggard. 2021.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Foreign Absorption and Domestic Innovation.”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44(6). 802–829.

Kim, Min-hyung. 2021. “Why Nuclear? Explaining North Korea’s Strategic Choice of Going Nuclear and Its Implications for East Asian Security.”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56(7). 1488–1502.

Kwon, Eun-gi. 2022. “North Korean Nuclear Crisis from Contending Theoretical Perspectives.” *Pacific Focus* 37(3). 408–435.

Lee, Rachel Minyoung. 2024. “North Korea’s Post-Parliament Tension Signaling.” *38 North*, October 18.
<https://www.38north.org/2024/10/north-koreas-post-parliament-tension-signaling/>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2023. “North Korea: Scenarios for Leveraging Nuclear Weapons Through 2030.” June 22.
<https://www.dni.gov/index.php/newsroom/reports-publications/reports-publications-2023/3703-north-korea-scenarios-for-leveraging-nuclear-weapons-through-2030>

Rixen, Thomas, Lora Anne Viola, and Michael Zurn. 2016.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xplaining Institutional Development in World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Park, Hyoeun. "An Investigation into North Korea's 'Real' Nuclear Strategy: A Comparison with Pakistan's Case." *Journal of Asian Security and International Affairs* 9, no. 2 (2022): 207–230.
<https://doi.org/10.1177/23477970221098467>.

Sokolin, Anton. 2025. "Kim Jong Un Says He's Open to Talks if US Discards 'Denuclearization Obsession'." *NK News*. September 22.
<https://www.nknews.org/?p=961277>

자주와 독립 사이: 천하질서의 붕괴와 국제법 언어의 정치 데지마, 일청강화기념관

김희선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국제학 전공 (국제정치, 국제법)

I. 들어가며: 천하질서와 국제법 질서의 전환기 속에서

19세기 후반의 동아시아는 기존의 국제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국제법 체제가 확립되는 대전환의 시기였다. 수백 년 동안 조선 외교의 기본 규범이 되어 온 전통적 화이질서는 중국을 문명의 중심으로 삼고 주변 세계를 문명/야만의 위계로 배열하는 구조였으며, 조선은 그 내부에서 스스로를 ‘소중화’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 질서에서 외교는 ‘법적 권리와 의무의 교환’이 아니라 문명적 질서를 재확인하는 의례와 예교였다. 즉, 조선에게 국제관계란 법적·제도적 공간이 아니라 문화·도덕·예의에 기반한 관계적 질서였다.

이러한 세계관은 조선의 ‘자주(自主)’ 개념에도 반영되었다. 조선이 말한 자주는 ‘국가 주권’에 해당하는 개념이 아니라, 천하질서 내부에서 허용된 자율성, 즉 ‘각기 자기 일을 처리한다(各守其事)’는 의미에 가까웠으며, 이는 청 총리아문이 “조선은 속국이지만 다만 조공할 뿐, 국사는 모두 자주”라고 설명한 관행적 인식과 맞닿아 있다. 전통적으로 조선이 청과 맺은 조공·책봉 관계도 법적 종속관계가 아니라 문명적 위계와 상호 인정의 질서였기 때문에, 조선은 외교적 자율성을 행사하면서도 스스로를 독립국가라 주장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듯 ‘자주’는 관계적 개념이었고, 근대 국제법상의 ‘독립(independence)’ 또는 ‘주권(sovereignty)’ 개념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세계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19세기 중엽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는 이러한 질서 인식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 당시 프랑스와 미국은 조선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조선의 대청 관계와 종속 여부를 확인하려 했고, 속국이라면 책임이 종주국에 귀속된다는 논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청의 총리아문은 “조선은 확실히 속국이지만 조공을 바칠 뿐, 모든 국사는 자주”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대외적으로 속국이라는 지위를 외교적 논리로 활용하며 프랑스와 미국의 조약 체결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 사건은 ‘자주’가 국제법적 독립과는 전혀 다른 의미, 즉 종속 속의 자율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조선과 청 모두 ‘속국-국사자주’라는 결합을 모순으로 보지 않았던 반면, 서구 국제법

언어는 ‘속국’과 ‘독립’을 양립 불가능한 지위로 분리해 이해했다는 점에서, 동일 개념의 번역은 구조적으로 어긋날 수밖에 없었다.

한편, 19세기 중반은 보다 넓게 보았을 때, 영국이 주도하는 서구 제국주의가 비서구의 기존 제국 질서를 해체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아편전쟁과 난징조약 체제를 통해 청은 조약·주권·영토에 기반한 법적 질서를 수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천하질서의 중심은 빠르게 붕괴하였다. 이 틈에서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서구식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자신을 ‘근대적 주권국가’로 재정의했다. 일본은 조약 체결 능력, 대외적 불간섭, 독립국의 법적 지위를 새로운 국가 정체성의 핵심 지표로 삼았고, 이러한 변화는 일본이 조선을 바라보는 인식과 전략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다만 조선의 다수 관료층은 이러한 변화를 근대 국제법의 언어로 전환하기보다는, 전통적 질서 언어 속에서 흡수, 재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조약 체결을 둘러싼 상당수 논의에서, 조약을 권리·의무를 명시하는 법적 계약이라기보다 예교 질서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려는 해석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전통 질서에 기반한 조선의 외교적 사고와 근대 국제법을 체득한 일본의 외교 전략이 충돌하면서, 같은 단어-‘자주(自主)’와 ‘독립(independence)’-가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여기서 ‘충돌’은 ‘현장에서 서로 싸웠다’는 뜻이 아니라, 동일한 문구가 서로 다른 규범체계에서 ‘다른 법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외교적 선택지를 충돌시키는 상태를 의미한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 제1조의 “朝鮮國自主之邦、保有與日本國平等之權”은 조선에게 ‘천하질서 내부의 자율성 확인’으로, 일본에게 ‘청의 종주권을 배제한 국제법상 독립국 규정’으로 읽혔다. 즉, 문구는 하나였지만 그것이 연결되는 세계(천하질서)가 달랐고, 그 결과 조항이 ‘관계 유지’와 ‘관계 해체’를 동시에 함축하는 모순적 장치가 되었다. 이 의미의 갈림이 누적되면서, 훗날 조선의 지위를 둘러싼 청일 경쟁의 핵심적 쟁점으로 비화했고, 1895년에는 시모노세키조약 제1항에서 조선의 ‘독립자주국’ 지위를 먼저 선언하는 방식으로 국제법 문구가 정치적 결론을 확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자주’는 동아시아 책봉질서 내부에서도 모순 없이 사용 가능한 유연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이를 통해 관계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자율성을 주장할 수 있었다. 반대로 일본은 이 유연성을 국제법의 ‘독립’으로 번역해 고정시키며, 조선-청 관계를 재규정하는 정치적 효과를 노렸다.

임진왜란 이후 한일 교섭은 대체로 쓰시마번이 중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일본의 ‘중양 권력(막부)’이 조선에 직접 상주, 정례 사절을 파견하는 형태는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통교는 형식상 ‘교린’이었으나 실무 구조에서는 중개자(쓰시마)에 의해 비대칭성이 누적되었다. 예컨대, 외교 문서의 전달, 번역, 의례 조정이 중개자에게 집중되면서 정보 비대칭이 구조화되었고, 이는 용어의 해석(호칭, 관계 규정)을 둘러싼 ‘절충’이 장기적으로는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동할 여지를 남겼다. 중개자가 ‘표현 선택권(번역, 문서 형식, 의례 문구)’을 쥐는 순간, 갈등이 생길 때마다 원문 해석의 주도권이 누적되며, 이는 훗날 조약 문구의 ‘법적 의미’를 일본식으로 고정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지속된 대일 경계심의 산물로, 결과적으로 조선과 일본 간 통교는 형식적으로는 대등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이고 제약된 관계였다. 양국은 서로 다른 언어 인식 속에서도 표면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절충적 해석을 취했다. 예컨대 ‘대군(大君)’이라는 칭호는 조선에서는 국왕의 하위 호칭이었으나, 일본에서는 대등하거나 상위의 지위를 나타내는 칭호로 인식되었다. 이런 언어적 절충은 훗날 ‘자주’와 ‘독립’의 인식 격차를 낳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비대칭적 교린 구조는 19세기 말 조선과 일본이 사용한 외교 언어-조선의 ‘자주’와 일본의 ‘독립’-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다. 두 용어는 외형적으로 유사했지만, 서로 다른 세계관과 정치적 목적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약문 제1조에 명시된 ‘조선은 자주지방’이라는 표현은 조선에게는 기존 질서 속 자율성의 확인으로, 일본에게는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고 조선을 국제법상 독립국으로 규정하는 선언으로 해석되었다. 양국은 같은 용어를 전혀 다른 세계관 속에서 해석하고 있었고, 바로 이 개념적 단절이 이후 조선-일본-청 삼각관계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기원이었다. 조약문에 적힌 “조선은 자주국이다”라는 문구는 조선에게는 기존 질서 속 자율성의 확인으로, 일본에게는 청의 종주권 부정과 조선의 국제법상 독립국 선언이라는 의미로 작용했다. 양국은 같은 용어를 전혀 다른 세계관 속에서 해석하고 있었고, 바로 이 개념적 단절이 이후 조선-일본-청 삼각관계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기원이었다.

강화도조약 제1조에는 조선을 ‘자주지방’이라고 규정하는 문구가 포함되어었는데, 이는 일본이 조선을 근대 국제법 질서에 편입시키고, 동시에 청의 종주권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반영된 조항이었다.

반면, 조선 정부는 강화도조약을 통해 조선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정국을 타개하는 한편 기존의 일본과의 우의를 다시 회복하고 돈독하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조약의 체결은 좋은 싫든 조선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제관계에 비로소 한쪽 발을 들여놓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일본은 국제법 언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확장했다. 첫째, 조선을 ‘독립국’으로 규정해 조선-청 관계를 국제법적으로 해체하고(속국 부정), 둘째, 조선을 근대 국제법상의 독립국으로 위치시키는 논리를 통해 조선이 외교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함으로써 청을 후견자로 호출하거나 기대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았으며(독립의 제도화가 가져온 고립 효과), 셋째, 조약 체제를 통한 군사·재정·외교 개입을 강화해 보호국화에서 통감정치로, 통감정치에서 병합으로 이어지는 종속의 완결을 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사용한 ‘독립’이라는 개념은 해방의 언어가 아닌, 식민 지배를 합법화하기 위한 국제법적 전략 언어였던 것이다.

다만 1890년대 초의 현실 권력관계(청의 우위) 때문에 겉보기에는 “조선이 청의 질서 안에 있다”처럼 보였을지라도, 문구의 해석과 지위 규정은 청일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 충돌하고 있었고, 이 충돌이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 제1항에서 ‘청국이 조선의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인정한다.’는 선언으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실제로 답사하는 현장—테지마, 글로버가든, 한일교류박물관, 모지코 레트로 등—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테지마는 일본이 서양의 과학·법·지식을 처음 받아들인 공간이었고, 글로버가든은 일본이 조약항으로서 근대 국제질서를 실험한 현장이며, 시모노세키는 일본이 서구 열강과 대등하게 외교하려 했던 국제법적 실천 무대였다. 일본이 근대 국제법 질서를 받아들이고 이를 대외 팽창의 기초로 삼아 조선 정책을 전개한 맥락은, 바로 이러한 공간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본 답사보고서는 이러한 현장 답사를 바탕으로, 조약 문구에 담긴 개념의 의미, 외교적 선택의 배경, 국제법의 전략적 활용, 조선과 일본의 세계관 충돌을 개념사·외교사·국제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조선이 이해하지 못한 세계관의 변화와 일본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제법 언어 사이의 괴리를 이해하는 것은 동아시아 근대사의 구조적 단절을 파악하는 핵심이며, 이번 답사를 통해 확인한 현장적 맥락은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 그리고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II. ‘자주’와 ‘독립’ 해석의 충돌과 일본의 국제법 전략

1. 조선의 ‘자주(自主)’ 개념: 전통적 중화질서 속 자율성

19세기 조선이 사용한 ‘자주(自主)’는 근대 국제법상의 ‘독립(independence)’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었다. 조선의 ‘자주’는 책봉·화이질서 속에서 인정된 ‘종속을 전제로 한 자율성’을 의미하는 관계적 개념이었다. 이때 조선이 전제한 국제질서는 주권과 영토 개념에 기반한 법적 질서가 아니라, 문화적 위계와 예교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천하질서·사대교린체제였다. 조선은 자신을 중화문명의 일부로 인식하며, 외교 행위를 법적 권리와 의무의 교환이 아닌, ‘예(禮)를 통한 위치적 관계의 확인’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자주’ 역시 독립국 선언이 아니라, 천하질서 내부에서 허용된 자율적 위치를 확인하는 개념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료를 여럿 찾을 수 있었다. 우선, 병인양요(1866) 당시 프랑스가 “조선은 청의 속국인가?”라고 질의하자, 청의 총리아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朝鮮雖為屬國，惟貢而已，其國事皆自主。」

(조선은 비록 속국이지만, 다만 조공할 뿐이고 그 국사는 모두 자주이다.)

여기에서 ‘自主’는 국제법적 독립(independence)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속국의 지위를 전제로 하면서도 내정은 스스로 처리하는 관습적 자치권을 뜻한다. 조선은 이와 같은 속국, 자주 논리를 외교적으로 활용하여 서양 열강의 조약 요구를 거절했다. 즉, 조선의 ‘자주’는 국제법적 지위가 아니라 관계적·도덕적 질서 개념이었다.

조선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조선은 적어도 (1) 조약이 강제력을 갖는다는 사실, (2) 조약문 문구가 외교 분쟁의 쟁점의 된다는 사실, (3) ‘속국-국사자주’ 논리가 서구 열강과의 교섭에서 방패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실무적으로 알고 있었다. 다만, 조선이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했던 것은, ‘자주’가 국제법의 문법으로 번역될 때 발생하는 “지위 재정의 효과(청의 배제, 조선의 단독책임화)”였다. 반대로, 일본은 애초에 그 효과를 노리고 ‘자주’라는 동아시아 어휘를 택해, 국제법적 ‘독립’으로 연결되도록 문구를 설계했다.

황준헌의 『조선책략』(1880)에서도 같은 구조가 반복된다.

「中國保之以藩屬之名，而我實自主其國矣。」

(중국은 번속이라 이름 붙여 보호하지만, 실상 조선은 스스로 그 나라를 자주적으로 다스려 왔다.)

또한 조선이 일본에 보내던 공식 외교문서인 『서계(書啓)』에서도 ‘자주’ 개념은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我東藩自主其國已久。」

(우리 동쪽 번은 오랫동안 스스로 나라를 자주적으로 다스려 왔다.)

여기서 조선은 스스로를 ‘東藩(동번)’이라 규정하며, 자신을 명확히 중국 중심의 책봉체제 내부에 위치시킨다. 즉, 조선의 ‘자주’는 책봉관계를 부정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 관계를 전제로 유지되는 자율적 국정 운영을 의미하였다. 개념적 경계가 불분명한 추상적 개념어인 “자주”라는 표현은 동아시아에 특유한 책봉체제와 조화가 가능한 (compatible)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고도의 유연성을 지닌 개념이었고, 조선은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 이 개념을 이해, 활용하였던 것이다. “자주지방(自主之邦)”이란 표현은,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이 의도한 국제법적 의미보다 전통적 질서 안에서 훨씬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에 불과하였다.

김용구는 이러한 조선의 자주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적시한다.

“사대 질서 안에서 외번의 정교금령은 자주에 임하여 왔다. 조선 측은 이런 의미로 강화도 조약 제1조를 인식하였다.”

즉, 조선이 말한 ‘자주’는 근대 국제법적 독립 선언이 아니라, 기존 질서의 연속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방식의 표현이었다. 조선은 자신이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예(禮)’를 기반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했을 뿐, 이를 국제법상의 독립국 또는 주권국가의 선언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조선 내부에서 ‘자주’는 국가 정체성의 핵심 언어였기 때문에, 근대 국제법 언어를 새롭게 받아들여 의미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외래 문화에 대한 증오와 저항의 결과로 조선은 공법 질서의 가치 체계를 매우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사대 질서의 관념과 유사한 관념 또는 개념 체계나 그러한 체계에 따라 공법 체계를 해석하려는 태도가 오래 지속되었다.”

이러한 인식 구조 때문에, 조선은 강화도조약을 비롯한 일련의 조약을 예교의 일환으로 이해하려 했고, 조약이 지닌 국제법적, 제도적 함의를 근대 국제법의 언어로 전환하기보다는, 기존 예교 질서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며 대응하였다.

반면 일본은 서양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외교 전략 언어로 변환해 사용하였다. 김용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1876년 2월 조선과 일본간에 수호 조약 교섭 당시에는 일본 식자간에는 만국 공법이나 국제법의 용어는 널리 쓰이고 있었는데, 이는 국제법적 언어가 조선에는 낯선 언어였던 데 반해, 일본에서는 이미 조약문 작성과 외교 협상의 실무 언어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조선은 ‘자주’를 전통 국제질서 속의 자율성으로 이해했고, 일본은 이를 근대 국제법상의 독립과 동일한 언어로 번역해 사용하였다. 같은 단어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작동하는 구조, 바로 이것이 ‘자주’와 ‘독립’ 개념의 본질적 충돌이다.

이 해석 차이는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협상 당사자들의 문구 선택에서 구체화되었다. 1876년 조약 체결 과정에서 일본 측 전권은 구로다 기요타카, 조선 측 전권은 신헌이었고, 이들이 합의한 제1조 문구가 훗날 지위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다.

2. 일본의 ‘독립’ 개념: 근대 국제법 수용

반면, 메이지기 일본의 외교 관료층은 메이지유신 이후 서양 국제법을 체계적으로 받아들이며 ‘독립(independence)’ 개념을 국제 전략 언어로 사용했다. 메이지기 일본은 서구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번역, 소개하면서, 독립, 주권, 조약과 같은 법 개념을 외교 실무의 기본 언어로 빠르게 내면화했다.

이때 일본이 사용한 ‘독립’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인 주권 개념이라기보다, 중국을 정면으로 의식한 전략적 외교 언어에 가까웠다. 일본 외무성은 대조선 정책을 구상하는 초기 단계부터 조선 문제를 단독 사안으로 다루기보다, 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은 조선을 중국의 조공 질서에 속한 존재로 전제한 상태에서, 조선과의 직접 충돌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함으로써 조선을 한 단계 낮은 위치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러한 구상에는 유사시 중국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훗날 마관조약 제1항에서 조선의 지위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의 ‘독립국’ 구상은 조선을 중국의 조공질서에서 분리하려는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일본이 조선 문제를 바라보는 보다 근본적인 인식, 즉 조선을 둘러싼 열강 경쟁 속에서 일본이 선점자가 되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과 결합되어 있었다. 이미 서양 열강들은 중국에서 조차지와 이익권을 확보하며 동아시아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지만, 일본에게 보다 시급한 과제는 조선이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서양 열강이 조선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이전에, 자국이 먼저 조선에 대한 영향력과 이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가 이익을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일본은 조선에 대한 개입을 단순한 세력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질서 유지를 위한 조선 문제의 해결’이라는 외교적·대외적 명분으로 포장하였다.

특히 러시아의 극동 진출과 해상 교통로를 둘러싼 불안, 그리고 1861년 이른바 ‘쓰시마 사건’은 일본 내에서 주변 해협과 도서의 전략적 의미를 재인식시키는 계기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다만 이러한 안보 위기의식이 곧바로 단일한 대조선 정책으로 직결되었다기보다는, 1870년대 일본의 정계·언론·정책 담론에서 조선을 둘러싼 위협과 기회가 동시에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점차 누적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다시 말해 ‘조선 문제’는 단순한 외교 현안이라기보다,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 변화, 열강의 침투 가능성, 일본의 해상 방위 구상과 결합하면서 형성된 복합적 담론이었다.

이 담론은 정한론과 결합해 강경한 형태로 분출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약 체결, 통상 확대, 외교적 개입, 그리고 국제법적 언어를 통한 지위 규정 등 다양한 정책 경로로 분화되었다. 따라서 일본이 말한 ‘조선 문제의 해결’은 표면적으로는 지역 질서와 안정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으나, 실제로는 열강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조선에 대한 우선적 영향력과 이권을 확보하려는 국가이익 계산과 긴밀히 맞물려 있었다. 이 점에서 ‘조선 문제’라는 표현은 조선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말하면서도 동시에 관료·개입해야 할 대상으로 재구성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이 이후 조약 체제의 확장과 단계적 개입 논리를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작동하였다.

조일수호조규는 바로 이러한 일본의 인식과 전략이 처음으로 제도화된 조약이었다.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은 ‘조선 문제’를 명분으로 중화체제에 균열을 가하고, 서양 열강에 앞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였음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였다. 즉, 조일수호조규는 일본이 조선을 둘러싼 국제 경쟁 구도 속에서 스스로를 선점자로 위치시키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일본이 1876년 조약문에서 곧바로 ‘독립’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동아시아 외교어법에서 수용 가능한 ‘자주’를 사용해 동일한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즉, ‘자주’는 조선이 거부하기 어려운 언어였고, 일본은 그 유연성을 ‘국제법적 독립’으로 번역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요컨대, 일본은 ‘조선이 거부하기 어려운 말(自主)’을 ‘열강이 인정하는 말(獨立/independence)’로 바꿔 끼우는 방식으로, 문구의 수용 가능성과 국제정치학적 효력을 동시에 확보하려 했다.

이러한 전략은 이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고와시 등 핵심 정책 담당자들과 외국인 고문 보아소나드 등 법·외교 지식인들의 논의를 통해 조선 문제를 검토했으며, 조선에 사절을 파견하는 동시에 중국

의 의도를 확인하는 외교적 병행 노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또한, 일본은 자국이 이미 근대 국제법 질서에 깊이 편입되었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에 접근하였다. 일본은 1854년 개국 이후 여러 서구 국가들과 연속적으로 통상수호조약을 체결하며, 조약 체결, 치외법권, 최혜국 대우와 같은 서구 국제법적 규범을 실무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국제법을 단순한 외교 기술이나 형식적 규범이 아니라, 국가 운영과 대외 전략을 설명하는 기본 언어로 내면화하는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일본이 말한 ‘독립’은 중립적 법적 용어가 아니라,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 언어 전략이었다. 일본은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조선을 청의 영향권에서 분리시키고, 조선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킨 다음, 최종적으로는 보호국화를 통한 통감정치, 통감정치를 통한 병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실제로 1876년 조선과 일본 간의 수호 조약 교섭 당시에는 일본의 식자층 전반에서 이미 만국공법과 국제법의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는 국제법이 일본 사회에서 하나의 ‘사회적 언어’이자 통치 언어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일본이 조약 문구를 통해 조선의 지위를 국제법적 언어로 규정하고 ‘독립’과 같은 개념을 전략적으로 사용한 것은, 서구 열강의 외교 관행을 피상적으로 모방한 결과라기보다 국제법을 자국의 외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논리로 활용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의 『朝鮮聞見備考(조선문견비고)』와 무쓰 무네미쓰의 『蹇蹇錄(견견록)』에서 사용된 ‘독립’ 개념은 이러한 전략적 성격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무쓰는 조선 문제를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名義上獨立國ト爲スモ、實際ニ於テハ我邦ニ於テ扶持スルノ義務アリ。」
(명義상 독립국으로 할지라도,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이를 부지할 의무가 있다.)

이는 일본이 말한 ‘독립’ 개념이 조선의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보호(protection)라는 명목 아래 조선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근거였음을 드러낸다. 일본 정부의 1894년 내정개혁 문건 또한 조선의 독립을 “정리, 지도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朝鮮国ノ独立ヲ保護シ、其内政ヲ整理セシムルハ帝国ノ責務ナリ。」
(조선국의 독립을 보호하고 그 내정을 정리하게 하는 것은 제국의 책임이다.)

이처럼 일본의 ‘독립’ 개념은 서구 국제법에서 가져온 언어였지만, 실제로 조선을 청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조선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며, 최종적으로 보호국화와 병합을 정당화하는 전략적 개념으로 작동하였다.

마관조약(1895) 제1항 역시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에 놓여 있었다. 마관조약 제1항은 청이 조선의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 지위를 승인하고, 조공·공헌 의례를 폐지한다는 취지로 조선의 지위를 선언적으로 규정하였다. 마관조약 제1항에 조선 문제가 배치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일본과 청이 조선의 지위를 둘러싼 전쟁의 의미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려 했던 결과였다.

일본 국내에서는 전쟁의 성과가 강화조약의 문구를 통해 명확히 가시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조선 문제가 애매하게 남을 경우, 청일전쟁의 정치적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의 지위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제1항에 배치하는 것은, 전쟁의 명분과 성과를 조약 차원에서 고정하려는 국내 정치적 압박의 반영이었다. 표면상 ‘독립’과 ‘자주’가 병기되었으나, 일본은 이를 “조선을 청의 속국에서 완전히 분리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국제법적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조선 문제에 개입할 명분을 선점하였다. 따라서 일본이 말한 ‘독립’은 중립적 법적 용어가 아니라,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 언어 전략이었다. 일본은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조선을 자신의 영향권으로 재편하려 했고, 이는 이후 통감정치와 병합의 명분이 되었다.

반면, 리징팡은 조선의 독립을 조약의 명시적 선언으로 규정하는데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는 조선 문제를 마관조약의 서두(제1항)에 배치할 경우, 청의 국제적 위상이 상징적으로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나 전황과 본국의 압박 속에서 이러한 우려를 끝까지 관철시키기는 어려웠고, 결국 조선 문제는 청의 기존 질서를 부정하는 형태로 조약문에 반영되었다.

일본 외무성이 정의한 독립국은 “他国ノ干渉ヲ受ケズ、自主的ニ条約ヲ締結スル能力ヲ有スル国家(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조약 체결 능력을 가진 국가)”였지만, 일본은 조선이 이 조건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지속적 개입을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수용 방식은 조선의 ‘자주’(사대, 군신 관계 속 자율성)와 일본의 ‘독립’(근대 국제법적 주권) 사이에 근본적 단절을 낳았다. 동일한 문구가 조약문에 사용되었음에도 양국의 해석이 전혀 달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을 독립국으로 만든다’는 국제법적 언어를 이용하여 조선-청 종주권 관계를 부정하고, 조선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최종적으로 식민지화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조선은 독립국(sovereign independent state)이다.”라는 표면적 명분을 통하여 조선을 청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일본 영향권으로 편입시키고자 하였고, “독립국 조선과 대등한 조약 체결”이라는 표면적 명분을 통하여 조약을 통해 조선의 군사, 재정, 외교에 단계적으로 개입하고자 하였으며, “조선의 독립 보장”이라는 표면적 명분을 통하여 보호국화를 통한 통감정치, 통감정치를 통한 병합의 명분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3. ‘독립국’ 규정의 전략적 기능

1876년 강화도조약에서 일본은 조선을 ‘자주지방’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근대 국제법적으로 해석, 활용하였다. 일본이 이해한 ‘자주’는 근대 국제법상의 ‘독립 (independence)’과 동일한 의미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완전한 대외주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었다. 일본은 조선이 청과의 종속 관계가 아니라 독립국임을 국제법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고 향후 일본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강화도조약 제1조 조항은 자주와 독립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의 충돌을 나타내고 있다. 사대질서 안의 외변은 그 내정과 외국 교제는 자주에 임한다는 것이 예의 기본 명제였다. 조선 측은 이런 의미에서 이 조항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자주’를 서양 국제법에서 말하는 독립과 동일한 의미로 번역, 해석하였다. 따라서, ‘독립국’ 조항은 표면적으로는 조선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조선을 중화질서에서 떼어내어 근대 국제법 체계의 ‘독립된 단위’로 재구성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였다.

더 넓게 보면, 1876년의 조일수호조규는 전통적인 사대교린체제를 근대국제법체계에 의하여 대체하려는 일본의 의도와, 가급적이면 양국관계를 (조선이 이해할 수 없는 규범언어였던)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틀 안에 묶어두려던 조선의 의도가 충돌하여 최종적인 결말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절충되고 있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일수호조규의 “위선 종전에 교정지해의 화근이던 제법규를 혁제하고 극력 관유홍통의 법규를 개확하여 쌍방의 영원한 안녕을 기한다”는 규정은 일본측에 의하여 장래에 있어 양국 관계를 근대국제법관계로 재편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양국관계의 근대국제법관계로의 변환을 웅변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 제2관의 규정이었다. 이 규정은 근대 유럽 국제법에서 일반화된 상주사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일본은 해석하였다. 또한 근대국제법의 차별적 본질을 이미 간주하고 있던 일본은 유럽열강으로부터 자신이 당하고 있던 차별을 주변 국가, 특히 조선에 강요함으로써 근대국제법적 실행에 자신도 참여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양국 공히 다양한 국제법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고 나름대로 구체적인 국제법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은 조일수호조규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등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조항들에서 드러난다. 예컨대 제12조는 해상 조난 선박 및 승무원 구조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양국 상선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관세 징수와 세율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제17조는 밀무역 방지와 단속에 관한 규정 등으로, 당시 동아시아에서 통용되던 관습 이상의 상당히 구체적인 국제법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이 국제법적 질서에 입각하여 조약을 체결하고 해석하고 행동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해 준다.

4. 국제법 언어를 통한 조선의 외교적 고립과 종속 심화

일본은 조선을 ‘독립국’으로 규정한 뒤, 이를 근거로 조선이 외교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주권국가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는 ‘독립국이라면 스스로 외교를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통해, 조선이 청을 외교적 후견자로 삼거나 기대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반면, 조선은 중화질서적 의미의 ‘자주’에 머물렀기 때문에, 근대 국제법 체계의 규범—특히 대등 조약 체결, 치외법권, 조세 회피, 외교 관할권 등—을 전통 질서의 관행 속에서 해석한 결과, 불리한 조약을 잇달아 체결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조선을 근대적 외교 모델에 미숙한 국가로 규정하며 개입의 정당성을 강화했다.

조일수호조규 제10관에 규정된 영사재판권은 오늘날 기준으로는 불평등성이 큰 영사재판권 조항이었지만, 당시 조선은 이를 근대 국제법적 ‘치외법권’이라기보다 기존 교린 관행(속인주의적 처리 관행)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면서 협상, 수용의 문턱이 낮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이 단순히 국제법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해당 조항을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관행 속에서 이해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책봉·교린체제에서는 개인의 형사관할권이 기본적으로 속인주의 원리에 따라 행사되었으며, 특히 조일관계에서는 속인주의적 처리 관행이 작동한 측면이 있었고, 조선은 이를 바탕으로 제10관을 근대적 치외법권이라기보다 관행의 제도화로 축소 해석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조선은 제10관 영사재판권 조항을 근대 국제법적 불평등 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관행의 연장선에서 수용 가능한 조항으로 판단하였다.

즉, 조선은 이 조항을 일본이 의도한 ‘근대적 국제법 체제의 제도적 장치’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예교 질서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허용되어 온 ‘관행적 예외 조치’ 정도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은 제10관을 근대 국제법상의 영사재판권, 즉 자국민에 대한 외국 사법권의 부정으로 해석한 반면, 조선은 이를 단순히 관습적으로 인정된 속인주의적 재판 방식으로 이해하였다.

바로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조약 자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조선은 조일수호조규를 여전히 전통적 의미의 ‘교린적 화친 협정’, 즉 예교 관계의 조정 행위로 인식했으나, 일본은 이 조약을 근대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된 법적 계약’으로 해석하였다. 조선은 조약 문구를 의례적 수사로 이해했고, 일본은 이를 국제법 질서의 구속력 있는 법적 언어로 이해한 것이다.

결국, 동일한 조약문을 두고도 조선은 예의의 언어로, 일본은 법의 언어로 해석한 것이다. 이 개념적·체계적 해석 차이가 바로 ‘자주’와 ‘독립’이라는 용어의 충돌을 낳았고, 나아가 전통 질서와 근대 국제법 체계의 구조적 단절을 발생시킨 근본 원인이었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두 사건을 거치면서 일본은 1880년의 조선 정책으로 다시 회귀하였다. 중국과 직접적인 정치 대립은 회피하고 간접적인 경제, 문화 침투에 주력한다는 정책 노선으로 복귀하였다. 1882년 10월 이와쿠라 도모미의 의견서, 그리고 1885년 1월 이노우에 가오루가 서울을 떠나면서 곤도 마스키 대리공사에게 건네 준 훈

령이 이런 정책을 잘 말해 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의 종속관계는 더욱 심화되었다. 기왕의 종속관계는 전통적인 유교권 질서의 예에 입각한 주종관계인 데 반하여, 임오군란 이후 중국은 조선에 대하여 근대 국제법 질서에서 보는 종속국의 위치를 강요하였다. 장젠, 덩청슈, 장페이런 등은 이 기회에 조선을 동삼성에 편입시키자는 병합론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국제법 언어를 활용해 조선의 ‘전통적 자주’를 무력화하고, 조선을 새로운 법질서 속 고립된 단위로 재편하면서 개입·보호·병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제도화하였다.

III. 강화도조약(1876)과 ‘자주지방’ 해석의 분기

1. 조선이 이해한 ‘자주지방’ 해석: 천하질서 내부의 자율성

강화도조약 제1조는 “朝鮮國自主之邦，保有與日本國平等之權。”이라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문자 그대로 ‘조선은 자주지방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1876년 강화도조약 제1조의 “朝鮮國自主之邦”이라는 문구를 조선은 전통적 의미(천하질서 내부의 자율성 확인)로 받아들였다. 즉, 스스로를 중국 중심 질서의 일부로 보면서도 특정 국가에 예속되지 않는다는 화이질서 내부의 자주를 확인하는 조항 정도로 인식하였다. 조선에게 ‘자주지방’은 여전히 중화적 국제질서의 연장선에 놓인 개념이었으며, 이 조항이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를 재정의하거나 청과의 관계를 해체하는 국제법적 효과로까지는 전환해 이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의 독해에서 강화도조약 제1조는 ‘지위 변경의 선언’이라기보다 ‘기존 질서 안에서의 자율성 확인’에 가까웠고, 이 간극이 바로 일본의 후속 개입을 가능하게 한 해석의 틈이 되었다.

19세기 중엽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에서 보였듯, 조선의 ‘자주’는 국제법적 독립이 아니라 ‘종속 속의 자율’을 의미했다. 프랑스와 미국이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간주하고 조약 체결 시 청의 책임을 물으려 했을 때, 청은 “조선은 속국이지만 모든 국사는 자주”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속국-국사자주’ 논리를 외교적으로 활용하여 서구의 조약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런 사례는 조선이 사용한 ‘자주’가 근대적 주권과 구조적으로 다른 개념임을 보여준다.

또한, 조선은 조약 체결이라는 행위 자체를 ‘예교적 의례의 연장’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서양식 조약이 국가의 국제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간섭 범위를 설정한다는 점을 근대 국제법의 언어로 전환해 이해하기보다, 예교 질서의 연장선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강화도조약의 법적 효과가 전통 질서의 재해석으로 흡수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근관은 “1876년의 조일수호조규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단 조규 체결 당시의 동아시아에서 성립하고 있던 국제질서관의 관점에서 평가하려는 이해학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지적한다.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을

전통적인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분석·평가하면, 수호조규의 형식 및 내용은 1876년 이전 시기의 동아시아, 특히 한일 양국 간에 성립하고 있던 국제법적인 관행과 상당한 연속성(continuity)을 지니고 있었으며, 수호조규의 체결에 이르는 협상과정에서도 조선이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체면치레만 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때로는 방어적이고 때로는 적극적인 협상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문제와 pianometrics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도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1876년 조선-일본 조약 제1조에 규정된 ‘조선은 자주지방’이라는 표현은, 흔히 일본이 사대 질서를 일방적으로 부정하기 위해 삽입한 조항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 표현이 당대에 받아들여진 방식은 이러한 단순한 해석과는 거리가 있었다. 당시 조선은 이 조항을 근대 국제법상의 독립국 선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중화 질서 안에서 오랫동안 유지해 온 자신의 지위를 설명하는 언어로 이해하고 있었다. 즉 ‘자주지방’은 청의 속국이라는 전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외교적·행정적 자율성을 행사해 온 조선의 기존 정체성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러한 이해 방식 속에서 조선은 해당 조항을 적극적으로 거부할 이유를 느끼지 않았으며, 이는 일본이 염두에 두었던 근대 국제법적 독립 개념과는 서로 다른 차원의 수용이었다. 다시 말해 동일한 조약 문구가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상이한 의미로 해석되었고, 이 의미의 어긋남은 이후 조선의 지위를 둘러싼 갈등의 잠재적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선의 인식과 대응은 조일수호조규를 둘러싼 기존의 통설적 이해에 대해 재검토의 여지를 제공한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의 연구들은 이 조약을 일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된 불평등 조약으로만 이해하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조약 체결 과정에서 일본 측이 항상 적극적이거나 주도적이었던 것은 아니며, 오히려 조선 측이 자신이 이해하는 전통 질서의 언어 속에서 능동적으로 협상에 임했음을 실증하고 있다. 또한, 조일수호 체결 당시의 주된 쟁점은 양국 간의 정치적 평등성 확보였으며, 오늘날 흔히 지적되는 불평등성은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재구성된 평가라는 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이는 강화도조약 제1조의 ‘자주지방’ 규정이 당대 조선에게는 기존 질서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며, 조약을 둘러싼 의미 충돌이 필연적이었음을 시사한다.

2. 일본의 근대 국제법적 해석: ‘독립국’ 개념의 전략적 삽입

반면, 일본은 같은 조항을 근대 국제법상의 완전한 독립국 규정으로 해석하였다. 일본은 조약 제1조의 ‘자주지방’ 문구를 근대 국제법적으로 해석, 활용하여, 조선과 청의 종주권 관계를 해체하고 조선을 근대 국제법 질서로 끌어냄으로써 이후의 대륙정책·식민정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즉, 일본은 ‘자주지방’ 조항을 국제법적 지위 변환을 강제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무쓰 무네타미쓰는 청일전쟁 이후 체결된 마관조약에서 조선 문제를 핵심적인 정치적 선언으로 위치시키고자 했다. 조선이 청의 종속 관계에서 벗어났음을 조약 문구로 명시하는 것은, 일본이 수행한 전쟁의 성격과 목적을 국제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는 조선의 ‘독립’이 곧바로 자율적 정치역량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였고, 조약을 통해 청의 개입을 배제하는 수준에서 조선 문제를 정리하려는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접근은 전후 조선 문제를 일본의 영향권 안에서 관리하려는 외교 전략과 긴밀히 맞물려 있었다.

오카모토 다카시는 강화도조약을 “예전부터 내려온 교린 관계를 서구식 근대 조약 관계로 전환하려 한 시도”로 규정한다. 일본이 조선을 청의 속국이 아닌 대등한 국가로 규정한 이유는, 조선을 국제법상의 독립국으로 만들어 청의 종주권 주장을 차단하고 조선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합법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음의 조약 제1조이다.

“朝鮮國自主之邦、保有與日本國平等之權。”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 제1조, 1876년

여기서 일본이 강조한 ‘자주’와 ‘평등한 권리’는 전통적 의미의 자율성이 아니라, 근대 국제법적 의미의 대외적 불간섭권·조약 체결 능력 등을 포함하는 법적 지위를 의미했다. 즉, 일본에게 ‘자주지방’ 조항은 조선을 중화질서에서 떼어내어 새로운 법질서 속 개별 단위로 재배치하는 ‘국제법적 재구성’의 수단이었다.

3. 조약문 해석의 충돌: 동일한 문구, 다른 세계관

조선의 전통적 세계관과 일본의 근대적 국제법 인식은 강화도조약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동일한 조항을 두고도 조선은 “자주는 질서 내 자율성의 확인”, 일본은 ‘자주’를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고 조선을 독립국으로 규정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동일한 조항을 두고도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이후 조선·일본·청 삼각관계의 모든 외교적 갈등의 뿌리가 되었으며, 나아가 임오군란(1882), 갑신정변(1884), 청일전쟁(1894), 마관조약(1895)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개념적 충돌은 이후 국제법의 문법 속에서 재해석 및 재단되며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 제1항에서 하나의 ‘법적 결론’으로 확정되게 된다.

IV. 시모노세키조약(1895) 제1항과 ‘독립자주국’의 국제법화

시모노세키조약(마관조약, 1895)의 당사자는 일본 전권의 이토 히로부미와 무쓰 무네미쓰였으며, 청의 전권은 리홍장과 리징팡이었다. 시모노세키 조약(마관조약, 1895)의 제1항은 1876년 pianometrics도조약에서 시작된 ‘자주’와 ‘독립’ 개념의 충돌이 국제법적 문구로 ‘독립자주국’ 지위가 선언적으로 규정되는 장면이었다. 청일전쟁의 종전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이 조선의 지위를 가장 먼저 규정한 것은, 전쟁의 핵심 대상이 바로 조선의 법적·국제적 위치를 둘러싼 문제였음을 보여준다. 종전조약의 서두에 조선의 지위를 적시한 것은, 전쟁의 성격을 ‘영토/배상’ 이전에 ‘조선의 지위 재규정’으로 규정하는 상징적 장치이기도 했다.

중요한 점은 이 조항이 ‘조선이 앉아 있는 협상 테이블’에서 나온 문장이 아니라, 청과 일본이 조선의 지위를 ‘국제법 문구’로 재단해 확정된 문장이라는 데 있다. 즉, ‘충돌’의 직접 당사자는 (조선-일본만이 아니라) 청의 전권(리홍장, 리징팡)과 일본 전권(이토 히로부미, 무쓰 무네미쓰)이었고, 조선은 그 결과를 ‘수용당하는 위치’에 놓였다.

마관조약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문제를 조약의 첫 조항으로 배치하는 데 동의하였는데, 이는 조선의 지위를 둘러싼 문제가 청일전쟁의 핵심 쟁점이었음을 pianometrics조약의 문구로 고정하려는 의도와 맞닿아 있었다. 동시에 이는 이후에 이어지는 배상금 지급과 영토 할양과 같은 조항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법적 장치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승전 이후 일본 국내에서 제기되던 전쟁 성과의 명확한 가시화를 요구하는 여론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第一款 中國認明朝鮮國確為完全無缺之獨立自主國。故凡有虧損其獨立自主體制，即如該國向中國所修貢獻典禮等，嗣後全行廢絕。

“청국은 조선이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승인하고, 조선이 중국에 대하여 행하던 공헌의 전례 및 의식을 폐지한다.”

— 『근대한국외교문서』 제3권

리홍장은 조선이 더 이상 청의 종주권 아래에 있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선 문제를 마관조약의 첫 조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다. 그는 조선에 대한 명목상의 지위를 고수하기보다는, 이를 양보함으로써 배상금과 영토 할양 등 다른 조건을 완화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조선 문제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이미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한 결과였으며, 시모노세키조약 제1항은 이러한 현실 인식이 문구로 고정된 사례였다.

청이 말한 ‘자주’는 전통적인 책봉 체제 속의 자율성이었으며, 일본이 해석한 ‘독립’은 근대 국제법상의 완전한 주권국가였다. 일본은 이를 “조선을 청의 속국에서 완전히 분리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국제법적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조선 문제에 개입할 명분을 선점하였다.

오카모토 다카시는 이러한 일본의 ‘독립’ 개념에 대하여, “무쓰가 말한 ‘명실상부한 조선의 독립’은 조선의 자율성을 pianometrics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전쟁을 통해 종래의 ‘속국 자주’는 종식되었고,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보호하고 도우며 지지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 수단은 곧 일본 단독으로 추진한 조선 내정 개혁, 즉 갑오개혁이었다.”고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마관조약 제1항은 조선에게 있어서는 전통적 자주 개념의 해체, 청에게 있어서는 종주권 포기의 공식 선언, 그리고 일본에게 있어서는 조선 개입의 국제법적 명분 확보라는 세 가지 변화를 동시에 완성한 조항이었다.

이는 1876년의 ‘자주(自主)’ → 1895년의 ‘독립(獨立)’ → 1905년 보호국화 → 1910년 병합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일관된 국제법 전략이 구조적으로 완성된 순간이었다.

V. 결론: 천하질서의 붕괴와 국제법 질서의 재편 속에서

19세기 후반의 조선-일본 관계는 단순한 양국 외교 갈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국제질서가 충돌한 역사적 장면이었다. 조선은 천하질서를, 일본은 근대 국제법 체제를 외교의 기본 언어로 삼았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자주’와 ‘독립’-조차 서로 다른 세계관 속에서 해석되었던 것이다. 강화도조약 제1조에서 조선이 ‘자주지방’으로 규정된 문구는 조선에게는 전통적 자율성의 확인이었지만, 일본에게는 조선-청 관계를 국제법적으로 재규정하고 조선을 국제법 체제 속 ‘독립국’ 단위로 위치시키려는 전략적 해석의 근거로 기능했다. 이러한 해석의 비대칭성은 조선 외교의 고립, 일본의 개입 정당화, 식민지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기반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독립국’으로 규정된 조선은 원칙상 외교를 ‘자기 책임’으로 떠안게 되었고, 일본은 그 책임 수행의 불가능/미숙을 근거로 ‘보호, 지도’의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논리를 구축할 수 있었다.

마관조약의 ‘독립자주국’ 조항은 일본의 제국적 언어전략의 완성판이었다. 무쓰 무네타미쓰는 『건진록』에서 “명의상 독립국으로 공인하되 일본이 이를 간접·직접적으로 부지(扶持)한다”고 적으며, 조선에 대한 ‘독립 보장’이 사실상 보호국화를 의미하는 비대칭적 종속 장치였음을 분명히 밝혔다. 오오이시 마사미 등 일부 논의에서 제기된 ‘보호’ 구상은, ‘독립’을 곧바로 자율성의 확대가 아니라 간섭과 관리의 구조로 전환시키는 일본의 국제법 상상력의 일면을 보여준다.

흔히 19세기 말의 흐름을 ‘독립이 자주를 이겼다’고 요약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개념 간의 단순한 승패라기보다 어떤 규범 언어가 외교 분쟁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채택되었는가의 문제였다. ‘자주’는 천하질서에서는 종속과 양립 가능한 자율성의 언어였던 반면, ‘독립’은 근대 국제법에서 종주권, 속국 관계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지위 규정의 언어였다.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 제1항이 “중국이 조선의 완전한 독립자주국임을 인정한다”는 방식으로 조선의 지위를 조약의 서두에서 선언한 것은, 조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제법의 문법이 지위 규정의 최종 언어로 채택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기를 ‘독립이 자주를 이긴 과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국제법 질서가 천하질서의 번역 규

칙을 압도하며 외교적 효력을 독점하게 된 과정으로 서술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김종학이 이 과정을 ‘자주-독립 개념의 충돌’로 규정한 것은, 당대의 외교 행위자들이 스스로 이를 충돌로 인식했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조약 문구가 서로 다른 규범 질서 위에서 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1차 문헌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김종학의 ‘충돌’ 규정은 특정 사건의 대립이 아니라, 서로 다른 규범 언어가 동일한 사안을 반복적으로 상이하게 서술하는 1차 문헌의 축적된 패턴에 근거한다. 청의 총리아문 문서에서는 조선이 “屬國”이면서도 “國事皆自主”인 존재로 설명되어, 종속과 자율의 병존이 자연스러운 질서로 전제된다. 반면 일본 외무성 문건과 무쓰 무네미쓰의 『蹇蹇錄』에서는 조선의 ‘독립’이 자율성의 확대가 아니라 “扶持·保護”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독립 개념이 곧 개입의 논리로 접속한다.

한편, 조선 관료층의 서계·상소·『홍범14조』 등에서는 ‘독립’이 청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단절하는 지위 선언이라기보다, 기존의 ‘자주’(자강·정통성) 개념을 근대적 언어로 재표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이처럼 동일한 조약 문구와 개념이 각기 다른 규범 질서 안에서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김종학이 말한 ‘자주-독립 개념의 충돌’을 성립시키는 1차 문헌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청의 총리아문은 조선을 “속국이지만 국사는 자주”라고 설명하며 종속과 자율의 병존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한 반면, 일본 외무성 문건과 무쓰 무네미쓰의 『건건록』에서는 ‘독립’을 보호와 개입의 전제로 이해하는 인식이 명확히 드러난다. 동시에 조선 관료층의 서계, 상소, 『홍범14조』 등에서는 ‘독립’이 기존의 ‘자주’를 대체하는 새로운 법적 지위라기보다, 전통적 자주 개념을 근대적 언어로 재표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이처럼 당사자들은 각기 자신의 질서 언어 안에서 일관되게 사고하고 있었으나, 그 언어들이 조약이라는 하나의 문서 안에서 중첩되면서 결과적으로 상호 번역 불가능한 의미 차이가 누적되었다. 김종학의 ‘충돌’이라는 규정은 바로 이 사후적으로 드러난 규범 언어 간 비대칭성과 그 정치적 효과를 개념화한 분석적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1876년의 ‘자주(自主)’ → 1895년의 ‘독립(獨立)’ → 1905년 보호국화 → 1910년 병합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일관된 국제법 전략이 구조적으로 완성된 순간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이 사용하는 ‘독립’ 언어를 그대로 동일시하기보다, 기존의 ‘자주’ 개념을 바탕으로 선택적으로 번역, 재해석하였다. 『홍범14조』 제1조는 그 대표적인 언어적 전환이다.

“청국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립한다.”(홍범14조 제1조, 번역)

이는 조선이 일본식 독립 개념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 ‘자주’ 개념을 근대적 국가 정체성으로 재구성한 결과였다. 김윤식 등의 상소에서도 “청의 덕화를 떠나 홀로 자립함은 시의가 아니요, 외세를 막음은 스스로의 자주에 달려 있다”는 식의 인식이 반복되는데, 이는 조선이 ‘독립’을 단절이나 고립이라기보다, 전통적 자주 개념과 결합된 정통성, 자강의 문제로 재의미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양국의 ‘자주-독립’ 인식 차이는 단순한 번역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질서 언어를 사용하는 두 세계관의 구조적 단절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절은 단순히 한·일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 동아시아 질서와 근대 유럽 국제법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질서 간 번역의 실패’였다는 점에서 보편적 의미를 갖는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역사적 경험과 규범 구조가 다르면, 그 언어는 상호 이해의 매개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역사 연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재현하는 작업이 아니다. E. H. Carr가 말했듯이,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과거에 대한 해석은 현재 우리가 처한 국제질서와 문제의식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이번 답사에서 방문한 공간들—데지마, 한일교류박물관, 글로버가든, 시모노세키, 모지코—은 이러한 국제질서 전환이 추상적 개념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공간과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데지마는 서양 지식과 국제법이 처음으로 일본에 유입된 관문이었고, 글로버가든과 조약항은 일본이 스스로를 ‘조약 체결 능력을 가진 근대국가’로 연출해 보인 무대였다. 시모노세키와 모지코는 일본이 열강과 대등한 주체를 자처하며 새로운 국제법 언어를 실전에서 구사한 pianometrics였다. 이러한 공간적 맥락 속에서 일본은 국제법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대외 팽창과 제국 형성의 전략 언어로 변환해 나갔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한국에게도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외교 언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19세기 조선이 국제법상의 ‘독립’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조약 문구를 수용했던 경험은, 오늘날 조약 문구, 공동성명, 그리고 국제 규범의 단어 하나하나가 갖는 법적, 정치적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다. 특히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도 ‘전략적 문구 구성(strategic wording)’을 통해 사실상의 지위 변화나 해석의 여지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어를 둘러싼 협상력은 군사력, 경제력 못지않게 중요한 전략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국제질서의 변화를 감지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할 때, 가장 큰 비용을 치르는 주체는 중간 규모의 국가라는 점이다. 조선이 천하질서의 붕괴와 국제법 질서의 부상을 끝까지 ‘내부 문제’로만 보던 사이, 일본은 새로운 질서를 학습하고 이를 활용해 조선 정책을 재설계했다. 오늘날의 한국 또한 미중 경쟁과 인도, 태평양 질서 재편,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등 구조 변화 속에 놓여 있다. 질서 전환기에 기존 규범이 약화되고 새로운 규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인식의 지체와 오판은 곧 외교적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국제법을 수동적으로 적용받는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할 줄 아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국제법을 ‘객관적 규범’으로 간주함과 동시에, 이를 자신의 이해에 맞게 번역하고 재구성해 조선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전략 언어로 사용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한국은 WTO, FTA, 해양법, 인권·안보 규범, 투자분쟁(ISDS) 등 다양한 무대에서 국제법을 단지 수동적으로 따르는 규칙이 아니

라, 자국의 이익과 규범적 지향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이는 과거의 조선과 달리, 법 언어의 해석과 적용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곧 구조적 열세를 상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동아시아 외교사에서 반복되는 ‘개념의 비대칭’ 문제는 현재형의 과제라는 점이다. 강화도조약의 ‘자주-독립’ 충돌이 그랬듯, 오늘날에도 한국·일본·중국은 “질서(order)”, “안정(stability)”, “자율성(autonomy)”, “개방성(openness)” 등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각국의 역사적 경험과 전략적 맥락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표현은 같지만 지시하는 세계가 다른 이 개념의 비대칭성은 때로는 오해와 갈등을 증폭시키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 과거의 ‘질서 간 번역 실패’를 성찰하는 일은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협력 규범과 신뢰 형성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데도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과거의 질서 충돌을 면밀히 분석하는 일은 단순한 역사적 회고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한국 외교 전략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하영선·남궁곤, 『변환의 세계정치』에서 강조되었던 ‘지식력’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몇 주간의 사랑방 수업들을 통하여 역사 연구는 과거의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과거의 다양한 선택지와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본 답사보고서와 앞으로 있을 나의 국제정치학, 그리고 국제법 공부의 결합될 수 있는 지점이라 생각하였고, 본 답사보고서는 그러한 시도가 반영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답사를 통하여 동아시아 근대사의 전환이 문헌 속의 추상적인 변화가 아닌, 실제 공간과 외교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조약 속 문구들과 행동으로 드러난 역사적 과정이었음을 깨닫고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 한국의 외교 전략·국제법적 대응·세계관 형성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조선이 읽지 못했던 국제질서의 변화, 일본이 능숙하게 활용했던 국제법의 언어, 그리고 두 세계관의 충돌이 남긴 흔적은 오늘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재정의하고, 보다 능동적인 외교 전략과 법적 대응을 모색하는 데 필수적인 역사적 자원으로 쓰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답사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역사의 현장을 다시 밟으며 그 공간에 새겨진 언어와 권력의 흔적을 현재의 한국과 연결해 보려는 나의 작은 시도였다.

【참고문헌】

-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강화도조약), 1876.
- 『마관조약(馬關條約)』(시모노세키조약), 1895.
- 『홍범14조』, 1894.
- 『고종실록』. 국사편찬위원회 편.
- 일본 외무성. 『조선문견비고(朝鮮聞見備考)』. 메이지기 일본 외구성 편찬 외교문서 『근대한국외교문서』 제3권. 국사편찬위원회 편.
- 무쓰 무네타카, 1895. 『건건록(蹇蹇錄)』.
- 김윤식·박영효 상소문(『고종실록』 등 수록).
- 김종학. 2014. 『을병일기』. 국립중앙박물관.
- 한일관계연구소. 2017. 『조일수호조규: 근대의 의미를 묻다』. 청아출판사.
- 신현, 김종학. 2010. 『심행일기: 조선이 기록한 강화도조약』. 푸른역사.
- Carr, Edward Hallett. 1961. 『What Is History?』. Panmun Book Co.
- 하영선, 남궁곤. 2012. 『변환의 세계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 Wheaton, Henry. 1916.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국제법원리)』. London: Sampson Low, Son & Co.
- 김용구. 1994. 『만국공법』. 서울: 나남.
- 김용구. 1996. 『세계관 충돌과 한말외교사』. 서울: 나남.
- 김용구. 2004. 『세계외교사』. 서울: 나남.
- 오카모토 다카시. 2014. 『미완의 기획: 조선의 독립을 둘러싼 동아시아 근대』. 소와당.
- 강상규. 2007.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제국 일본”. 『논형』.
- 이근관. 2004. “조일수호조규(1876)의 국제법적 재평가”. 『서울국제법연구 11권 1호』

17세기 네덜란드 상인과 일본 도쿠가와 막부: 공포의 거래

권성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I. 서론

1. 문제의 제기

17세기 네덜란드 상인과 일본 도쿠가와 막부의 관계는 근대 초기 동아시아 외교사의 가히 흥미로운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609년 동인도회사(VOC, 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가 히라도(平戸)에 처음 진출한 이래 네덜란드인들은 일본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유해왔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의 해석들이 존재하는 데 한편에서는 네덜란드의 ‘종속화(domestication)’를 강조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의 절대적 우위’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들 모두 일본이 네덜란드에게 가지고 있던 ‘필요성’과 ‘공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데지마 일기(Deshima Diaries 1633-1660)를 검토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특히 일지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생(生)실크 수입량 감소에 대한 일본 관리의 지적’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17세기 네덜란드 상인들과 일본 도쿠가와 막부의 관계는 단순한 ‘위계에 의한 종속화’도 아니고 일본의 ‘절대적 우위’도 아니며 오히려 양측의 상호 공포와 필요성이 제도적으로 고착화된 ‘상호의존성의 제도화’의 사례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17세기 네덜란드 상인들과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네 가지 핵심질문들을 제기한다. 우선,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의 공간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자국에 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깥으로 향하는” 확장주의를 추동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현존하는 연구들은 네덜란드의 해양 제국 건설을 역사적 필연으로 다루면서도,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상인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인식-그들이 매일 어떤 지평 속에서 판단을 내렸으며 어떤 생각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네덜란드 상인들이 쇼군을 “천황폐하(Your Majesty Emperor)”라고 부르며 스스로 신하를 자처한 이유는 무엇이며 왜 이러한 호칭이 VOC의 공식 문서뿐만이 아니라 사적인 일기에까지 관철되었는가 하는 질문이다. 세 번째는 일본은 왜 쇄국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계속해서 외국 상인들을 맞이했으며 더욱이 당시 세계 최대의 은 생산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밖으로 향할 생각은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이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았는

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아담 클로우(Adam Clulow)의 *The Company and the Shogun: The Dutch encounter with Tokugawa Japan*(2014)은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이하 VOC)와 일본 도쿠가와 막부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네덜란드는 막부에 정치적으로 ‘종속화’ 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일본 내 유일한 유럽 상인으로서 독점권을 유지했다고 주장한다. 클로우는 이 주장을 세 단계를 통해서 구체화한다. 우선 1627년 누이츠(Pieter Nuyts) 대사 사건을 네덜란드의 첫 번째 ‘전략적 후퇴(strategic retreat)’로 보았다. 누이츠 대사는 에도에서 쇼군을 알현을 시도하다 이노우에(井上政重)의 강력한 저항을 만났고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단계는 1638년 시마바라 반란((井上政重)이었다. 1637년 12월 17일부터 1638년 4월 15일까지 규슈 남부에서 일어난 일본 에도 시대 최대 규모의 대규모 농민 봉기를 마주한 도쿠가와 막부는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인들에게 포르투갈 함대를 공격하도록 명령했고 네덜란드인들은 이에 응하여 포르투갈 함대를 향하여 대포로 공격을 가했다. 클로우는 이를 네덜란드의 자발적 군사협력으로 보았으며 VOC가 “일본의 도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세 번째 단계로는 1641년 VOC 상관의 히라도에서 데지마(出島)로의 강제이전을 들었다. 클로우는 상관의 강제이전이 네덜란드가 일본의 ‘외교·상업 파트너’에서 ‘통제 대상’이 되었음을 상징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종속화(domestication)의 과정에서 VOC는 경제적으로 더욱 강해졌다고 주장한다. 1639년 포르투갈이 일본에서 추방되고 난 이후에 네덜란드는 일본과 중국 간의 무역을 중개하는 유일한 유럽 세력이 되었으며 독점을 통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클로우는 이를 “길들여진 독점자(The Domesticated Monopolist)”라고 표현했다.

한편 론 토비(Ron Toby)는 *State and Diplomacy in Early Modern Japan*(1991)에서 완전히 다른 각도의 해석을 제시한다. 토비에 따르면 17세기 도쿠가와 일본은 ‘일본 중심의 외교 질서’를 구축했으며 네덜란드를 포함한 일본과 교역하던 모든 국가들은 이 질서의 일부분이었다. 토비는 우선 쇄국 정책이 일본의 완전한 자발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도쿠가와 막부에게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위협적이었던 이유는 그들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를 전파했기 때문이며 막부는 기독교 배제를 결정한 이후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추방했다. 토비는 일본에서의 네덜란드의 생존 이유를 ‘유용성’에서 찾았다.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의 원천, 은 수출의 매개체, 중국과의 무역 중개체로서 네덜란드인들의 일본 거류는 일본의 ‘필요’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토비의 주장이다. 토비는 또한 일본의 서양에 대한 절대적인 우위를 주장한다. 네덜란드인들이 감옥과 같은 숙소에 갇혀 자유로운 이동조차 금지됨과, 쇼군 앞에서 절을 해야 했던 것이 일본의 절대적 권력을 보여준다고 주장한 것이다.

일본 학자 시미즈 유코(清水有子, Shimizu Yuko)는 近世日本とルソン-「鎖国」形成史再考(근세 일본과 루손-「쇄국」 형성사 재고)에서 근세 초기 대외 관계를 기독교 전파와 이문화 교류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시미즈의 접근은 클로우나 토비는 다르게 단순히 "쇄국" 이후의 관계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쇄국 정책 형성 과정 자체를 일본의 정치적 의사결정과 스페인, 포르투갈의 제국적 확장 논리의 상호작용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쇄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후대 역사가들의 해석임을 지적하며 실제로는 도쿠가와 막부가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외교적 파트너들을 선별하고 통제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네덜란드인들의 시각이나 VOC의 행적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클로우는 네덜란드의 정치적 종속과 경제적 독점의 동시성을 입증했고 토비는 일보의 주체성과 절대적 우위를 주장했지만 두 주장 모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일본의 '네덜란드의 필요성'의 구체적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클로우는 '왜 일본이 네덜란드를 내쫓지 않고 포용했는지'를 설명하지만, 이는 표면적 설명에 불과하다. 토비는 일본의 '선택'을 강조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설명은 아니다. 데지마 일기에는 더 복잡한 상황이 제시된다. 또한, 두 저자 모두 데지마 일기에 기록된 일본 관료들의 '불안감(Anxiety)'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 데지마 일기에서 반복되는 관료들의 '왜 실크(비단)가 적게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단순히 협박이라고 치부할 수 없으며 일본 관료들의 절박한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클로우는 또한 네덜란드의 공포를 강조했다. 일본의 불확실한 권력과 예측 불가능한 처벌, 그리고 자유의 제약 등을 제시하면서 네덜란드인들이 느꼈을 공포를 해석했다. 하지만 일본도 일정 부분 '공포'의 감정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1644년의 "If the Dutch were to leave, the economic situation would become unbearable"이라는 문구를 보면 양방향의 공포가 만드는 관계의 구조를 두 사람이 충분히 포착했다고 볼 수 없다.

본 연구는 위에 언급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데지마 일기를 분석함으로써 일본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실크 공급 문제, 가격 상승, 그리고 반복되는 질문들의 톤과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이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절박한 불안감'의 표현임을 보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호프라이스(hofreis)¹⁾와 에도 조현식²⁾이라는 의례가 갖는 이중의 기능을 분석한다. 표면적으로 이 두 의례들은 클로우가 말하듯이 네덜란드의 '종속화'를 상징하는 의례지만, 동시에 다른 유럽인들을 배제하는 정치적 기능도 수행했다. 마지막으로 양방향의 공포가 만드는 '상호적 의존성의 제도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클로우의 '종속화'와 토비의 '일본의 절대적 우위' 과는 다른 차원의 분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VOC 팩토리장이 정기적으로 에도의 쇼군 궁전을 방문하는 의례적 여행

2) 호프라이스 중 에도에서 쇼군에게 예를 갖춰 나아가는 의식(경복, 궁전 입장, 큰 절, 선물 제시, 퇴장)

II. 네덜란드의 공간인식과 확장: 국가-기업 결합체의 논리

17세기 초 세계 지도에서 네덜란드를 보면 북서유럽의 저지대에 위치함을 볼 수 있다. 라인-마스 강의 삼각주 지역(Rhein-Meuse Delta)³⁾에 자리잡은 네덜란드는 광범위한 습지와 운하, 제방으로 이루어져 해상 활동과 수로 무역에 최적화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⁴⁾ 눈여겨 봐야 할 점은 네덜란드가 해안 국가인 동시에 유럽 대륙과 연결된 육지 기반의 국가였다는 점이다. 육지에 둔 기반은 유럽 대륙의 경제 네트워크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해안 국가라는 점은 대서양과 북해를 통한 해양 확장의 기반을 제공해주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해양 무역과 대륙 무역의 중개 역할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고립된 섬 국가인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출발점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초 세계지도를 살펴보면 네덜란드와 일본의 지리적 조건은 일견 유사해보인다. 둘 다 해상 활동에 적합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었으며, 강력한 해군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8세기에 이르면 네덜란드는 유럽 대륙의 경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세계 해상 무역의 중심이 되었지만,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의 정책에 따라 자신들의 섬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⁵⁾

왜 비슷한 지리적 조건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행로가 이렇게 달랐을까? 이에 대한 답을 단순히 ‘무역’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무역은 상인이 있는 사회라면 기본이며 일본 또한 제한적이지만 무역을 했다. 네덜란드의 적극적인 대외팽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인들의 공간 인식과 그 토대가 된 정치·경제적 구조, 전쟁이 야기한 독특한 역사적 조건들을 알아야 한다.⁶⁾ 네덜란드의 대외팽창은 지리적 우월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유럽 대륙에 기반을 둔 정치경제적 구조와 종교 전쟁의 압박 속에서 생겨난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이다.

1. 80년 전쟁과 바다로의 도망

네덜란드의 대외팽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568년부터 시작된 80년 전쟁(Eighty Years' War)⁷⁾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이해해야 한다. 80년 전쟁은 단순한 종교 전쟁이나 독립 전쟁이 아니라 갈수록 중앙화되어 가는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이자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창출한 사건이었다.

3) 통상적으로는 스헬더(Scheldt) 강까지 포함하여 Rhine-Meuse-Scheldt delta라고 표현함.

4) Encyclopedia Britannica. n.c. "Netherlands."

<https://www.britannica.com/place/Netherlands> (검색일: 2025.12.05.)

5) Tonio Andrade, *How Taiwan Became Chinese: Dutch, Spanish, and Han Colonization in the Seventeenth Centur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도쿠가와 막부는 17세기 중반 이후 쇄국(鎖國) 정책을 실시하여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극도로 제한했으며, 1639년에는 포르투갈을 추방하고 네덜란드 또한 나가사키의 데지마 섬안에 묶이게 된다.

6) Israel, Jonathan. 1995. *The Dutch Republic: Its Rise, Greatness, and Fall, 1477-1806*. Oxford University Press

7) 네덜란드 반란(Dutch Revolt)라고도 한다.

1556년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네덜란드를 지배하게 되면서 저지대의 도시들과 지방 귀족들은 중앙화된 왕권의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⁸⁾ 필립 2세(Philip II)는 스페인 절대 왕권의 모델을 네덜란드에 적용하려 했다. 높은 세금, 종교적 획일성의 추구, 지역 자치권의 박탈 등이 네덜란드의 도시들과 지방 귀족들의 저항을 야기했으며 이는 1566년 성상 파괴 운동(Beeldenstorm)을 통해 표출되었다.⁹⁾ 2년 후인 1568년에는 오렌지 공작 윌리엄(William the Silent, 윌리엄 오브 오렌지)의 지도 아래 무장 반란이 시작되었다.¹⁰⁾ 무장반란의 초기 형세는 좋지 않았다. 스페인 파르마 공작(Duke of Parma)의 군대는 반란군을 압도했으며 1585년에 이르면 스페인군이 남부 네덜란드를 거의 모두 수복했다.¹¹⁾ 브뤼셀(Brussels), 앤트워프(Antwerp) 같은 주요 도시들이 스페인의 수중으로 돌아갔다. 북부의 7개 연합주들(Seven United Provinces)이 저항하고 있었지만 형세가 좋지는 못했다.¹²⁾ 이러한 상황에서 북부 네덜란드가 독립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다’ 덕분이었다. 스페인군은 육상 작전에서는 네덜란드보다 뛰어났지만 해양 전력에서만은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능가했다.

결국 스페인 제국이 네덜란드를 완전히 정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네덜란드가 "바다를 통해 도망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¹³⁾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Spanish Armada)가 잉글랜드에 의해 격파되었을 때 네덜란드의 독립은 사실상 확정되었다. 무적함대의 패퇴는 단순히 스페인의 군사력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바다가 “도망의 공간”인 동시에 “권력 투영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1581년에는 네덜란드의 도시들이 스페인 왕 필립 2세에게 충성을 거부하는 "단절 포고(Act of Abjuration)"¹⁴⁾를 발표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성명을 넘어서 네덜란드가 더 이상 스페인 제국의 '일부'가 아니라는 네덜란드는 이제 독립적인 공화국이라는 공간적 재정의였다. 독립이라는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는 못했다. 스페인은 계속해서 네덜란드 남부를 장악한 상황이었고, 북부의 독립 공화국 또한 멸망의 위협이 상존하는 시기를 겪었다. 이는 12년 휴전(Twelve Years' Truce, 1609-1621)이 체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8) Israel, Jonathan. 1995. *The Dutch Republic: Its Rise, Greatness, and Fall, 1477-1806*. Oxford University Press.

9) Discovering Belgium. 2020. "1566 Iconoclasm - When Belgium's Churches Were Attacked." <https://www.discoveringbelgium.com/1566-iconoclasm/> (검색일: 2025년 12월 10일)

10) Motley, John Lothrop. 1855. *The Rise of the Dutch Republic: A History. Vol. 1*. New York: Harper & Brothers.

11) Israel, Jonathan. 1995. *The Dutch Republic: Its Rise, Greatness, and Fall, 1477-1806*. Oxford University Press.

12) *ibid.*

13) Van Duzer, Chet. 2013. *Sea Monsters on Medieval and Renaissance Maps*. London: British Library.

14) Act of Abjuration(Plakkaat van Verlatinge)

2. 국가 구조의 특수성¹⁵⁾

네덜란드 공화국은 1581년에 독립을 선언했지만 강력한 중앙 정부를 가진 영토 국가가 아니라 느슨한 연방(confederation)에 불과했다. 일곱 개의 주-홀란드(Holland), 젤란드(Zeeland), 우트레흐트(Utrecht), 겔더란드(Gelderland), 오버이셀(Overijssel), 흐로닝언(Groningen), 프리슬란드(Friesland)-가 각각의 자치권을 지니고 있었으며 각 주들의 모임인 전국 의회(States General)가 연방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전국 의회의 권한 또한 강하지 못했으며 각 주는 언제든지 기존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동시에 전국 의회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 공화국이 1581년 독립을 선언했을 때는 "강력한 중앙 정부를 가진 영토 국가"가 아닌 느슨한 연방(confederation)이었다. 일곱 개의 주(Seven United Provinces)가 각각의 자치권을 유지했고, 각 주 내의 도시들도 상당한 자치권을 보유했다. 각 주는 자신들의 주(States)를 가지고 있었고, 이 주들의 모임인 전국 의회(States General, 연합주 정부)가 연방 차원의 결정을 했다. 그러나 이 국가 기구도 매우 약했다. 각 주는 언제든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었고, 자신의 동의 없이 전국 의회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국가 구조의 핵심은 '주'가 아니라 '도시(cities)'들에 있었다. 네덜란드 공화국은 도시국가들의 연합이었으며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위트레흐트 같은 주요 도시들이 실제의 권력을 행사했다. 이 도시들은 상인과 시민들로 구성된 레전트(regents, 통치자들)라는 자치 조직이 운영했으며 레전트는 귀족이 아니었다. 유럽의 여타 국가들의 권력이 귀족들에게 있었음을 고려할 때 네덜란드 공화국은 '공화국'이라는 문자 그대로 상인들의 공화국이었다.

이러한 정치 구조는 해외 확장에서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유리했다. 도시들로서는 자신들의 상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영토 확장을 꾀하는 왕권 또한 부재했으므로 각 도시의 레전트들은 상인들의 무역 확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도시 기반의 권력 구조가 더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다. 중앙화된 국가에서는 왕의 승인을 포함한 수많은 관료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네덜란드에서는 암스테르담 시의회가 직접 선박 건조 자금을 승인하고 직접 상인들과 협상할 수 있었다. 이는 중앙화된 국가들에 비해 효율성 측면에서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또한 네덜란드 공화국 내부의 도시들이 여러 개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 도시의 원정이 실패할 시 다른 도시에서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는 위험 분산 또한 가능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시도가 가능했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포르투갈처럼 하나의 중앙집중화된 전략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으며 여러 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었다.

15) 네덜란드의 국가 구조의 특수성에 대한 자료들은 Israel, Jonathan. 1995. *The Dutch Republic: Its Rise, Greatness, and Fall 1477-1806*. Oxford: Clarendon Press.를 참고

3. 새로운 공간인식

네덜란드인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바다를 정복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했다는 데 있다. 오늘날에야 이러한 인식이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16세기만 하더라도 이는 혁신적인 사고방식이었다. 당시 유럽인들은 바다를 공포의 공간으로 인식했다.¹⁶⁾ 유럽인들에게 바다는 신의 영역이기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이었으며 포르투갈인들조차 초기 항해에서는 해안을 따라 천천히 나아갔다.¹⁷⁾ 하지만 네덜란드인들은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걸쳐 바다를 통제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했으며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항해법(navigation)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자리하고 있었다.¹⁸⁾ 항해 지침서(rutters)와 파일럿(pilots)이라고 불린 전문 항해사들의 등장도 항해법의 발전을 추동했다.¹⁹⁾ 지도 제작(cartography)에서의 혁신 또한 이 시기에 일어났다. 야콥 판 데벤터(Jacob van Deventer)와 같은 인물들이 새로운 지도 제작 방식을 활용하여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데벤터는 새로운 삼각측량(triangulation) 기술을 사용하여 정확한 거리를 보여주어 미지의 공간에 대한 네덜란드인들의 두려움을 감소시켰다.²⁰⁾

4. VOC의 탄생: 국가와 기업의 결합

VOC는 1602년 네덜란드 공화국에 의해 설립된 합작 회사로서 단순한 상업회사가 아니었다.²¹⁾ 1602년 3월 20일에 전국 의회가 승인한 VOC 헌장을 보면 민간 회사라고 간주하기에는 지나친 권한들—군대를 유지할 권리, 지역 통치자들과 조약을 맺을 권리, 21년간의 독점 무역권 등—이 부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질적인 회사의 설립은 이전에 존재하던 여러 동인도 무역 회사들을 통합한 결과였다.²²⁾ 1590년대부터 네덜란드의 여러 도시에서 상인들이 포르투갈의 독점에 대항하기 위해 동인도 원정을 시작했으며 각각의 도시에서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다. 하지만 여러 네덜란드 회사들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낮추어 이윤 감소로 이어진 동시에 포르투갈의

16) Van Duzer, Chet. 2013. *Sea Monsters on Medieval and Renaissance Maps*. London: British Library.

17) Diffie, Bailey W. and Winius, George D. 1977. *Foundations of the Portuguese Empire, 1415-1580*.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 1-50.

18) Campbell, Tony. 2023. "Mediterranean portolan charts: their origin in the mental..." Map History Archives. <https://www.maphistory.info/PortolanOriginsTEXT.html> (검색일: 2025년 12월 10일).

19) Matteo Valleriani, ed. 2017. *The Structures of Practical Knowledge*. Springer, pp. 1-50.

20) Harley, J. B., and David Woodward, eds. 2007. *The History of Cartography, Volume 3: Cartography in the European Renaissa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1) "Charter of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VOC)" (States General of the United Netherlands, March 20, 1602).

22) EBSCO Research Starters. 2018. "Dutch East India Company is Founded." [https://www.google.com/search?q=https://www.ebsco.com/research-starters/history/dutch-east-india-company-founded\(%EA%B2%80%EC%83%89%EC%9D%BC\)\(https://www.google.com/search?q=https://www.ebsco.com/research-starters/history/dutch-east-india-company-founded\(%EA%B2%80%EC%83%89%EC%9D%BC\)\)](https://www.google.com/search?q=https://www.ebsco.com/research-starters/history/dutch-east-india-company-founded(%EA%B2%80%EC%83%89%EC%9D%BC)(https://www.google.com/search?q=https://www.ebsco.com/research-starters/history/dutch-east-india-company-founded(%EA%B2%80%EC%83%89%EC%9D%BC))) (검색일: 2025년 12월 10일)

해군력에 대항하기 또한 어려웠다.²³⁾ 이에 네덜란드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의회는 이들을 통합하여 VOC라는 단일 조직을 만들었다. 포르투갈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규모의 회사가 필요했기에 독점권 또한 허용되었다.²⁴⁾

VOC는 단순한 상업회사라고 할 수 없다. VOC는 국가-기업 결합체(Company-State)²⁵⁾라고 불러야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VOC는 상업회사였기에 목표 자체는 동인도에서 향신료, 면화, 비단 등을 사서 유럽에 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이었다. 또한, 군사조직으로서 군함을 소유했고, 군인들을 고용했으며, 행정기구로써 정복한 영토에서 법을 만들고 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식민 개척자였기에 바타비아(Batavia)²⁶⁾, 암본(Ambon)²⁷⁾, 반다(Banda)²⁸⁾와 같은 도시들을 지속적으로 건설했다. 이러한 기능들이 단일 조직 내에서 통합되었으며 전국 의회는 VOC 활동을 통제하기보다는 지원했다. VOC가 더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무역을 장악할수록 네덜란드가 얻을 수 있는 이윤도 커졌기 때문이다.²⁹⁾

이러한 국가-기업 결합체라는 구조는 네덜란드 공화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중앙 권력이 지역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을 경계한 네덜란드는 강력한 중앙 군부 조직을 원치 않았기에 VOC에 식민지 건설의 업무를 위임했다고 결국 상인회사가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³⁰⁾

VOC의 이러한 성격은 네덜란드인들의 공간인식과 결합하여 대외팽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향상된 항해술과 지도 기술은 네덜란드가 바다를 정복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하게끔 했고 네덜란드는 바다를 무한한 가능성의 장(field)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한 번 공간이 정복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정복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VOC가 이윤 최대화라는 목적을 가지고서 식민지를 정복하고 그 과정에서 대량학살과 노예무역의 문제들이 발생한 것은 현대의 경제학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비용-편익 분석’에 따른 의사결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네덜란드인들의 공간인식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섬나라에 머물면서 국내 안정을 유지한 대신에 외국으로부터의 억압과 폭력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울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19세기의 서구 제국주의의 압력에 시달리게 되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결국에 세계로 나가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23) ibid.

24) ibid.

25) ‘Company-State’의 개념은 단순히 ‘국가처럼(state-like)’ 혹은 ‘준국가적(quasi-governmental)’인 조직이 아니라 근대 초기의 맥락에서 실제로 주권을 행사한 정치체(polity)이자 기업 주권자(corporate sovereign)를 의미함.; Stern, Philip J. 2011. *The Company State: Corporate Sovereignty and the Early Modern Foundations of the British Empire in India*. Oxford University Press.

26) 현재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의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명칭.

27) 말루쿠 제도의 중심지로서 향신료(정향) 무역의 핵심 요충지였음.

28) 세계에서 유일하게 육두구(Nutmeg)가 생산되던 곳.

29) ibid.

30) Israel, Jonathan I. 1995. *The Dutch Republic: Its Rise, Greatness, and Fall, 1477-1806*. Oxford: Clarendon Press.

Ⅲ. 공포의 상호 함정: 비대칭성의 논증 너머

클로우는 *The Company and the Shogun*에서 17세기 네덜란드와 일본 간의 관계를 “조용한 협박(silent coercion)”으로 규정했다.³¹⁾ 클로우에 따르면 일본은 일방적으로 VOC를 종속시켰으며 네덜란드 또한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17세기 초의 상황은 16세기 말 포르투갈 선교사들의 활동과 기독교 신앙의 확산이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한 기독교 박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일본의 엄격한 통제, 호프라이스 의례³²⁾, 기독교 포교 금지 등이 네덜란드인들이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들이었음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양상으로 흘러갔다. 클로우는 단순히 “유럽이 일본을 개항시키려고 들었으나 실패했다”라는 식의 서술에서 벗어나 일본의 체계적인 네덜란드 통제를 주장했다. 1641년 VOC 상관의 데지마로의 강제이전, 호프라이스 의례의 도입, 생활반경에 대한 엄격한 감시 등은 모두 일본의 정치적 주도권을 입증하는 증거로써 활용되었다. 포르투갈이 추방된 이후에 일본과 유럽을 연결하는 유일무이한 무역 파트너가 된 네덜란드는 겉으로는 경제적 특권을 누렸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절대적 통제 아래 있었다는 것이 클로우의 핵심 논지였다.

토비(Toby)는 *State and Diplomacy in Early Modern Japan: Asia in the Development of the Tokugawa Bakufu*에서 이 시기 도쿠가와 막부가 지배하던 일본을 쇄국 상태가 아닌 자국 중심의 외교 질서를 능동적으로 설계·운용한 행위자로 본다. 막부는 기독교 세력을 배제하는 대신에 조선과 류큐, 중국, 네덜란드 등 제한적인 파트너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와 무역을 통제했으며 네덜란드 역시 일본이 필요에 따라 선택한 여러 정보·상업 채널 중의 하나라는 논지였다.

클로우와 토비의 ‘종속화’와 ‘일본의 절대적 우위’라는 시각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VOC의 일본 상관이 쓴 데지마 일기³³⁾를 살펴보면 더 복잡한 현실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히라도에서 데지마로의 강제이전을 당하고 난 이후 1960년까지 VOC의 일본 팩토리장들이 작성한 일지를 살펴보면 일본 또한 네덜란드와는 다른 형태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양방향의 공포가 네덜란드와 일본의 관계를 지탱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클로우와 토비의 논증은 정치적 차원의 권력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적 차원의 의존성을 간과했다. 이는 마치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군사력이라는 요소만을 고려하며 경제력을 무시하는 것과 유사하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정치적 권력관계를 규정한다는 원칙’이 이미 17세기 데지마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17세기의 데지마는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상호 필요성이 상충하는 가운데 양측이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공간이었다. 통제와 복종이라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양방향의 필요성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균형 속에서 관계가 유지되었다. 이에 데지마 일지에 기록된 일본 관료들의 반복적인 질문과 가격 책정의 구체적

31) Clulow, Adam. 2014. *The Company and the Shogun: The Dutch Encounter with Tokugawa Jap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32) 클로우는 호프라이스 의례가 네덜란드의 일본에 대한 종속화를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33) 데지마로의 강제이전 전에는 히라도 일지

인 과정, 일본-네덜란드 관계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이전의 ‘비대칭성’ 논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1. 1641년 일본의 절대 통제 체제

1641년 데지마로 상관을 강제이전 당한 직후에 네덜란드인들은 일본을 압도적인 권력을 지닌 것으로 묘사한다. 당시 초대 팩토리장으로 재임한 얀 판 엘세라크(Jan van Elseracq)³⁴⁾의 기록에 의하면 네덜란드 상인들은 감옥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다. 자유로운 이동의 자유가 없었고, 일거수일투족이 일본 관리들의 감시하에 있었으며, 기독교 신앙의 표현 또한 절대적으로 금지되었다.

1641년 11월에는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기독교 예배 행위도 관찰되지 않도록 하고 일본인들이 개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쇼군과 의뢰로부터의 가장 엄격한 명령이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수천 명이 고문으로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³⁵⁾ 이러한 기록은 당시 네덜란드인들이 얼마나 강력한 통제하에 있었는지와 함께 기독교의 포교 금지는 일본이 서구 세력의 침투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관리했는지를 보여준다.

기독교 신앙 표현의 절대적인 금지라는 정책은 이미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일본의 기독교 박해의 역사라는 배경 위에서 수립되었다. 158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기독교 선교를 금지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1614년 재차 기독교 금지령을 발포했다.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서구 세력의 침입 경로로 간주하여 일본의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었다. 기독교 선교사들의 포교 활동으로 기독교가 일본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자 막부는 기독교가 제국주의적 침략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1639년 포르투갈이 일본에서 완전히 추방되기 이전까지 수십 년 동안 일본은 기독교 신자들을 체계적으로 탄압했다. 수천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고문과 화형, 익사 등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살되었다.³⁶⁾

34) 1641년 11월부터 1642년 10월까지 근무

35) Jan van Elseracq, Dagregister, November 1641, *The Deshima Diaries 1641-1660*, p. 78.

36) 데지마 일기(1638년 기록이기에 히라도 일기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에는 네덜란드인들이 시마바라의 난을 진압하는 데 동원된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하라 성에서 농성하던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였던 3만 7천여 명의 반란군은 진압된 이후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원 참수되었다. 1640년 일본에 온 포르투갈 사절단 중 61명이 처형되고 오직 13명만이 살아남아 마카오로 돌려보내진 사건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이라도 기독교적 색채를 띠거나 금지령을 어기면 즉시 처형될 수 있다는 공포를 기록하고 있다.

고문 등에 대해서는 프랑수아 카론(François Caron)이 자신의 저서 *A True Description of the Mighty Kingdom of Japan and Siam*에서 기술하고 있다(카론은 1619년 VOC의 요리사 보조로 히라도에 처음 도착했으며 이후 히라도 상관장을 역임했다). 카론이 기록한 고문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아나츠루시(穴吊るし, 구멍 매달기)로서 죄인의 몸을 묶어 거꾸로 매단 뒤에 오물로 채워진 구덩이에 머리만 집어넣는다. 이때 피가 머리로 쏠려 의식을 잃거나 너무 빨리 죽는 것을 막기 위해 관자놀이에 작은 구멍을 뚫어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게 했다. 이 상태로 며칠 동안 방치하여 정신적인 붕괴와 배교를 유도했다고

그 결과로 일본의 기독교 신앙은 지하로 숨어들었고 공개적인 종교 활동은 소멸하다시피 했다. 1641년 데지마로 VOC 상관이 강제이전을 당한 이후에도 이러한 종교 억압의 기억은 생생했다. 엘세라크가 언급한 “수천 명이 고문으로 죽었기 때문”이라는 표현은 기독교에 대한 일본의 단호하고 무자비한 태도를 네덜란드인들 또한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쇼군과 의뢰로부터의 가장 엄격한 명령”이라는 표현은 이상의 표현들이 일본의 최고 권력층의 결정임을 의미한다. 도쿠가와 막부의 명령이 전국의 지방 관료들에게 하달되었고, 나가사키에 있던 지사들은 이 명령을 충실히 실행한 것이다.

2. 반복되는 질문의 시작과 일본의 불안감

이러한 엄격한 통제 체제 속에서 역설적으로 일본 관료들의 불안감이 비롯되었다. 정치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군사력과 행정력에 기반을 둔 정치적 권력과 달리 경제적 필요성은 시장 메커니즘과 상품의 유용성에 기반을 두기에 일본이 네덜란드 상인들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통제한다 치더라도 경제적으로 필요한 상품의 유통과 관련해서 약한 부분이 있다면 무역 파트너로서의 가치와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1643년에서 1644년에 걸쳐 일본 관료들은 VOC 팩토리장을 반복적으로 소환하여 같은 질문을 한다. 그 배경에는 1641년의 톤킹 실크의 대량수입이 있었다. 톤킹 실크는 1637년부터 네덜란드가 일본에 직접 조달하기 시작한 상품으로 1641년에 이르러서는 4227,249 길더³⁷⁾ 규모의 대규모 화물이 일본에 수입되었다.³⁸⁾ 당시 일본은 이를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다량을 사들였으나 나가사키에서 판매될 당시 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수익을 안겨주었다. 이로 인해 일본 당국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안았으며 이로 인해 일본 관료들은 향후 생실크 공급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1642년 6월, 나가사키의 지사 바바 사부르자에몬(Baba Saburzaemon)을 만난 엘세라크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는 생실크의 양이 이렇게 적은 이유를 물었다. 그의 톤은 화난 것이 아니라 불안한 것이었다. 그는 경제 상황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다.”³⁹⁾ 긴 시간 동안 일본 관료들과 상호작용한 네덜란드인이 그들의 톤을 ‘협박’이 아닌 ‘불안감’으로 읽어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적혀있다. 두 번째는 운젠 지옥(Unzen Hells)이다. 나가사키 인근의 운젠 화산(雲仙岳)에서 유황 온천물을 가져다 진행했으며 죄인의 몸에 끓는 유황 물을 조금씩 붓거나 유황 가스를 마시게 하여 피부가 문드러지는 고통을 주었다고 한다. 마지막은 미노도오리(蓑踊り, 도롱이춤)으로 죄인에게 마른 짚으로 만든 옷(도롱이)을 입힌 후 불을 붙여 고통스러워하며 뛰는 모습을 ‘춤춘다’라고 조롱하며 태워 죽이는 방식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Caron, François. 1935. *A True Description of the Mighty Kingdoms of Japan and Siam*. London: The Argonaut Press.

37) 길더(Dutch Guilder): 15세기부터 2002년 유로화 도입 전까지 사용된 네덜란드의 법정 통화

38) Leiden University Press, "Silk for Silver: Dutch-Vietnamese Relations, 1637-1700", 톤킹 실크 무역 기록 참조.

39) Jan van Elseracq, Dagregister, June 1643, The Deshima Diaries 1641-1660, p. 145.

만약 클로우의 주장대로 일본이 순전히 정치적 통제와 ‘조용한 협박’으로 네덜란드 상인들을 지배했다면 사부르자에몬의 톤은 화난 것이거나 최소한 우월감이 보이는 명령조의 어투여야 했다. 하지만 엘세라크가 기록한 것은 “불안한 것” 이었고, “경제 상황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에서 미루어보아 우월한 권력을 지닌 자들이 통상적으로 보이는 태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질문은 1643년의 9월 11월에도 “여전히 같은 걱정”으로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1644년 1월과 3월, 5월에도 반복되었다.⁴⁰⁾ 더군다나 이러한 질문들이 서로 다른 관료들에게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불안감이 사부르자에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일본 당국 전체의 체계적인 관심이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경제적 의존성의 구조 형성과 양방향의 공포

포르투갈이 일본에서 추방된 이후 일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국과의 주요 무역 경로들이 변화했다. 포르투갈이 추방되기 이전에 일본은 여러 무역 중개자들-포르투갈, 중국 등-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일본에게 무역 중개자들을 선택하는 데 협상력이 있었다. 하지만 포르투갈이 일본에서 추방된 이후에는 일본은 네덜란드를 통해서만 중국 상품을 수입하게 되었다. 네덜란드는 일본의 유일한 서양 무역 파트너로 등극했고 중국 상품을 일본에 공급하는 공식 채널이자 ‘독점’을 향유했다. 만약 네덜란드가 생실크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다면 일본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았다.

생실크라는 주요 상품의 공급이 단 하나의 공급망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현대 경제학적 용어로 ‘공급사슬의 집중화(supply chain concentration)’이었다. 네덜란드가 생실크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 네덜란드가 가격을 급격히 올릴 가능성, 네덜란드가 일본 시장에 흥미를 잃고 다른 지역으로 떠날 가능성 등 가상의 시나리오들이 일본 관료들의 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1644년 중반에는 피터 안토니스 오버트워터(Pieter Antonisz Overtwater)⁴¹⁾가 일본 당국의 경제적 곤경을 기록했다. “그들은 내 이유들이 타당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지난해의 높은 가격 때문이었다. 그 높은 가격을 그 이후 수입된 모든 비단에 대해 지불해야 했다. 그 결과 중국인들이 겨울에 엄청난 양의 비단을 수입했고, 그들도 같은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으며,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⁴²⁾ 이 기록에 의하면 1641년에 생실크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었고 일본은 그 가격에 대량의 생실크를 구매했다. 이후에 시장 상황이 변화해 생실크의 시장 가격이 하락했거나 수요가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일본 상인들과 당국은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생실크를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일본이 경제적 영향력이 감소하는 동시에 공급자인 네덜란드 상인들의 영향력이 증가했음을 의미했다.

40) *ibid.*

41) 오버트워터는 1642년 10월부터 1643년 8월까지 VOC 일본 팩토리장을 역임한 후, 1644년 11월부터 1645년 11월까지 팩토리장을 재역임했다.

42) Pieter Antonisz Overtwater, Dagregister, 1644, *The Deshima Diaries 1641-1660*.

1644년에 사부르자에몬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너희 네덜란드가 떠난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큰 곤경에 빠질 것이다.”⁴³⁾ 이는 일본의 관료가 네덜란드가 떠나면 일본의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1641년 11월부터 1644년 11월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일본의 절대적 우위로 시작한 관계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의존성이 권력관계를 변화시킨 것이다.

이와 같은 기록들에서 미루어보아 일본은 네덜란드인들을 협박했지만 동시에 네덜란드도 일본에 대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었고 네덜란드가 떠날 수 있다는 위협 또한 암묵적으로 존재했다. 일본의 절대적인 정치적 우위 하에서 일본이 계속해서 네덜란드에 경제적 손실을 강요한다면 네덜란드가 가할 수 있는 최대의 위협은 “떠나는 것”이었다, 공급망이 다각화되어 있었을 때는 이러한 위협에 현실성이 별로 없었기에 협상력이 떨어졌지만, 공급망이 일원화되자 이러한 위협이 일본 당국자들에게 현실화된 것이다.

일본의 네덜란드 상인들에 대한 정치적 군사력의 우위와 더불어 네덜란드 상인들의 경제력 측면에서의 우위는 ‘상호 억지력(mutual deterrence)’를 형성했다. 양측이 모두 상대방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극단적인 행동이 자제될 수 있었다. 데지마에서 또한 일본은 네덜란드를 추방할 수 있다는 위협능력을 가지는 동시에, 네덜란드 또한 떠날 수 있다는 위협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때 17세기 당시의 일본의 전체 경제 규모(GDP) 대비 VOC를 통한 교역이 차지하던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당시 GDP를 명확히 측정한 자료는 부재하나 1637년 일본의 전체 규모 자체는 약 9억 4,500만 국제 달러⁴⁴⁾로 추정된다.⁴⁵⁾ 이를 기준으로 보아 1637년의 VOC 무역 규모인 42만 7,249길더의 비중을 계산하면 당시에 VOC와의 교역이 일본의 전체 GDP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0.01% 만의 극히 미미한 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다.⁴⁶⁾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관료들의 공포가 부재하지는 않았다.

우선 VOC와의 무역이 일본 전체 지역에서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VOC와의 무역은 히라도, 나가사키, 그 주변 지역들에만 집중되었으며 이 지역들에서는 일본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달리 VOC와의 교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637년 히라도의 VOC 상관의 총 무역액(42만 길더)은 도쿠가와 막부 전체의 연간 재정(약 700~750만 석의 쌀 수익⁴⁷⁾)에 비해 미미해 보이지만

43) Pieter Antonisz Overtwater, Dagregister, November 1644, *The Deshima Diaries 1641-1660*.

44) 1990년 미국 물가 기준; Saito와 Takashima의 종지에서 사용된 기준을 사용.

45) Osamu Saito and Masanori Takashima, 2015. "Estimating the shares of secondary- and tertiary-sector output in the age of early modern growth: the case of Japan, 1600-1874," *RCESR Discussion Paper Series* No. DP15-4. Tokyo: Hitotsubashi University.

46) 1637년 히라도 무역액 427,249길더를 금은 환율(당시 1길더 $\approx$ 약 2.5-3g의 은)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0~15만 달러 규모로 GDP(9억 달러)의 약 0.011-0.017%에 해당한다. 이 계산은 보수적인 추정이며, 실제 비중은 더 낮을 수 있다.; *ibid*.

47) Howell, D. L. (Ed.). (2023). "Economy, Environment, and Technology". *The New Cambridge History of Japan* (pp. 227-440). par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히라도의 영주와 나가사키 지역의 상인들, 더욱이 실크 판매상들에게는 직접적인 수입 원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히라도와 나가사키는 인구가 약 50,000~100,000명에 불과한 도시였지만⁴⁸⁾ 이 지역들을 통한 VOC와의 무역은 이들 도시 상인층의 상당수의 생계를 좌우했다.⁴⁹⁾ 특히 포르투갈이 1639년 추방된 이후에는 지역상인들과 도시 관료들은 오직 네덜란드와의 무역만이 정상적인 수익의 원천이었다.⁵⁰⁾

VOC를 통해 일본으로 수입되던 생실크라는 상품의 성격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오버트워터가 기술하듯이 생실크가 일본의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⁵¹⁾ 17세기에 일본에 대량 수입된 실크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일본의 권력층-도쿠가와 막부의 고위 관료들, 부유한 상인층-의 지위를 상징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었다.⁵²⁾ 도쿠가와 막부 당시 고급 실크는 기모노의 주요 소재였으며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과 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활용되었다.⁵³⁾ 또한, 실크는 외교 선물 및 막부가 전국의 다이묘들에게 하사하는 선물 중 주요 품목이었다.⁵⁴⁾ VOC를 통해 들어오는 생실크의 공급이 막힐 경우에 생실크의 부족은 단순한 사치품의 부족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적인 약화-도쿠가와 막부의 다이묘들에 대한 선물이 중단-을 의미했다.⁵⁵⁾ 이러한 점들에서 1641~1642년의 가격 협상에서 일본 관료들이 보인 불안감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생실크 수입이 야기한 상업적 손실이 관료들에게는 실크를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으로서 작용한 것이다.

Press.

- 48) Clulow, Adam. 2014. *The Company and the Shogun: The Dutch Encounter with Tokugawa Jap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42-45.
- 49) Reinier H. Hesselink, *Prisoners from Nambu: Reality and Make-believe in Seventeenth-Century Japanese Diplomac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pp. 112-145.
- 50) Adam Clulow, "The Domesticated Monopolist: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and the Shogunate in Seventeenth-Century Japan," *Journal of Early Modern History* Vol. 14, No. 3-4 (2010): 291-331.
- 51) Pieter Antonisz Overtwater, "Dagregister," September 20, 1644, *The Deshima Diaries 1641-1660*, p. 223.
- 52) Screech, Timon. 2002. *The Lens Within the Heart: The Western Scientific Gaze and Popular Imagery in Later Edo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23-167; Jansen, Marius B. 2000. *The Making of Modern Jap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p. 34-40.
- 53) Dalby, Liza. 1993. *Kimono: Fashioning Cultu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p. 145-178.
- 54) Jurgis Elisonas, "Christianity and the Daimyo," in John Whitney Hall, ed.,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Volume 4: Early Modern Jap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p. 360-407.
- 55) Mary Elizabeth Berry, *Hideyoshi*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pp. 78-92.

17세기 일본의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 또한 VOC와의 무역의 중요성을 증가시켰다.⁵⁶⁾ 17세기 일본은 연간 약 150톤의 은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은 광산국이었지만⁵⁷⁾ 막대한 양의 은의 공급은 동시에 심각한 통화 문제를 야기했다.⁵⁸⁾ 과도한 은 생산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낳았으며 막부로서는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⁵⁹⁾ VOC와의 무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은을 소비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했다.⁶⁰⁾ 일본이 네덜란드에 은을 지불하고 생실크를 구매하는 과정은 국내 은의 과잉 공급을 조절하는 자동 균형 기제였다. 만약 네덜란드가 떠나면, 일본은 은을 해외로 정기적으로 배출하는 새로운 창구를 찾지 않는 이상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조시킬 수 있었다.

나가사키 지역 관료들의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이해관계 구조도 고려해야 한다. 바바 사부르자에몬 같은 나가사키 지사는 상당한 부분 VOC 무역으로부터의 세수와 상업 규제료에 의존했다.⁶¹⁾ VOC가 일본에서 철수할 때는 이들 관료 개인의 수익도 크게 감소할 것이었다.⁶²⁾ 1642년 6월의 기록에서 사부르자에몬이 "화난" 것이 아니라 "불안한" 것처럼 보이는 태도를 보인 이유는 국가 경제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본인의 직위 유지와 수익 보장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⁶³⁾

이상의 사항들에 더해서 포르투갈의 추방 이후 네덜란드가 외국과의 유일한 공식 무역 채널로서 존재하는 '공급사슬 위험'의 상태를 고려하면 일본 관료들의 공포는 지역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권력의 상징적 표현의 공급, 관료 개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에서 야기된 것이었다. 테지마 일기에 기록된 관료들의 불안감과 생실크의 공급에 대한 반복되는 질문들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다.⁶⁴⁾ 일본 관료들의 공포는 단순히 "네덜란드 무역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일본은 네덜란드라는 단일 공급처에 의존하고 있기에 이들이 철수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연쇄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실질적인 위기 인식이었다.⁶⁵⁾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결국 1644년과 1645년에 걸친 상호 역지력을 작동할 수 있게 했으며 이를

56) Atelier Japan, "Japanese Silver: Trading over time" (2024).

57) Dennis O. Flynn and Arturo Giráldez, "Cycles of Silver: Global Economic Unity through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Journal of World History* Vol. 13, No. 2 (2002): 391-427

58) Tashiro Kazui, "Foreign Relations during the Edo Period: Sakoku Re examined,"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8, No. 2 (1982): 283-306; Yoshida Tora, *Edo Jidai no Kahei Seido* [Edo Period Monetary System] (Tokyo: Ochanomizu Shobo, 1951), pp. 145-178.

59) Sakudo, Yozo.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Japan," in Terence K. Hopkins and Immanuel Wallerstein, eds. 1980. *Processes of the World-System*. Beverly Hills: Sage. pp. 109-139.

60) Flynn and Giráldez. 2002. "Cycles of Silver," *Journal of World History* (Vol. 13, No. 2: p.p. 391-427).

61) Overtwater, "Dagregister," 1642-1645, *The Deshima Diaries*, p. 225.

62) Hesselink, *Prisoners from Nambu*, pp. 122-135.

63) Jan van Elseracq, "Dagregister," June 1642, *The Deshima Diaries 1641-1660*, p. 145.

64) 3.2 파트 참고

65) Pieter Antonisz Overtwater, "Dagregister," November 1644, *The Deshima Diaries 1641-1660*, p. 228.

통해 양국은 타협의 제도화로 나아가게 되었다.

4. 호프라이스 의례와 타협의 제도화

"네덜란드인들이 연속으로 2년 동안 손실을 보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는 히라도에서 오랫동안 해온 것처럼 이윤을 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기록에서 일본 당국자가 네덜란드 상인들을 격려한 이유는 일본이 네덜란드가 일본에서 계속해서 이윤을 내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네덜란드가 계속해서 손실만 입는다면 언젠가는 일본에 관심을 잃고 떠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1609년에서 1641년까지 네덜란드가 히라도에 33년간 무역소를 유지한 기간을 언급한 것은 데지마에서 또한 히라도에서와같이 이윤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유인(inducement)이었다. 이처럼 양방향의 유인과 협박이 결합하여 관계의 안정성을 구현하고 있었다.

1644년의 10월에서 11월에 이르는 일지에서 오버트위터는 생실크의 가격에 대해 일본 상인들과 당국이 높은 가격에 대량 구매해서 손실을 보았기에 올해는 더 낮은 가격을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측이 반복되는 절차를 통해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네덜란드와 일본 간의 관계가 제도화-협상의 기본 틀에 양측이 동의했다는 점-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협상 과정에서 오버트위터는 자신의 요구를 완전히 관철하지 못했다. 일본 당국이 제시한 가격은 "1등급은 320 타엘, 2등급은 280 타엘이었다." 오버트위터는 이 가격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1등급과 2등급 사이에는 40 타엘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가격들에 항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내 항의는 귀를 기울임을 받지 못했고, 나는 그 가격들을 받아들여야 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것이 "협상"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일방적인 가격 책정이었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협상 절차를 거쳤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일방적인 가격 책정에 불과했다. 일본이 네덜란드의 이탈을 우려하면서도 가격을 강하게 밀어붙인 이유에는 일본의 공포가 가격 협상 이상의 더 깊은 구조적 문제에 근거를 두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막부에게 중요한 것은 개별 거래에서의 최대 이윤이 아니라 네덜란드를 일본이 형성해둔 질서 내에 영구적으로 안착시킨 것이었다. 가격의 일방적 책정을 통해 일본은 '너희는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정치적 우월성의 명시와 '우리는 너희를 필요로 한다'는 경제적 의존성의 은폐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다. 결국, 일방적인 가격 책정은 네덜란드를 일본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가 일본이 제시한 조건으로만 일본 내에 머무를 수 있다는 위계를 확립하려는 행위였다. 네덜란드는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일본 시장에 남았고 이는 일본 관료들에게 네덜란드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의존성을 정치적 우월성으로 '봉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설적 관계는 오버트위터의 이어진 기록에서 추가로 논의된다. 오버트위터는 일본이 제시한 가격을 받아들여야 했던 이유에 대해 "네덜란드는 일본 시장이 필요했고, 일본 당국은 네덜란드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

했다.⁶⁶⁾ 양측 모두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극단적인 선택-철회 혹은 추방-보다는 낫다는 것을 인식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일방적 우위로 포장됨으로써 양측은 관계의 불안정성을 은폐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상호 공포가 일본의 가격 강압이라는 형태로 제도화된 방식이었다. 호프라이스 의례는 이러한 상호 공포와 상호의존성의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 호프라이스는 독일어로 "궁정 여행"을 의미하며 네덜란드 팩토리장은 매년 에도에 가서 쇼군을 만나고 선물을 바치는 의식을 거쳐야 했다. 클로우는 호프라이스를 네덜란드의 종속화를 상징하는 의례로 해석했다.^{2 3} 그리고 초기 기록들, 특히 엘세라크의 1641~1642년 기록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반드시 틀리다고 볼 수는 없다. 호프라이스 의례 자체가 네덜란드인들에게 매우 굴욕적인 경험으로 묘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프라이스 과정은 극도의 감시와 제약이 특징이었다. 네덜란드인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고, 에도로 가는 길에 감시자들이 상인들을 따라다녔으며 에도에서도 지정된 숙소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호프라이스를 통해 일본은 네덜란드를 명확하게 종속시키고 있었으며 클로우는 이것을 정치적 서열을 확립하는 의례였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호프라이스에는 의례를 거침으로써 네덜란드 상인들이 일본 쇼군의 신하가 되었다는 의미도 있었다. VOC 상인들은 쇼군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면서 타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 히라도 기록들에서 포르투갈 상인들과 네덜란드 상인들이 호프라이스 기회를 얻기 위해 경쟁하던 모습을 보면 호프라이스를 통해 특별한 지위를 얻을 수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네덜란드만이 쇼군을 알현하고 일본 내에서 공식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유일한 서양 무역 파트너로서 네덜란드는 유럽이 일본 시장에 접근하는 것 또한 제한할 수 있었고 이는 네덜란드에 엄청난 경제적 이윤으로 이어졌다.

5. 권력의 이중성과 상호 구속의 안정화

클로우는 "비대칭성" 논증의 근본적 한계는 권력을 단일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일본이 독점했지만, 실상은 정치적 권력은 일본이 압도적이었지만 경제적 권력은 양측 모두가 가지고 있었다. 오버트워터는 정치적으로는 일본 당국의 결정에 따라야 했다. 생실크의 가격, 무역 기간, 판매 방식, 창고 위치, 심지어 무역소의 건축 자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일본 당국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오버트워터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고수한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도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네덜란드를 완전히 짓누를 수는 없었다. 생실크가 없으면 일본의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었고 상인들과 당국은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지나친 억압은 네덜란드가 떠난다는 선택지를 고려하게끔 할 수 있었으므로 일본은 네덜란드가 계속해서 일본과의 무역에 임하도록 유인해야 했다. 결국, 정치 권력은 일본이 압도적이었지만 경제 권력은 네덜란드 또한 일본에게 필수적으

66) Pieter Antonisz Overtwater, Dagregister. 1642, November. *The Deshima Diaries 1641-1660*.

로 됨으로써 권력의 이중적 구조를 보였다. 네덜란드는 정치적으로는 약했지만, 경제적으로는 필수적이었다.

1644년의 협상 기록은 네덜란드와 일본 사이의 미묘한 '상호 억지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준다. 당시 일본은 무역의 최종 결정권을 쥔 주권국이었으나 네덜란드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무역 자체를 철회(Exit option)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 수단을 보유하고 있었다. 양측은 상대의 극단적 선택이 가져올 공동의 손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이 타협의 지점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타협의 반복은 협상의 과정과 절차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며 '협상의 정례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심리적 위협에 그치지 않았다. 양측 모두 극단적 행동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고자 했기에 충분한 위협능력이 오히려 행동의 자제로 이어지는 상호 억지의 균형이 달성되었다.

1645년에 이르러 네덜란드와 일본 간의 양방향 긴장 관계는 본격적인 '제도적 공식화' 단계에 진입한다. 『데지마 일지』에 따르면 일본 당국과 VOC 팩토리장의 관계는 일방적인 협박과 복종을 넘어 상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실무적 관계로 진화했다. 매년 정해진 시기에 협상을 진행하고, 반복적인 절차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을 예상 범위 내로 한정하며, 일본의 최종 결정 과정에 네덜란드의 이익 제기권을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구조가 정착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는 일본에게는 체계적인 통제권을, 네덜란드에게는 안정적인 무역 환경을 보장하며 양측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결과적으로 17세기 네덜란드와 일본 간의 관계 제도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강요가 아닌 장기간의 상호작용이 빚어낸 정교한 균형의 산물이었다.

1645년 기록에 등장하는 이노우에 마사시게(井上政重)의 발언은 에도 막부의 네덜란드 인식이 통제의 대상을 넘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오메츠케(大目付)⁶⁷⁾이자 치쿠고노카미(筑後守)⁶⁸⁾로서 대외 정책과 종교 통제를 관장하던 이노우에가 네덜란드 팩토리장에게 "너희는 불가결하다."⁶⁹⁾라고 말한 것은 네덜란드가 제공하는 효용 가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내린 전략적 승인이자 양국 관계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노우에가 언급한 가치는 정보와 경제라는 실용적 축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일본은 네덜란드를 통해 유럽 정세와 국제 무역 네트워크의 동향을 파악하며 세계의 역학 구도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획득하는 동시에 생실크를 비롯한 상품들은 일본 내부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막부의 재정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되었다. 네덜란드는 막부에게 정치적 안목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

67) 다이묘들을 감시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으며, 광범위한 정보 수집 및 감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17세기 전반에는 기독교 박해 업무와 나가사키를 통한 해외 교역 관리도 오메츠케가 담당했다.

68) '치쿠고 지방(現 후쿠오카현 남부)의 지사(수령)'라는 뜻으로 에도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전과 달리 실제 통치권과는 무관하게 무사들의 격식과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막부가 부여한 일종의 훈장이나 관등과 같은 역할을 했다.

69) Pieter Antonisz Overtwater, Dagregister, 1645, *The Deshima Diaries 1641-1660*, p. 250.

한 점들을 고려할 때 "너희를 왜 소중히 여기는지 이제 이해할 것"⁷⁰⁾이라는 이노우에의 언급은 일방적인 위협이나 복종의 요구가 아닌, 상호 필요성을 인정한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IV.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의 일본 인식

17세기 초 일본에 도착한 네덜란드 상인들은 VOC의 광대한 제국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여타 지역에서 경험했던 메커니즘-군사적 우위를 통한 강압, 요새화를 통한 영토 지배 등-이 일본에서는 통하지 않았다.⁷¹⁾ 1609년 히라도에 첫 무역소를 연 이후 1641년 데지마로 강제이전 당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네덜란드 상인들은 도쿠가와 막부가 정한 질서 내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끊임없이 재정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인들은 쇼군을 “천황폐하(Your Majesty Emperor)”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초기 네덜란드가 일본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대해 가진 기대는 매우 컸다. VOC는 광범위한 확장을 기대했고, 포르투갈이나 영국과 같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일본의 주요 상업 파트너가 되고자 했다. 하지만 이노우에와 같은 막부 관료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면서 네덜란드는 자신들이 기대한 미래가 녹록지 않음을 깨달았다. 1627년의 누이츠 대사 사건과 1637년에서 1638년까지 이어진 시마바라 반란 사태를 겪으면서 VOC는 데지마로 강제이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네덜란드인들이 채택한 “천황폐하”라는 호칭과 쇼군에 대해 신하로서의 예절은 한편으로는 네덜란드인들의 정치적 종속을 의미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적 선택으로서 작동했다. “천황폐하”라는 호칭은 VOC의 공식 문서뿐만 아니라 팩토리장들의 사적인 일기(데지마 일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며 이는 VOC의 네덜란드인들이 막부의 권위를 인정했음을 보여준다. 데지마의 상관에 머무르던 시기 동안 팩토리장들은 연례적인 호프라이스(에도 조현식)에 참석하여 쇼군에게 절을 하고 선물을 바쳤다. 이러한 의례들은 막부의 정치적 우월성을 상징했으며 에도에서 네덜란드 상인들은 감옥과 같은 환경에서 감시를 받는 생활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신하로서의 정체성은 VOC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이기도 했다. 네덜란드가 쇼군의 신하가 됨으로써 네덜란드의 주된 경쟁자이던 포르투갈을 포함하여 유럽의 여타 세력들을 배제할 수 있었다. 호프라이스 의례를 통한 정치적 종속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정치적 우위를 확인하는 절차였지만 동시에 네덜란드인들에게 일본 내에서의 무역 독점권을 부여했다.

70) *ibid.*

71) Clulow, Adam. 2014. *The Company and the Shogun: The Dutch Encounter with Tokugawa Jap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639년에 포르투갈이 일본에서 기독교 포교 활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추방된 이후에 네덜란드는 일본과 중국 간의 중개 무역을 장악하는 유일한 유럽 세력이 되었다. VOC 팩토리장들의 일지에는 막부가 “나가사키 지역 행정관들의 부패와 불공정한 행동을 완전히 모르고 있으며, 이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파악하고서는 정치적 종속을 경제적 특권의 대가로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네덜란드의 일본에 대한 완전한 종속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막부 관료들은 반복적으로 생실크 수입량에 대해 질문하면서 팩토리장인 엘세라크에 불안감을 표출했다. 만약 일본이 순전히 정치적 우월성에 기반을 두어 네덜란드를 압도했다면 관료들의 태도에는 명령조의 우월감이 드러났을 것이지만 오히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엿볼 수 있었다. 당시 일본에 수입된 생실크는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규모의 화물이었다. 일본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 이를 대량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기대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일본 당국에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 이후 일본 관료들의 반복되는 질문들은 이러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절박한 시도였다.⁷²⁾ 포르투갈을 추방한 이후 일본은 네덜란드가 생실크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따로 공급받을 여타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했다. 네덜란드가 가격을 급격히 올릴 가능성, 일본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 등이 일본 관료들의 의식을 지배했다. 이러한 불안감의 표현이 나가사키 지사에 의해서 표출된 것이다.

VOC 대표들이 일본의 다층적인 권력 구조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네덜란드인들은 에도 중앙 정부의 고위 관리들(Raetsheeren)과 나가사키 지역 행정관(Regent) 사이의 구조적 갈등을 이해하는 동시에 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했다. 특히 라에츠헤렌 타키몬돈네(Raetsheeren Takimondonne)와 같은 일부 관료들이 네덜란드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때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1645년에 이르면 네덜란드와 일본은 매년 정해진 시기에 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반복적인 절차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일정 범위 내로 제한되는 과정에서 협상이 예측 가능한 궤도에 올랐다. 가격의 최종 결정은 일본이 하고 이에 네덜란드의 이익 제기권이 실질적으로 고려되는 구조가 안착하였다. 이는 일본이 네덜란드를 추방할 수 있다는 위협과 동시에 네덜란드 또한 떠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억지력의 작동을 의미했다. 이에 양국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피하고자 타협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호프라이스 의례는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제도화하는 메커니즘으로서 기능했다. 호프라이스를 통해 일본은 네덜란드의 정치적 종속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네덜란드가 일본과의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했다. 이를 고려하면 “황제 폐하께서 당신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표현은 일본의 일방적 시계가 아니라 상호 필요성의 인정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72) 이에 대해서는 4.3. 파트를 참고.

결국, 네덜란드인들의 일본 인식은 일본 진출 초기의 제국 팽창론에서 현실적 적응으로의 이행 과정을 보여준다. VOC가 타국에서 경험한 군사력과 외교적 우월성은 일본에서 작동하지 않았기에 네덜란드인들은 일본의 정치적 질서에 적응해야만 했다. 그 결과 “천황폐하”라는 호칭과 호프라이스 의례를 통한 정치적 종속을 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종속화는 일방적인 강압의 결과만은 아니었으며 경제적 필요성이 만든 상호의존의 구조 속에서 네덜란드 또한 일본 시장의 독점권이라는 경제적 특권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네덜란드인들의 일본 인식은 역설적 보완성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인들은 일본을 자신들이 정복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로 인식하는 동시에 일본이 자신들을 필요로 함을 이해했고 이러한 상호 필요성의 구조 속에서 제도적 관계를 구축했다. 일본에게 정치적으로는 종속되지만, 경제적으로는 필수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제도화된 것이 매년 반복되는 호프라이스 의례였다.

V. 결론

17세기 네덜란드와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의 관계는 기존의 ‘종속화’와 ‘일본의 절대적 우위’라는 분석만으로 해석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상호 공포와 경제적 의존성의 제도화’라는 새로운 틀을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데지마 일기에는 3년간 진행된 생실크 협상 과정에서 일본 관료들이 보인 불안감이 단순히 협박이 아니라 네덜란드에 대한 구조적 의존성에서 비롯된 우려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가사키 지사가 만약 네덜란드가 떠날 경우에 일본의 경제를 우려한 것은 일본의 압도적 정치적 우월성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본의 경제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일본은 포르투갈을 추방한 이후 생실크 공급을 네덜란드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공급사슬의 집중화가 양국 관계의 근본적인 구조를 변화시켰다.

VOC 팩토리장들 또한 일본 시장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기에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일본 시장에 남으려고 했다. 일본이 네덜란드를 추방하거나 네덜란드가 일본 시장에서 철수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상호 손실을 피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본고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기여는 17세기의 국제관계에서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보였다는 것이다. 일본은 정치적 차원에서 절대적 우위를 유지했지만, 경제적 차원에서 차츰 네덜란드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었다. 생실크 대량수입으로부터 야기된 경제 손실은 단순한 일본 내의 시장 실패가 아니라 공급사슬의 다각화가 없었기에 일어난 구조적 위기였다. 일본 관료들의 생실크 수입에 대한 반복적인 문의는 이러한 의존성에서 시작된 불안감의 표출이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양국 관계에 변화를 야기했다. 이러한 권력의 이중성은 현대의 국제관계 이론에서 논하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정치적 권력관계를 규정한다’는 원칙의 초기

사례를 제공한다. 기존 연구들은 정치적 서열 관계에는 주목했지만, 경제적 구조가 정치적 결정을 제약하는 메커니즘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

1644년에서 1645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전까지 일본의 일방적 통제와 네덜란드의 복종이 주를 이루는 관계는 상호 역지력이 작동하는 관계로 변화했다. 양측이 모두 상대방을 완전히 이길 수는 없고, 이길 필요도 없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극단적인 행동들이 자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은 네덜란드를 추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를 실행할 경우 네덜란드가 제공하던 정보와 무역 물품들에서 손실이 일어날 수 있었다. 네덜란드 또한 VOC 상관이 일기에서 '이윤을 낼 수 있다면' 일본에 머물 것이라고 기록한 점에서 미루어보아 계속해서 손실을 볼 경우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암묵적 위협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양방향의 공포는 협상의 정례화라는 제도적 형태로 고착화되어 타협의 공간을 창출했다. 1645년 이후에 양국은 매년 정해진 시기에 가격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 과정 및 가격 변동 폭 또한 일정 범위 내로 제한되었다.

호프라이스 의례 또한 단순히 네덜란드의 정치적 종속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 의례를 통해 네덜란드가 쇼군의 신하 됨을 자처함으로써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다. 포르투갈 상인들과 호프라이스 의례 기회를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 이러한 의례가 단순히 종속의 표현이 아닌 특권의 인정이기도 했음을 시사한다. 호프라이스는 양면성을 가진 의례였으며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정치적 우월성을 확인하는 절차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네덜란드에 일본 내 독점 무역권을 보장해줬다. 네덜란드 또한 매년 반복되는 의례를 통해 자신들이 일본과의 관계를 지속할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으며 일본에게 네덜란드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었다.

17세기 네덜란드 상인과 일본 도쿠가와 막부의 관계는 '공포의 거래'였다. 하지만 이 공포는 일방적이지 않았다. 일본은 기독교 세력의 침투와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공포 그리고 네덜란드의 철수가 야기할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으며 네덜란드는 일본이라는 강력한 국가와 매력적인 시장에서 추방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양측의 공포는 협상 테이블 위에서 타협의 지점을 찾았으며 이러한 가정에서 VOC는 일본에 정치적으로 종속되면서도 경제적으로 필수적인 위치에 자리 잡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17세기의 데지마는 단순히 식민지도 아니고 완전한 독립도 아닌 상호 공포와 경제적 의존성이 제도화된 공간이었다. 데지마에서 네덜란드와 일본은 군사력이나 정치 권력이 아닌 경제적 필요성을 통해 관계의 틀을 구축했으며 이는 근대 초기 국제관계에 색다른 모델을 제시했다. 군사력이나 정치적 압박이 아닌 상호 필요성이 만드는 제도화된 타협의 힘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VI. 참고문헌

1. 1차 문헌

- Blushé, Leonard, Femme Vialle, and Matsukawa Tanaka-van Daalen, eds. 2023. *The Deshima Diaries 1641–1660: Employees of the Dutch Trading Post in Japan*. Leiden: Leiden University Press.
- States General of the United Netherlands. 1602. "Charter of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VOC)." (March 20, 1602).

2. 2차 문헌

- 清水, 有子. 2001. 『近世日本とルソンー「鎖国」形成史再考』. 東京: 汲古書院.
- 吉田, 太郎. 1951. 『江戸時代の貨幣制度』. 東京: 御茶の水書房.
- Andrade, Tonio. 2005. *How Taiwan Became Chinese: Dutch, Spanish, and Han Colonization in the Seventeenth Centu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erry, Mary Elizabeth. 1982. *Hideyoshi*.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pbell, Tony. 2023. "Mediterranean portolan charts: their origin in the mental..." *Map History Archives*.
- Caron, François. 1935. *A True Description of the Mighty Kingdoms of Japan and Siam*. London: The Argonaut Press.
- Clulow, Adam. 2014. *The Company and the Shogun: The Dutch Encounter with Tokugawa Jap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alby, Liza. 1993. *Kimono: Fashioning Cultu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iffie, Bailey W. and George D. Winius. 1977. *Foundations of the Portuguese Empire, 1415–1580*.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Elisonas, Jurgis. 1991. "Christianity and the Daimyo."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4. :360–407.
- Flynn, Dennis O. and Arturo Giráldez. 2002. "Cycles of Silver: Global Economic Unity through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Journal of World History* 13, 2: 391–427.
- Harley, J. B., and Woodward, David (Eds.). 2007. *The History of Cartography, Volume 3: Cartography in the European Renaissa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sselink, Reinier H. 2002. *Prisoners from Nambu: Reality and Make-believe in Seventeenth-Century Japanese Diplomac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Howell, D. L. (Ed.). 2023. *Economy, Environment, and Technology: The New Cambridge History of Jap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27–440.
- Israel, Jonathan I. 1995. *The Dutch Republic: Its Rise, Greatness, and Fall, 1477–1806*. Oxford: Clarendon Press.
- Jansen, Marius B. 2000. *The Making of Modern Jap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otley, John Lothrop. 1855. *The Rise of the Dutch Republic: A History. Vol. 1*. New York: Harper & Brothers.

- Saito, Osamu and Masanori Takashima. 2015. "Estimating the shares of secondary- and tertiary-sector output in the age of early modern growth: the case of Japan, 1600-1874." *RCESR Discussion Paper Series 0*, 15: 4.
- Sakudo, Yozo. 1980.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Japan." *Processes of the World-System 0*, 0: 109-139.
- Screech, Timon. 2002. *The Lens Within the Heart: The Western Scientific Gaze and Popular Imagery in Later Edo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tern, Philip J. 2011. *The Company State: Corporate Sovereignty and the Early Modern Foundations of the British Empire in Ind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ashiro, Kazui. 1982. "Foreign Relations during the Edo Period: Sakoku Reexamined." *Journal of Japanese Studies* 8, 2: 283-306.
- Toby, Ronald P. 1991. *State and Diplomacy in Early Modern Japan: Asia in the Development of the Tokugawa Bakufu*.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Valleriani, Matteo (Ed.). 2017. *The Structures of Practical Knowledge*. Cham: Springer.
- Van Duzer, Chet. 2013. *Sea Monsters on Medieval and Renaissance Maps*. London: British Library.

3. 인터넷 자료

- Discovering Belgium. 2020. "1566 Iconoclasm When Belgium's Churches Were Attacked." <https://www.discoveringbelgium.com/1566-iconoclasm/> (검색일: 2025.12.10.)
- EBSCO Research Starters. 2018. "Dutch East India Company is Founded." <https://www.ebsco.com/research-starters/history/dutch-east-india-company-founded> (검색일: 2025.12.10.)
- Encyclopedia Britannica. n.d. "Netherlands." <https://www.britannica.com/place/Netherlands> (검색일: 2025.12.05.)

미·중의 서태평양 공간 인식과 전략 구상 해상 자위대 사세보 자료관

박예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 정치외교학 전공

I. 서론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강대국 간 전략 경쟁이 가장 첨예하게 전개되는 공간은 서태평양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이 지역을 자국의 핵심 안보 공간으로 규정하면서,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은 반복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군사훈련의 빈도 증가, 해·공군의 근접 운용, 동맹국의 안보 관여 확대는 서태평양이 더 이상 잠재적 분쟁 지역이 아니라, 실질적 위기 관리의 무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 구도는 단순한 세력 충돌이나 군사력 비교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왜 서태평양에서의 동일한 행보가 중국에게는 ‘주권 수호’와 ‘방어적 조치’로, 미국에게는 ‘현상 변경’과 ‘패권 도전’으로 상이하게 해석되는가?

기존 국제정치 담론은 대체로 미국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하려는 현상 유지 행위자로, 중국을 그 질서를 수정하려는 도전자로 묘사해 왔다. 이러한 틀 속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 문제는 자연스럽게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되며, 미국의 군사적·외교적 개입은 동맹 방어와 질서 안정화라는 명분 아래 정당화된다. 이와 같은 이분법적 구도는 미·중 경쟁을 규범적 대립 혹은 패권 교체의 문제로 단순화하는 경향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중국의 전략적 의도와 행동을 지나치게 결정론적으로 해석할 위험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특히 중국의 대만 통일 구상이나 무력 사용 가능성을 곧바로 아시아 전반, 나아가 글로벌 패권 추구의 표현으로 환원하는 해석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 스스로가 서태평양을 어떠한 주권적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군사 전략과 위협 인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는 기존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중국의 행동은 종종 ‘공세적 의도’의 직접적 산물로 해석되며, 그 이면에 존재하는 공간 인식과 정당화 논리는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서태평양이라는 공간이 각 행위자에게 갖는 의미의 차이에 주목한다. 중국에게 서태평양은 단순한 영향력 확장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 수호, 국가 발전, 체제 안정이 결합된 ‘생존 공간’에 가깝다. 반면 미국에게 서태평양은 동맹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자유주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관리의 공간’

이며, 이 지역에서의 후퇴는 곧 글로벌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시험대로 인식된다. 동일한 공간이 이처럼 상이하게 정의될 때, 각국의 행동은 자국에게는 방어적 조치로 정당화되지만, 상대방에게는 공세적 위협으로 해석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인식의 비대칭성은 서태평양에서의 미·중 경쟁을 단순한 군사력 대결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인식과 정당화 논리가 충돌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시 말해, 서태평양에서의 긴장은 군사력 그 자체보다도 각 행위자가 해당 공간에 부여하는 의미와 위협 인식의 방식에서 증폭되고 있다. 이 점에서 서태평양은 단순한 분쟁 가능 지역이 아니라, 인식과 해석의 차이가 전략적 불안을 구조화하는 핵심 무대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이 서태평양을 어떻게 정의하고 인식하는지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인식이 개입과 억제의 정당화 논리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의 국방백서, 국가안보전략 등 공식 문서를 중심으로 서태평양에 대한 위협 인식과 전략 서사를 검토한다. 나아가 중국 위협을 강조하는 시각과, 경쟁을 관리 가능한 범위로 인식하려는 신중·절제적 접근을 비교함으로써, 서태평양 문제를 인식과 해석의 비대칭성이 만들어낸 전략 공간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서태평양에서의 미·중 경쟁을 패권 교체의 결정론적 틀에서 벗어나 보다 절제되고 분석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미·중 서태평양 인식 및 전략 비교

1. 미국의 서태평양 인식 및 전략

미국의 서태평양 인식은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서태평양은 미국 본토의 안보 및 경제 이해가 직결된 공간이다. 둘째, 미국은 서태평양을 규범 기반 질서가 유지되거나 도전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며, 중국은 그 질서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려는 행위자로 규정한다. 셋째, 이러한 인식을 실행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미국은 단독 개입이 아닌 동맹과 파트너의 집단 대응과 억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미국의 서태평양 인식과 전략을 살펴본다.

(1) 미국 본토 이해와의 직접적 연계

미국은 서태평양을 미국 본토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가 연계된 공간으로 인식한다. 2022년 발표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번영을 좌우하는 인태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국 스스로를 지역 질서를 주도하는 태평양 연안 국가로 정의하며, 그 범위를 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 확장함으로써 서태평양을 포함한 인태 지역 전반을 자국의 핵심

지역으로 편입한다.

이러한 인식은 역사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이 본토 위협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학습했다. 이에 미국은 전후 75년간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등과 조약 동맹 구축하며, 서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동맹 체제를 미국 안보 전략의 제도적 기반으로 삼아왔다.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은 자국의 이익과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동일시하는 데 있다. 자유롭고 열린 인태(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질서가 유지될 경우, 이는 역내 국가들의 주권과 자유를 보장할 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동시에 중국의 부상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인태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권을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강대국으로 부상하려 한다고 평가한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강압(coercion)과 공세적 행위(aggression)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양상과 강도가 서태평양을 포함한 인태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인식된다. 미국은 이러한 행위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실질적 비용을 전가하고, 인권, 항행의 자유와 같은 국제 규범을 훼손한다는 점을 문제시한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미국 전략의 목표는 중국 자체의 변화가 아닌, 중국이 활동하는 전략적 환경을 자국에 유리하게 설계하는 데 있다. 이는 중국의 부상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거나 봉쇄하기보다는 경쟁의 구조와 조건을 관리하려는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이 전면적 제로섬 대결로 고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인태 전략 문서는 기후 변화, 핵 비확산과 같은 초국가적 문제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며, 양자 간 갈등이 실존하는 글로벌 차원의 문제 해결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는 양국의 관계를 경쟁과 제한적 협력이 병존하는 구조로 관리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이 오늘날의 인태 국면을 결정적인 10년(decisive decade)으로 규정하는 이유 역시 이러한 복합적 도전에 있다. 중국의 부상과 기후 위기, 팬데믹과 같은 도전이 동시에 중첩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단일 국가의 대응이 아니라 집단적 역량(collective capacity)의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향후 이 지역을 규율하는 규칙과 규범이 중국식 질서로 대체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규범 기반 질서가 유지될 것인지는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공동 대응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안보 차원에서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인태 지역의 평화를 유지해 온 핵심 행위자임을 강조하며, 21세기에도 이러한 역할을 지속하고, 현대화할 것을 천명한다. 미국 서태평양 안보 전략은 자국 이익 보호, 군사적 공격 억제, 그리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 대한 강압 대응에 초점을 맞추며, 이를 위해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와 강압 대응(counter-coercion)을 주요 수단으로 제시한다.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만관계법과 기존의 약속을 근거로 대만의 자위 능력 강화를 지원하는 장기적 일관성을 강조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미국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25)』은 인태, 특히 서태평양 지역을 미국의 핵심 전략 공간으로 재확인하며, FOIP 질서의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다. 동 문서는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목표를 ‘경제적 미래의 확보’와 ‘군사적 대결의 예방’이라는 두 축으로 제시하며, 인태 지역을 21세기를 넘어 다음 세기의 핵심 전장으로 규정한다.

이와 같은 인식 속에서 미국은 서태평양에서의 안보 전략을 ‘힘에 기반한 억지(deterrence through strength)’로 설명하는데, 이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억지의 핵심 요소로 군사력뿐 아니라 미국이 보유한 경제적·기술적 우위 역시 명시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서태평양 안보 인식이 군사 영역을 넘어 포괄적 국가 역량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만은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 구상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대만은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연결하는 관문에 위치하며,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해상교통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미국은 특정 행위자가 대만해협을 통제하거나 봉쇄할 경우 발생할 통행 제한, 경제적 비용, 공급망 교란을 심각한 전략적 위협으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정책 목표는 분쟁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분쟁 자체의 예방과 현상 유지의 보장에 놓여 있는 것이다. 미국은 대만해협에서 어느 한쪽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명확히 반대하며, 제1도련선에서의 침략을 거부(denial)할 수 있는 군사 능력 구축을 강조한다. 다만 이러한 거부 전략은 미군 단독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며, 일본, 한국, 인도 등 동맹·파트너 국가들과의 집단적 방위 체제 강화가 억지 신뢰성의 핵심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2) 대중 인식과 규범 기반 질서의 유지

미국의 서태평양 인식의 두 번째 축은 이 지역을 규범 기반 질서의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공간으로 파악하고, 중국을 그 질서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려는 도전자로 규정한다는 데 있다. 이는 단순한 세력 균형의 문제를 넘어, 서태평양에서 어떠한 규칙과 규범이 작동할 것인가라는 질서 차원의 질문을 중심에 놓는 인식이다. 미국은 FOIP를 단순한 가치 선언이 아니라, 항행의 자유, 주권 존중, 국제법 준수라는 기존 국제질서의 작동 원리를 지역 차원에서 유지하기 위한 핵심 틀로 이해한다.

이러한 질서 인식 속에서 중국은 단기적 위협이 아닌 장기적으로 기존 질서의 성격을 재편하려는 수정주의적 행위자(revisionist actor)로 규정된다. 미 국방부가 매년 발간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사 및 안보 개발(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2024년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단순히 부상하는 강대국으로 묘사하지 않고, 국제 및 지역 질서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려는 행위자로 명시한다. 특히 중국이 제시하는 '세계 수준(world-class) 군사력' 목표는 미국식 군사 모델의 모방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이익과 전쟁 양상의 변화에 부합하는 독자적 군사 현대화 경로를 통해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동등성 또는 우월성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대중 인식에서 중요한 특징은 중국의 의도보다 역량 분석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미국이 관여(engagement)를 확대하며 중국이 국제 규범을 수용하는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로 전환할 가능성을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의 공세적 행동이 인태 지역 전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이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할 의지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특히 해양 질서와 군사 영역에서 이러한 인식이 강화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는 미·중 관계를 '기대와 실망'의 서사로 설명하면서도, 현재의 전략 환경을 중국의 선택이 아니라 중국이 이미 구축한 역량과 행동 패턴의 결과로 해석하는 접근이다.

해군력과 관련해서 미국은 이중적인 평가를 제시한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역외 지역에서 해군 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상업 및 해양 이익 보호라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인정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해외 군사 거점, 항만 접근권, 군수 보급 네트워크가 단순한 방어 목적을 넘어 미군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전진 배치 인프라로 활용될 가능성을 강하게 경계한다. 미국의 시각에서 중국의 대양해군화는 단순한 함정 수 증가가 아니라, 전구 외 작전(operations beyond the theater)과 장기적 힘의 투사(power projection)를 염두에 둔 구조적 변화로 인식된다.

대만 문제에서 이러한 질서 인식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 국방부 보고서는 중국의 회색지대(gray-zone) 전략을 현상 유지적 긴장 관리가 아니라, 무력 사용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고조시키는 신호 체계로 해석한다. 군사훈련, 정치적 압박, 정보전이 결합된 중국의 행동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로 규정되며, 이는 오히려 무력 사용 의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작동한다고 평가된다. 이와 같은 인식은 중국의 행동을 단발적 도발이 아닌, 질서 변경을 향한 단계적 접근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태평양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지목하는 중국의 구조적 취약점 역시 질서 인식과 연결된다. 보고서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가 해상 수송로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미국과 동맹국의 해양 통제 능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한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 중앙아시아와의 육상 파이프라인 확대와 에너지 수송 경로 다변화를 추진하는 배경 중 하나로 해석되며, 미국은 이를 중국이 전쟁 지속 능력과 후방 안정성까지 포함한 종합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이해한다. 또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중국 군사 현대화 분야는 군수 및 조선 산업의 자립이다. 중국이 함정용 엔진과 같은 핵심 구성 요소를 국내 생산 체계로 통합하고 있다는 점은, 서태평양에서 유지되어 온 미국의 해군력 우위가 중장기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구조적 변화로 인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첫 해인 2025년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더욱 강화된다. 미국은 중국의 서태평양 군사 활동을 단기적 전술 움직임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 전환의 일부로 해석한다. 보고서는 현재 중국의 군사적 초점이 제1도련선에 집중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군사 및 경제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경우 그 영향력이 인태 지역을 넘어 전 지구적 수준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경고한다.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 Navy, PLA)을 중국의 세계 최강국 지위 대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정함으로써,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단순한 방어적 조치로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거나 굴욕을 주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미국의 목표는 서태평양에서 어느 국가도 미국이나 동맹국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침략이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의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의 군사적 의도를 단정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중국이 이미 구축하고 있는 역량·산업·전구 전략의 결합 자체를 위협의 핵심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3) 동맹과 파트너를 통한 집단 대응과 억지

미국의 서태평양 인식의 세 번째 축은 앞선 두 축에서 형성된 공간 인식과 질서 인식을 어떻게 실행 전략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 미국은 중국을 서태평양 질서의 도전자로 인식하고 서태평양을 핵심 전략 공간으로 규정하는 만큼, 그 대응 방식에서도 단독 개입이나 일회적 군사력 투사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신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를 결합한 네트워크형 집단 대응을 서태평양 전략의 핵심 실행 원리로 설정한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이 서태평양 안보를 더 이상 고정된 블록 대 블록의 대결 구도로 관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2022년 인태 전략 문서는 이 지역의 안보를 동맹 중심의 경직된 구조가 아니라, 유연하고 중첩적인 연합의 그물망(latticework of coalitions)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명시한다. 이는 미국이 역내 국가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군사적 헌신을 요구하기보다는, 각국의 역량과 이해에 맞는 역할 분담을 통해 집단적 억지력을 축적하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실행 전략의 중심 개념이 바로 통합 억지(integrated deterrence)이다. 미국은 군사력만으로 억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 외교, 경제, 기술, 정보 영역을 결합한 다차원적 억지를 강조한다. 통합 억지는 미군 단독의 전력 우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동맹국의 군사력, 경제적 영향력, 기술적 강점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중국과의 경쟁이 단일 전구나 단일 영역에서 결정되지 않으며, 서태평양 전체의 전략 환경 속에서 누적적으로 형성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미국은 강압 대응(counter-coercion)을 핵심 실행 수단으로 제시한다. 이는 중국이 무력 충돌 이전 단계에서 활용하는 회색지대 전략과 경제적, 정치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으로, 군사적 충돌을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현상 변경의 비용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은 서태평양에서의 전략 경쟁이 전면전보다는 저강도 압박과 규범 침식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고 인식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 능력, 정보 공유,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을 택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실행 방식은 유지되며, 일부 영역에서는 더욱 명시화된다. 『미국 국가안보전략(2025)』은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책임 및 비용 분담을 강조하며, 서태평양에서의 안보 부담을 공동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한다

2. 중국의 서태평양 인식 및 전략

중국의 서태평양 인식은 국방백서와 전략 문서를 통해 비교적 일관된 논리 구조 속에서 발전해 왔다. 연도별로 강조점에는 변화가 존재하나, 중국은 자국의 군 현대화와 해군력 확대를 패권 추구가 아닌 방어적 정당화와 국가 발전 보호의 논리로 구성해 왔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의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에게 서태평양은 국가 발전 환경과 체제 안정이 직결되는 공간이며, 둘째, 군 현대화의 정당화를 반패권, 적극적 방어 담론을 통해 체계화하고, 셋째, 역내 안보 불안정의 원인을 동맹 정치와 블록화 논리에서 찾고 이에 대응해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제시하는 것이다.

(1) 국가 발전과 생존의 교차

『2010 중국 국방백서(China's National Defense in 2010)』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2011)는 군 현대화를 국가 발전에 종속된 과제로 설정하며, PLA의 발전이 국내 경제 성장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에 기여한다고 강조한다. 이 시기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특히 서태평양을 중국의 발전 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할 핵심 공간으로 인식하며, 군사력 강화의 목적을 외부로의 영향력 투사가 아닌 안정적 발전의 보장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People's Liberation Army Navy, PLAN)의 역할은 연안 방어에 머물지 않고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2010년 백서는 PLAN의 핵심 임무를 해상 방위와 억제력 유지로 규정하면서도, 원해 작전 능력과 비전통적 안보 위협 대응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 다만 이 시기의 원해 능력은 공세적 전력 투사가 아니라, 해상교통로(Sea Lanes of Communications, SLOC) 보호와 전략적 완충 공간 확보라는 방어적 논리로 정당화된다..

(2) 반패권 담론과 적극적 방어 전략

『2015 중국의 군사 전략 (China's Military Strategy)』(Xinhua, 2015)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중국몽)의 실현과 평화발전 서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중국이 결코 패권이나 확장을 추구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동시에 강건한 국방과 강군 건설을 국가 발전과 평화 수호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력 강화의 불가피성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한다. 이 문서에서 PLA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된 전쟁 대비(Preparation for Military Struggle, PMS)와 민군융합(Civil-Military Integration, CMI)은 중국의 서태평양 전략이 한 단계 진전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은 아태 지역 안보 악화의 원인을 자국의 팽창이 아니라, 미국의 재균형 전략,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 남중국해에서의 외부 개입 등 외부 요인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해양 권익 수호는 장기적 국가 과제로 격상되며, PLAN의 임무 역시 연안 방어와 원해 보호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재정의된다.

『2019 중국의 새 시대 국방백서 (China's National Defense in the New Era)』(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RC, 2019)에서는 이러한 반패권 담론이 더욱 강화된다. 백서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패권을 추구한 적이 없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동시에, 아태 지역의 불안정을 미국의 군사 활동 확대와 동맹 강화의 결과로 규정한다. 이때 적극적 방어(active defense) 개념은 중국 군사전략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되며,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되, 공격받으면 반드시 반격한다(不犯我者我不犯, 犯我者必犯)”는 공식은 방어성을 강조하면서도 능동적 대응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기능한다. 특히 해양 안보와 대만 통일 문제는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의 문제로 격상되며, 원해 능력 확대와 해양 대비태세 강화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 된다.

(3) 동맹 정치 비판과 총체적 안보관

중국의 서태평양 인식의 세 번째 축은 역내 안보 불안정의 원인을 동맹 정치와 블록화 논리에서 찾고, 이에 대응해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국의 새 시대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in China in the New Era, 新时代的中国国家安全)』(Xinhua, 2025)는 아태 지역이 이미 대국 경쟁의 중심이 되었으며, 일부 국가들이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배타적 소집단을 형성함으로써 지역 긴장을 구조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 프레이밍은 서태평양에서의 안보 문제를 중국의 팽창이 아닌, 미국 주도의 동맹 정치가 초래한 결과로 전환시키는 담론 전략과 연결된다.

이 문서에서 제시되는 총체적 국가안보관은 군사 영역을 넘어 정치, 경제, 기술, 데이터, 사회, 생태 영역까지 안보의 외연을 확장한다. 중국은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보의 선순환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서태평양 전략 역시 단순한 군사 대응이 아닌 체제 안정과 발전 지속을 위한 종합 전략으로 위치시킨다. 동시에 중국은 중미 관계가 상호존중과 평화공존의 원칙 아래 관리되어야 한

다고 강조하며, 신냉전과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서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서태평양은 미·중 간 단순한 세력 경쟁의 무대라기보다 상이한 안보 인식과 정당화 논리가 충돌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에게 서태평양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유지, 동맹 네트워크의 신뢰성 확보, 그리고 역내 세력 균형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통제되어야 할 질서 관리의 공간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은 규칙과 규범, 동맹과 파트너십, 통합 억지와 전방 배치를 핵심 축으로 구성되며, 중국의 부상은 기존 질서에 대한 구조적 도전으로 인식된다. 이로써 서태평양은 미국에게 글로벌 리더십과 동맹 및 파트너에 대한 신뢰성이 시험되는 전초 무대이자,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할 핵심 전략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반면 중국에게 서태평양은 단순한 영향력 확장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발전과 주권, 체제 안정의 수호에 직결되는 생존적 전략 공간에 가깝다. 중국은 군 현대화와 해군력 확대를 패권 추구가 아닌 방어적 정당화와 국가 이익 보호의 논리로 구성하며, 역내 안보 불안정의 주요 원인을 미국 주도의 동맹 정치와 군사적 개입에서 찾는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서태평양은 중국의 해양 주권과 안보 이익이 연속적으로 투사되는 핵심 공간이 된다.⁴

결국 중국이 서태평양을 자국의 주권과 안보가 직결된 생존적 전략 공간으로 인식하는 반면, 미국은 동맹의 안정과 지역 질서를 매개로 개입의 필요성을 구성하며 이를 관리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인식의 비대칭성과 정당화 방식의 차이는 단순한 전략 선택의 차이를 넘어, 동일한 행위에 대한 해석과 평가의 간극으로 확장된다. 즉, 동일한 군사 활동이나 전략적 조치가 중국에게는 방어와 주권 수호로, 미국에게는 현상 변경과 규범 기반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읽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해석의 간극이 양국의 서태평양 전략에 대해 상이한 평가를 낳는 동시에, 특정 부분에서는 수렴으로 이어지는 논의를 살펴본다.

III. 미·중 전략 인식의 비대칭과 수렴

1. 중국 위협 강조 시각

중국을 공세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은 미·중 경쟁을 미국이 주도해 온 지역 질서를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고 이를 대체하려는 장기적 전략 경쟁으로 인식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 관점에서 중국은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방어적 행위자가 아니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질서 전환을 시도하는 수정주의 행위자로 규정된다. 이러한 시각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주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⁴

첫째, 공세적 시각은 중국의 전략 목표를 단기적 영향력 확대가 아닌,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국으로의 부상으로 규정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동맹 체제는 중국의 목표 달성을 제약하는 장애물로 인식된다.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 2021)는 중국의 국력 증대 그 자체보다, 그 부상이 아시아에서 새로운 패권적 세력균형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핵심 우려는 중국이 역내 국가들과 결집해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잠식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에 불리한 역내 질서를 형성하는 시나리오이다. 이에 따라 미국 대전략의 목표는 중국이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부 방어(denial defense)’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한편,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2021)는 중국이 항상 수정주의적 목표를 지니고 있었음을 지적하며, 중국의 성장을 허용한 것 미국의 가장 큰 실수라고 비판한다. 러시 도시(Rush Doshi, 2021) 역시 중국의 부상을 지역 질서 약화를 넘어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단계적 전략으로 분석하며, 대양해군 건설을 그 핵심 수단으로 꼽는다. 이러한 시각에서 중국의 행동을 단순한 방어적 대응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과소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중국의 방어적 담론은 실제 공격적 의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해석은 대만 문제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여기서 대만은 단순한 주권 분쟁지를 넘어 질서 전환의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된다. 케빈 러드(Kevin Rudd, 2025)는 중국을 통일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무력 사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행위자로 분석한다. 그는 전쟁은 선호되는 선택이 아닐 수 있으나, 성공 가능성과 비용이 감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 지도부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한다.

매튜 포팅거(Matthew Pottinger, 2024) 또한 대만 통일을 중국 전략의 종착점이 아니라, 더 큰 권력 투사의 출발점으로 해석한다. 그는 시진핑 지도부가 대만 통일을 중국몽의 필수 조건으로 보고 있으며, 대만 장악 이후에는 중국이 동아시아 지배력을 바탕으로 군사 자원을 더 광범위한 지역으로 투사할 것이라 전망한다.⁴

셋째, 미국의 미온적 대응이 결과적으로 중국의 현상 변경을 돕고 있다는 비판이다. 로버트 블랙윌(Robert Balckwill, 2020)은 과거 미국이 경제적 통합을 통해 중국이 현상유지 세력으로 포섭하려 했던 기대를 전략적 오판으로 규정한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역내 패권 출현을 방지하려는 전통적 지정학적 목표를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나아가 조너선 친과 마티아스 알리(Jonathan Czin & Matthias Allie, 2025)는 중동 및 유럽에서의 전쟁과 보호주의 강화 등으로 인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집중력 분산을 틈타 서태평양에서 군사 및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미국이 일관된 억지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무대응의 축적은 중국의 점진적 현상 변경 전략인 ‘살라미 전술’을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중국의 공세성을 더욱 강화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는 미국의 확실한 개입 없이는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가 더욱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

2. 신중·절제적 접근

중국을 공세적으로 규정하는 시각과 달리, 미국 내에서는 미·중 경쟁을 불가피한 충돌이나 패권 전쟁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경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신중한 접근이 제기되어 왔다. 이 시각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해양 활동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지만, 이를 곧바로 패권 도전이나 전쟁 불가피성으로 연결하는 결정론적 시각을 경계한다. 핵심 관심사는 중국의 의도 그 자체보다, 미·중 양측이 상대의 행동을 최악의 경우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누적되는 오판(misperception)이며, 이러한 오판이 오히려 충돌 가능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관점에서 미국의 전략은 중국을 굴복시키거나 봉쇄하는 데 있지 않고, 경쟁을 관리하고 위기를 통제하며, 불필요한 군사적 비약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시각의 핵심 주장은 첫째, 중국이 자신의 군사적·경제적 제약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관점에서 중국의 군 현대화는 패권 장악을 위한 공격적 수단이 라기보다, 제한된 자원 속에서 선택적으로 추진되는 장기적 역량 축적 과정에 가깝다. 에릭 헤긴보담(Eric Heginbotham)은 중국이 미·중 간 군사력 격차의 축소를 인지하면서도 이를 절대적 우위로 과신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중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기술적 한계와 구조적 결함에 대한 경계심이 존재하며, 시진핑 지도부가 반부패를 포함한 강도 높은 군 개혁을 지속해 온 것 역시 이러한 비판적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중국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1.5~2%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면적인 군비 경쟁이 경제 성장과 체제 안정에 초래할 부담을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중국의 ‘2050년 세계 수준의 군대’ 목표는 미국을 전면적으로 압도하려는 의도보다는, 특정 영역에서의 질적 동등성과 효율성 확보를 지향하는 선택적 경쟁의 산물로 풀이된다. 이는 중국을 무조건적인 패권 추구자로 간주하는 단순한 공세 담론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미·중 경쟁을 필연적 충돌로 상정하는 결정론적 프레임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가린다는 인식이다. 이 관점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미·중 관계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접근을 비판하며, 경쟁의 결과는 구조적 숙명이 아니라 정책적 선택과 상호 인식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중국 학자 링 성리와 뤄 휘이(Ling Shenli and Lv Huiyi, 2019)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체계적으로 제기한다. 이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단순히 신흥국 아테네에 대한 스파르타의 공포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제체제와 국가 전략, 지도자의 선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음을 강조한다. 이를 현대 미·중 관계에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은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제체제 차원에서 중국은 아직 미국과 대등한 패권적 역량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국가 수준에서도 아테 지역 국가들이 안보에서는 미국과, 경제에서는 중국과 협력하는 모호성을 유지하며 오히려 양국의 긴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에게 미·중 경쟁은 필연적 전쟁이 아니라, 관리되고 조절될 수 있는 경쟁인 것이다.

마이클 오핸런(Michael O'Hanlon, 2021) 역시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곧 미국 패권의 붕괴로 직결된다는 담론을 경계한다. 그는 중국 스스로도 대만 침공과 같은 선택을 “우주적 규모의 도박”이자 국제사회의 강력한 응징을 부르는 극단적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미국 당국이 과도한 위협 수사를 자제하고 신중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중국의 군사적 실체보다 미·중 양측의 오판과 과잉 위협 인식이 더 큰 실존적 위협이라는 점이다. 마이클 스웨인과 앤드루 에릭슨(Michael Swaine & Andrew Erickson, 2023)은 미국의 대중 전략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제로섬적 위협 인식에 경도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책임 있는 절제(responsible restraint)’를 대안으로 제안한다. 이들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존립을 위협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며, 핵무기 또한 공격 수단이 아니라 억지 수단으로 운용하고 있다. 재래식 군사력 역시 서태평양 일부에서 제한적 우려를 야기할 수는 있으나,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치르며 지역 패권을 장악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가장 중대한 위협은 중국의 공격 의지 그 자체보다, 상호 불신 속에서 누적되는 오판의 가능성이다. 이는 중국을 필연적인 질서 전환의 주체로 규정하는 공세적 시각과 근본적으로 대비되며, 서태평양에서의 미·중 갈등이 힘의 대결을 넘어 해석과 정당화의 싸움임을 보여준다.

3. 미·중 군사 관계의 변화와 인식의 수렴

지난 20년간 미·중 간 군사력 관계는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지속되어 온 미국의 압도적 군사 우위에 대하여 중국의 군사 현대화는 실질적인 도전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군사력 격차의 축소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합의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수렴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미·중 군사력 격차의 실질적 축소에 대한 인정이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군사비 지출이 많은 국가로 자리 잡았다. 2013년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2024년까지 중국의 국방 예산은 약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4년 기준 공식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2,310억 달러이나, 실제 총 국방지출은 약 3,040억~2,770억 달러로 추정된다(The White House, 2025). 2012년 미국의 약 1/6 수준이었던 중국의 국방비는 2024년 약 1/3 수준까지 따라잡았다(Funalole & Hart, 2025). 이는 국방비 기준 미·중 간 격차 역시 지난 10여 년간 현저히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 국방부는 군사력 격차 축소라는 주장 자체를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는 대신, 군사력 증강의 동기를 방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2025년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의 군사적 의도를 왜곡하고 그 위협을 과장한다고 비판했다(Xinhuanet, 2025). 이러한 서술 방식은 군사능력의 증대라는 객관적 사실은 수용하되, 그 성격이 방어적임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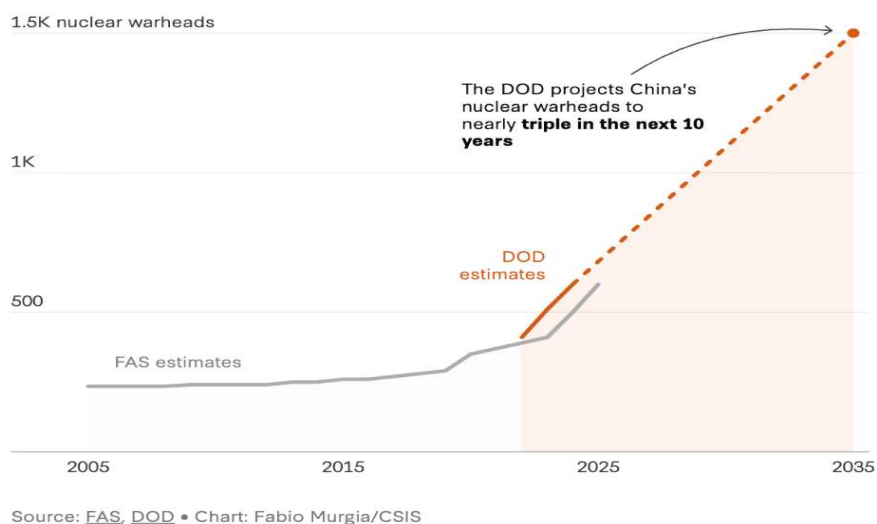
비난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격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전 지구적 차원의 절대적 우위를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비는 약 9,970억 달러로 중국(약 3,140억 달러)의 약 3.2배에 달한다. 크리스토퍼 키비스(Christopher S. Chivvis, 2024)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가 미국의 세계적 차원의 군사력에 제기하는 위협이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맞먹는 전투 역량을 갖춘 글로벌 해군을 건설하고 기지망을 확충하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과 막대한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해군이 성장하더라도 미국이 지난 75년간 구축해 온 수준에 도달하기는 단기간 내에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벨퍼 센터(Belfer Center) 또한 미국 우위의 핵심을 구조적 요소에서 찾는다. 미국은 전 세계 50개 이상의 동맹국과 집단방위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전력 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핵탄두 수량에서 미국은 약 3,700기로 중국(약 600기)을 압도한다(Alison & Unterman, 2021). 따라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세계적 차원의 군사력 역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며, 이는 미국의 우위가 지역적으로는 도전 받을 수 있지만 체계 전반에서는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다.

셋째, 중국의 핵 전력 확대 및 제1도련선 내 영향력 증대이다. 전 지구적 우위와 별개로, 서태평양 지역 수준에서의 군사 균형은 중국에 유리하게 재편되고 있다. 미국방부 2025년 보고서는 중국의 핵탄두 수가 2020년 약 200기에서 2024년 약 600기로 급증했으며, 2035년에는 1,500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1. 중국 핵탄두 비축량 현황 및 전망]⁴⁾



(출처: CSIS(2025))⁴⁾

중국은 군사력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미국 및 동맹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반접근/지역거부(A2/AD) 역량과 합동작전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PLA의 훈련이 대만 유사시를 중심으로 전개됨에 따라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 내에서의 실질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위기 시 미국의 개입 비용을 상승시켜 서태평양 일대의 군사 균형을 중국에 유리하게 이끄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로스타드(Grostad, 2025)는 제1도련선 내 중국의 A2/AD 역량 강화가 지역 내 미국의 작전 수행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2022년 일본의 국방비 증액 결정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의 2024 아시아 파워 지수(Asia Power Index)에 따르면, 중국은 아시아 지역 군사 태세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상회하였으며, 아태 지역 내 미국의 군사력 우위는 2012년 대비 2025년 기준 2/3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Lowy Institute, 2024).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중국 군사 전문가 존 컬버(John Culver) 또한 서태평양에 주둔한 미군 전력의 더 이상 중국 견제에 대한 안정적인 자산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Culver & Czin, 2025). 이는 서태평양에서의 군사 균형이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 우위에 기반한 안정 상태가 아니라, 비용과 위험을 동반한 경쟁적 균형 국면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중국 위협을 강조하는 시각은 미·중 경쟁을 질서 전환을 둘러싼 충돌로 이해한다. 이 관점에서 중국은 단순히 현상을 방어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단계적이고 계산된 방식으로 미국이 주도해 온 지역 질서를 약화시키고 이를 대체하려는 수정주의 행위자로 규정된다. 중국의 군 현대화, 해군력 확대, 대만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개별 사안이 아니라 장기 전략의 일부로 해석되며, 특히 대만은 질서 전환의 분기점이자 미국의 전략적 신뢰성을 시험하는 핵심 공간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시각은 중국의 방어적 담론을 실제 의도를 숨기는 것으로 간주하며, 미국의 미온적 대응이나 전략적 모호성이 오히려 중국의 점진적 현상 변형을 용인해 왔다고 비판한다. 결과적으로 이 접근은 강력하고 명확한 억지와 개입 의지를 통해서만 중국의 공세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로 이어진다.

반면 신중·절제적 접근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해양 활동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곧바로 전쟁 불가피성이나 패권 전쟁으로 연결하는 결정론적 해석을 경계한다. 이 관점은 중국이 자신의 구조적 제약과 비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군사 충돌이 초래할 정치·경제적 부담을 감내할 의지가 제한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중국 내부의 군 개혁, 제한적인 국방비 운용, 핵 전력의 억지적 성격은 중국이 무제한적 패권 추구보다는 관리 가능한 경쟁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요소로 해석된다. 이 시각에서 미·중 경쟁의 핵심 위협은 중국의 공격 의지 자체보다, 양측이 상대의 행동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누적되는 오판과 과잉 위협 인식이다. 따라서 전략의 목표는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봉쇄하는 데 있기보다, 경쟁을 관리하고 위기를 통제하며, 군사적 비약을 방지하는 데에 놓인다.

중요한 점은 이 두 시각이 단순히 낙관과 비관의 대립이 아니라, 각각 상이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위협을 강조하는 시각은 중국의 능력과 의도를 과소평가할 위험을 경계함으로써 억지의 중요성을 환기하지만, 동시에 과잉 대응과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반대로 신중·절제적 접근은 오판과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려는 장점을 지니지만, 중국의 점진적 현상 변경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할 경우 전략적 기정사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즉, 두 시각은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 각기 다른 차원의 위험을 조명하는 경쟁적 해석 틀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중 군사 관계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인식 수렴이 관찰된다. 양국은 지난 20여 년간 군사력 격차가 실질적으로 축소되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미국이 전 지구적 차원의 절대적 우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 역시 공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의 핵 전력 확대와 제1도련선 내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증대는 서태평양이라는 지역적 맥락에서 군사 균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게는 개입 비용 상승과 억지 신뢰성 약화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중국에게는 방어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근거로 작동한다.

결국 본 장의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서태평양에서의 미·중 경쟁이 단순한 군사력 대결이나 패권 교체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이다. 양국은 모두 스스로를 방어적 행위자로 인식하면서도, 상대의 행동을 공세적으로 해석하는 공통된 인식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비대칭성은 위기 상황에서 오판과 관리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며, 동시에 군사력 격차의 변화라는 구조적 현실 속에서 양측이 일정 부분 인식을 조정하고 수렴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IV. 결론 및 전망

본 연구는 서태평양에서 전개되는 미·중 경쟁을 단순한 군사적 대치나 패권 경쟁의 결과로 환원하기보다, 양국이 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정당화하는지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서태평양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양보하기 어려운 핵심 전략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그 의미와 기능은 서로 다른 논리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동일한 공간을 둘러싼 경쟁임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서태평양을 전혀 다른 문제의식과 전략적 언어로 이해하고 있었다.

중국에게 서태평양은 해양 주권, 국가 발전, 체제 안정이 결합된 ‘생존의 공간’에 가깝다. 이 인식 속에서 군 현대화와 해군력 확대는 대외적 팽창이나 세력 확장 수단이라기보다,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정당화된다. 대만 문제 역시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에 위치한다. 중국에게 대만은 단순한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라, 미완의 통일 과제를 완수해야 하는 주권적·역사적 문제로 구성되며, 이는 외부

개입이 용인되기 어려운 핵심 이익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서사는 중국의 군사적 행동을 스스로에게는 불가피하고 정당한 선택으로 의미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미국에게 서태평양은 동맹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작동 여부가 시험되는 ‘관리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안정이 단지 역내 질서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리더십과 국제 규범의 유지와 직결된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군사적 행동은 개별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질서 전반에 대한 구조적 도전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억제와 개입은 선택 가능한 정책 옵션이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적 대응으로 정당화된다. 이처럼 미국의 서태평양 인식은 중국의 행동을 보다 넓은 질서 차원에서 의미화하며, 위협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공간 인식의 비대칭성은 미·중 전략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로 연결된다. 중국 위협을 강조하는 시각은 중국의 부상을 기존 질서를 전환하려는 장기 전략으로 해석하며, 대만 문제를 미국의 전략적 신뢰성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 관점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단순한 지역 현상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질서 전반을 잠식할 수 있는 구조적 도전으로 읽힌다. 반면 중국 위협의 과장된 해석을 경계하는 시각은 중국이 직면한 구조적 제약과 제한된 전략 목표에 보다 주목한다. 이들은 중국의 행동이 반드시 전면적 패권 추구로 귀결된다고 보기보다는, 경쟁을 관리 가능한 범위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안보 딜레마가 증폭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중요한 점은 이 두 시각이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 상이한 위협을 내포한다는 사실이다. 중국 위협을 강조하는 접근은 상대의 능력과 의도를 과대 해석함으로써 오판과 과잉 대응의 가능성을 동반할 수 있다. 반대로 위협의 과장을 경계하는 접근은 중국의 군사적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구조적 영향을 과소평가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처럼 상반된 평가 방식은 미·중 경쟁을 둘러싼 정책 선택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중 간 군사 관계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인식 수렴이 관찰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국은 지난 20여 년간 군사력 격차가 실질적으로 축소되었다는 점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의 전 지구적 차원의 우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 역시 공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의 핵 전력 확대와 제1도련선 내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증대 역시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경쟁의 존재 자체보다는, 변화된 군사 환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차 공통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태평양의 본질적 문제는 중국의 ‘패권 추구’ 여부나 미국의 ‘과잉 대응’ 여부를 가르는 이분법적 판단에 있기보다, 양측이 스스로를 방어적 행위자로 간주하면서도 상대의 행동을 공세로 해석하는 구조가 어떻게 오판과 위기 관리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있다. 다시 말해, 위기의 원천은 단일 행위자의 의도라기보다, 상호 인식과 해석이 축적되며 만들어내는 구조적 긴장에 가깝다. 이 점에서 최근의 전략적 안정성 논의와 군사적 소통 채널의 복원은 경쟁의 종식을 의미하기보다는, 변화된

현실을 관리 가능한 범위로 통제하려는 현실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서태평양 문제는 군사력 격차의 축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미·중이 상호 인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미·중은 스스로를 방어적 행위자로 규정하면서도 상대의 행동을 공세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 구조가 위기 상황에서의 오판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점차 인식하고 있다.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그 경쟁의 양상과 결과는 상호 인식의 관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태평양은 미·중 간 전략 경쟁의 전선인 동시에, 양국의 인식이 부분적으로 수렴되고 조정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고문헌]

Alison, Graham and Unterman, G. Jonah. 2021. The Great Military Rivalry: China vs the U.S. Belfer Center. Avoiding Great Power War Project. ↵

Blackwill, Robert D. 2020. Implementing Grand Strategy toward Chin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ouncil Special Report No. 85. New York. ↵

Brands, Hal, and Cooper, Zac. 2024. “Dilemmas of Deterrence: The United States’ Smart New Strategy Has Six Daunting Trade-off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https://www.csis.org/analysis/dilemmas-deterrence-united-states-smart-new-strategy-has-six-daunting-trade-offs> (검색일: 2025년 12월 8일)↵

Colby, Elbridge A. 2021. The Strategy of Denial: American Defense in an Age of Great Power Conflic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Foot, Rosemary, et al. 2022. “Chinese Perceptions of America’s Indo-Pacific Strategy.” CSIS (May 12).

<https://interpret.csis.org/chinese-perceptions-of-americas-indo-pacific-strategy/> (검색일: 2025년 12월 8일)↵

Funalole, Matthew and Hart, Brian. 2025. “China’s Military in 10 Charts.” CSIS (September 2). <https://www.csis.org/analysis/chinas-military-10-charts> (검색일: 2025년 12월 28일)↵

Ge, Tengfei. 2021. “Disputes about the ‘Indo-Pacific’ Regional Security Order and China’s Vision of Regional Order.” CSIS (May 3).

<https://interpret.csis.org/translations/disputes-about-the-indo-pacific-regional-security-order-and-chinas-vision-of-regional-order/> (검색일: 2025년 12월 8일)↵

Grostad, Kristin. 2025. “All Politics is local”: the U.S.–China balance in the First Island Chain and Japan’s defense transformation. Asian Security 21, 1: 1–15.↵

Heginbotham, Eric. 2021. “Chinese Views of the Military Balance in the Western Pacific.” CSIS. China Maritime Reports, 14. ↵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2011. “China’s National Defense in 2010.”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rch 31).

https://english.www.gov.cn/archive/white_paper/2014/09/09/content_281474986284525.htm (검색일: 2025년 11월 17일)↵

Liang, Xiao et al. 2025.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24.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 Fact Sheet (April). ↵

Ling, Shengli, and Lv, Huiyi. 2019. “Why Are China and the United States Not Destined to Fall into the ‘Thucydides’s Trap’?” China Quarterly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4, 4: 495–514.↵

Lowy Institute. 2024. “US widens lead in Asian power stakes, but loses ground to China on military capability.” Lowy Institute (September 22).

<https://www.lowyinstitute.org/us-widens-lead-asian-power-stakes-loses-ground-china-military-capability> (검색일: 2026년 1월 2일)[↵]

Mearsheimer, John J. 2021. “The Inevitable Rivalry: America, China, and the Tragedy of Great-Power Politics.” Foreign Affairs (October 19).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21-10-19/inevitable-rivalry-cold-war> (검색일: 2025년 11월 17일)[↵]

O’Hanlon, Michael. 2021. “China Is Definitely on the Rise. But Don’t Write Off American Dominance Just Yet.” The Brookings Institution (October 28).

<https://www.brookings.edu/articles/china-is-definitely-on-the-rise-but-dont-write-off-american-dominance-just-yet/> (검색일: 2025년 12월 8일)[↵]

Pottinger, Matthew. 2024. The Boiling Moat: Urgent Steps to Defend Taiwan.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ress. Chapters 1–3.[↵]

Rudd, Kevin. 2025. “The United States, China, and a Strategy of ‘Deterrence through Denial.’”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https://asiasociety.org/policy-institute/united-states-china-and-strategy-deterrence-through-denial> (검색일: 2025년 12월 8일)[↵]

Swaine, Michael, and Andrew Bacevich. 2023. A Restraint Approach to U.S.–China Relations: Reversing the Slide toward Crisis and Conflict. Quincy Paper 11.[↵]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China’s National Defense in the New Era.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

The White Hous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2022.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2025.

U.S. Department of Defense. 2024.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4.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2025.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5. Washington, DC.

Xinhua. 2015. “China’s Military Strategy (Full Text).”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27).

https://english.www.gov.cn/archive/white_paper/2015/05/27/content_281475115610833.htm (검색일: 2025년 11월 17일)

Xinhua. 2025. “新时代的中國國家安全.”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12).

http://www.scio.gov.cn/zfbps/zfbps_2279/202505/t20250512_894771.html (검색일: 2025년 11월 14일)

Xinhua. 2025. "Defense ministry denounces U.S. report hyping "China military threat"."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cember 25).
<http://eng.mod.gov.cn/2025xb/P/16429179.html> (검색일: 2025년 12월 28일)

중일전쟁 전후 일본과 조선의 보편 근대에 대한 도전: 근대 초극론과 서인식의 역사철학 글로버 가든/규슈 국립박물관

최은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I. 서론

1. 소개 및 역사적 배경

본 페이퍼는 중일전쟁을 전후한 시기,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대표적 국제정치 사상가들이 전개한 근대성 비판과 대안적 세계질서 구상을 비교 분석한다. E.H.카가 지적한 국제정치학적 위기는 1940년대에 이르러 더욱 복합적인 양태로 심화되었다. 카는 당시 월슨주의에 기초한 국제정치학이 국제연맹과 같이, 권력적 요소를 망각한 채 “유토피아적” 이상과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질서를 산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국제법이 도덕적 우위성을 가진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국제법이 실제로는 단지 헤게모니 유지를 정당화하는 도구로써 작용한다고 믿었다. 카의 이러한 비판은 동시대 추측국 지식인들의 문제의식과 강하게 공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칼 슈미트는 자유주의와 합리주의를 표방한 근대적 세계관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인식했다. 그는 홉스와 칸트에서 출발한 기계론적 국가관이 국내적으로는 주권과 정치적 영역이 결여된 노모스를 산출했고, 국제적으로는 팽창주의적 성격을 띤 해양적 노모스를 낳았다고 보았다. 게다가, 이러한 국내적 노모스는 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추세와 결합하면서, 기계론적 국가관이 국경을 넘어 월슨식 국제법이라는 기제를 통해 하나의 세계질서적 원칙으로 전회할 조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슈미트는 내적으로는 예외의 영역을 인정하여 주권자를 재발굴할 것을 촉구했고, 외적으로는 획정 가능한 육지에 기반한 대지의 노모스로의 회귀를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전환만이 세계가 무질서로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계적 결정주의 속에서 소멸되어 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 보았다. 나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해야 할 신국제질서는 타 세력이 침투할 수 없는 지역 강대국들의 성역, 즉 대공간(Grossraum)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공간은 먼로 독트린과 유사하게, 지리적 인접성과 이념적 동질성을 원칙으로 결속될 예정이었다. 이런 관점에

서, 슈미트는 독일의 총통을 자신이 갈망하던 주권자의 현현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자기파괴적인 근대성의 점진적 엄습을 저지하기 위한 숙명적 전쟁으로 해석했다. 물론 슈미트의 국제정치사상을 단순히 가치 편향적인 “전체주의”라는 용어로 환원해버리는 데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를 個과 衆의 대립 구도에서 위치시킬 경우, 다분히 전의 우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개방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같은 시각 일본에서는, 니시다 기타로를 지적 지주로 삼은 교토학파가 고유한 국제정치사상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 니시다의 형이상학적 문제의식은 이른바 “역사철학적 전회”를 통해 구체화되었고, 그 관심의 초점 역시 無의 철학이라는 인식론적 고민에서, 서양과의 문화적 투쟁 속에서 일본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역사적, 정치적 의제로 이동했다. 1930-40년대에 이르러, 메이지 유신에서 출발한 일본의 서양화는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 자명해졌다. 메이지 이래 누적되어 온 서방의 영향은 단순한 기술적 도입이나 제도의 도구적 수용에 그치지 않았다. 일본은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통해 의회주의를 실험했고, 문화적 차원에서는 서구적 “개인주의”의 확산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종래 서구 문명은 중화 유교 문명을 대체할 새로운 문명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꾸준히 달성해야 할 모방의 대상으로 비춰져 왔지만, 30-40년대에 이르러 서양 문명에 심각한 모순이 내재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서방의 의회주의는 애초에 약속했던 공적 이익 증진이나 개인들의 합리적 토론을 실현하지 못한 채, 자이바츠財閥와 같은 조직화된 이익집단들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연극장으로 전락했다. 외적으로도, 마치 슈미트가 기계론적 국제법 질서의 확산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일본제국 역시 만몽(滿蒙)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연맹의 리튼조사단(Lytton Commission)과 충돌했으며, 최종적으로 국제연맹 탈퇴를 통해 월슨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로써 당대 일본인들에게 서양적 근대는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실패하고 있던 것으로 비춰졌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 내 깊숙이 침투한 유럽발 근대는 모방하거나 보완할 대상이 아니라, 초극해야 할 대상, 독(毒)으로 인식되었다. 이 지점에서 “역사라는 변화의 장에서 주체의 자기동일성”이라는 문제를 갖고 씨름했던 니시다의 역사철학은 당대의 지적 수요를 충족해주는 시의적절한 틀을 제공했다. 교토학파는 서양을 초극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을 니시다의 무(無)의 논리에서 찾으려고 했고,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맞물리면서, 서양적 국제정치질서의 결함을 일본적 원리로 대체함으로써 세계를 위기로부터 구제한다는 세계사적 철학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2. 선행연구

근대 초극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문제적인 정치적 행보로 인해 오랫동안 연구 대상에서 배제되었으며, 연구되더라도 흔히 다음 두 제한적인 틀 중 하나에 머물러 왔다. 한편으로, 이들의 사상은 단지 추축국 팽창주의의 정당화 논리 정도로만 치부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의 국제정치 구조, 또는 물질적, 환경적 조건으로 인해 그러한 아

이디어가 창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결정론적인 담론에 속했다. 따라서 교토학파의 국제정치철학은 유럽도 비유럽도 아닌 중간적 정체성 때문에 일본 내 일부 연구자를 제외하면 본격적으로 조명되지 못했다⁷³⁾. 서인식 역시 식민지 조선이라는 주변부적 위치로 인해 국내 학계를 제외하고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근대 초극론과 교토학파의 국제정치사상은 여전히 일본 국제정치학과 Japanese IR school의 전유물로 남아있다. 국내 학계에서도 근대 초극론의 국제정치사상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고, 교토학파 연구 역시 역사학과 철학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근대 초극론의 한국적 수용을 다룬 연구로는, 한일 역사 연구자들이 조선 지식인들의 근대 초극론에 대한 텍스트에 해제를 덧붙인 단행본이 대표적이다⁷⁴⁾. 나아가, 본 논문은 기존의 역사주의적 서술이나 사상사적 접근은 지양한다. 이는 역사적 맥락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 사상가들의 문제의식이 형성된 주변 조건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만, 이러한 맥락화 작업은 어디까지나 이들의 문제의식을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한 차원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한편으로 이들이 살았던 담론적 환경을 묘사함으로써 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조건을 그려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직면했던 지정학적 지형을 통해 존재론적 고민을 추론하는 데 목적을 둔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이들의 결론을 계보적으로 추적하여 책임 소재를 묻는 가치판단적 논의나, 이들이 처했던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그러한 결론을 도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는 결정론적/환원주의적 접근과는 거리를 둔다.

3. 문제의식

이 글은 교토학파와 서인식을 비교하는 작업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는 자각에서 출발한다. 첫째, 전간기라는 공통된 역사적 조건 속에서 이 사상가들은 자유주의적 근대성이 지닌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대체할 대안적 세계질서를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둘째, 약 한 세기에 가까운 시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직면했던 근대성의 위기는 오늘날 실질 국제정치가 마주한 지구적 위기와의 강하게 공명한다. 근대성과 근대 국제질서, 즉 베스트팔렌-홉스적 국가체제는 아직 건재한 반면, EU, UN, WTO 등 초국가적 협력체는 정체 상태에 빠져있다. 또한, 중국의 부상과 함께 자유주의/국가주의의 담론은 서구/비서구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배태되어 유통되고 있다. 특히 중국 국제정치학 학파(Chinese school of IR)의 자오팅양, 옌쉐통, 친야칭 등은 내용적 측면과 전개 방식 모두에서 교토학파와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을 보인다. 이는 전간기 국제정치사상가들이 당면했던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그들의 유산을 오늘날의 담론 속에서 여전히 재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인식의 문제의식은 새로운 보편주의적 국제질서론들이 20세기적 백가쟁명(百家爭鳴) 속에 횡행하는 가운데, 약소국의 개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한국의 시대초월적인 고민이 담

73) Thuy T. Do (2020) Between East and West: Japanese IR at a crossroads, The Pacific Review

74) 홍종욱, 식민지/근대 초극 연구회,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 초극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져 있다. 비록 식민지 한국과 21세기의 중견국 한국의 위치를 대등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주변부의 국제정치학은 한국을 초월한, 비강대국들의 보편적 문제의식을 대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근대초극론과 서인식의 현재적 함의를 논의하는 것은 한 편의 논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이 글은 단지 근대성의 역사철학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둘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교토학파와 서인식은 모두 서방적 근대와 자유주의에 기반한 당시 국제질서 도달했다고 인식했다. 다만, 이들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해당 국제질서를 초극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하여, 이를 대체할 대안적 국제질서의 구상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당대 국제질서를 하나의 역사적 단계로서 시간성의 축 위에 위치 지었으며, 동시에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공간 개념 역시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교토학파의 근대 초극론과 서인식의 근대초극론 비판은 공히 역사철학적 문제에 기반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해 본 페이지는 근대 초극론 좌담회와 서인식의 역사철학을 탐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국제정치사상에 관심을 두고 본 페이지를 읽는 독자라면 이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국제정치사상을 탐구하는 데 있어 시간성의 철학보다는 공간성의 철학이 더 적합한 창구가 아니냐는 의문이다. 특히, 왈츠식 구조적 현실주의나 커헤인-나이식 제도주의적 자유주의처럼, 시간성에 부차적 중요성만을 부여하는 이론들에 익숙한 현대 독자일수록 이러한 접근은 더더욱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본 페이지는 공간성과 역사철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공간 개념들은 때로는 시간성을 조각하고, 반대로 시간성이 역시 공간을 통해 구체화되고 조직되기 때문에, 공간성과 시간성은 상호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역사철학에서 일반적으로 공간성보다 시간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슈미트와 달리 근대 초극론 좌담회와 서인식은 공간 개념을 자각적으로 이론화하기보다는, 그것을 도구적으로, 시간성의 구체적인 발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공간성은 존재론을 추동하는 파생물인 역사를 매개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파생물의 파생물로 위치 지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따라서 본 페이지의 또 하나의 과제는 근대 초극론과 서인식의 저술 군데군데에 산발적으로 묻어들어가 있는 공간적 상상력을 발굴하고, 이를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시간성에 준하는 위치로 격상하여 유기적인 하나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근대초극론의 학자들과 서인식이 전간기 국제질서의 위기를 어떻게 진단했고, 어떤 방식으로 대안적 세계질서를 구축함으로써 이를 돌파하고자 했는지 고찰한다. 이들은 모두 서방발 근대를 위기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각자의 독특한 역사철학을 통해 세계사적 방향을 설정하면서, 자유주의의 패망이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것이다. 근대의 진보적 역사철학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세계사가 발전하는 실제 방향은 무엇이고, 역사의 역할과 주체는 누구인가? 특이점, 즉 역사의 종언은 존재하는가?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런 종착점을 달성하려는 방법과 구체적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처럼 근대성의 위기는 두 차

원에서 제기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셋은 각각 새로운 시공간 개념을 각자 제시한다. 근대초극론이 제시한 새로운 공간을 개(個)와 전(全)이라는 대립쌍으로 도식화한다면, 공영권이 식민지나 비강대국의 개체성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전개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서양식 전체주의나 일본식 동양주의 사이에서 서인식이 제시한 다원적 공간의식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 역시 본 논문의 핵심이 될 것이다.

II. 근대 초극론: 서양적 근대를 대체하기 위한 無의 대동아공영권

슈미트가 주권론과 법철학에서 출발한 반면, 교토학파(니시다 기타로)는 인식론에서 출발했다. 즉, 양자가 아주 다른 출발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대동아공영권이나 그로스라움과 같은 유사한 공간적 질서 구상을 산출했다. 이러한 수렴은 슈미트는 비교적 일관된 문제의식을 유지한 단독 사상가였던 데 반해, 교토학파는 복수의 사상가들로 구성된 집단이었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토학파는 구성원과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핵심 개념과 문제의식이 꾸준히 이동하는 과정을 겪었다. 교토학파의 전회는 크게 세 변곡점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니시다 기타로의 주체와 대상의 합일이라는 문제의식이다. 둘째는 그 합일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실제 세상에서 정체성의 동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초기의 인식론적·존재론적 관점을 역사적 공간의 문제로 이동시킨 전회다. 셋째는, 타나베 하지메의 “종의 논리”를 2세대가 국가주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교토학파에 국가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가미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토학파의 사상적 전회는 개체/전체라는 보편·추상적 수준에서, 점차 구체적이고 특수한 정치적 질서로 나아가는 방향을 취했다. 이런 경로는 슈미트와 교토학파의 종착점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차이점을 설명해준다. 슈미트는 처음부터 비교적 구체적인 정치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사상적 종착점인 그로스라움이나 라이히 역시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독일을 역사적 사명의 주체로 승화시키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슈미트는 완전한 특수성으로 귀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교토학파를 1세대와 2세대로 구분하는 이유와 그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들은 흔히 같은 교토학파로 묶이지만, 탐구영역과 문제의식 모두에서 1세대와 2세대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Heisig(2001)의 분류⁷⁵⁾를 따라 니시다 기타로와 타나베 하지메를 1세대 교토학파로 간주한다. 이 두 사상가 사이에도 사상적 차이가 상당하지만, 이들은 주로 형이상학적 영역에 머물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비해 2세대는 니시다 철학을 “사회과학화” 내지 “국제정치과학화”한 집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1세대에게 직접 사사받은 인물들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소위 “교토학파 사천왕”이라 불리는 4인은 모두 1942년의 “근대의 초극” 좌담회에 참석했다. 이 좌담회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 군부가 주최한 행사였으나, 통념과는 달리 그 목적은 태평양 전쟁에서 연

75) Heisig, James W., *Philosophers of Nothingness : An Essay on the Kyoto School*,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1

이어 패배하던 일본 해군이 팽창주의 노선을 취하던 육군을 견제하는 데 있었다. 해군은 패망 이후에도 일본 국체를 보존하려는 차원에서 대안적 담론을 모색했고, 그 일환으로 교토학파와 협력하게 되었던 것이다.⁷⁶⁾

근대 초극론의 국제질서 구상을 논하면서 좌담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던 니시다 기타로까지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니시다의 사상 체계는 근대 초극론은 물론 서인식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상적 기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다. 물론 니시다의 입장과 좌담회 참석자들의 입장을 동일시하는 것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좌담회를 니시다 철학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되, 니시다 철학이 내포하고 있던 문제의식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조건 속에서 도달할 수 있었던 하나의 가능한 귀결로서, 즉 니시다 철학의 연장선상에서 유기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1. 니시다 기타로의 역사철학

니시다 기타로의 후기 철학을 정치철학사적 계보 속에서 자리매김하자면, 그가 “제국”이라는 개념과 씨름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사상적으로 제국에 접근할 때 반복해서 부상하는 화두는 보편과 특수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다. 예컨대, 키케로나 천하사상은 로마와 중국이라는 실제 정치체를 보편적 위치로 격상하고, 일관된 논리체계를 통해 특수한 제국의 존재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담론은 제국 내에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정체성을 조화롭게 품는 유기체적 이상향을 그려내는 패턴을 보인다. 나아가, 이 특수한 제국이 더 포괄적인 자연관이나 형이상학 속에 배태된 것으로 묘사하고, 이를 자연과 가장 조화로운 정치체로 설파함으로써 그 존재의의를 대내외적으로 해명한다. 키케로에게는 스토아주의가, 선진(先秦)시대에는 천명(天命)이라는 규범적 자연관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다.

니시다의 경우, 그의 철학적 고민이 보편과 특수성의 관계에서 출발했기에, 그것을 국제정치적 차원으로 옮겨놓는 과정이 “제국”으로 귀결되는 것은 얼핏 자연스러운 결론처럼 보일 수도 있다. 개별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의 정치적 질서 속에서 공존하고 통합되는가라는, 고전적으로 제국적인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니시다 철학 체계를 보다 엄밀히 살펴보면, 제국은 오히려 비직관적인 결론이라 할 수 있다. 니시다의 문제의식이 애초에 제국 담론에 특징적인 “특수를 아우르는 보편”이 아니라 “특수를 살리기 위한 보편”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론이 무엇이었던 간에, 니시다의 정치사상은 전통적 하향식(top-down) 제국사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보편과 특수성의 관계를 갖는다.

76) Kosuke Shimizu, “Chapter 5: The Transcendental Whole and ‘Inclusiveness’ The Discourse of the Big 4”, *The Kyoto School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Non-Western Attempts for a New World Order*, 2022

흔히 보편자를 논할 때 우리는 "특수의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포섭(subsume)하는 추론식"⁷⁷⁾으로 일반자를 상상한다. 비근한 예로 과일이라는 일반 개념은 사과, 포도, 멜론, 딸기 등 경험적 특수 개체들을 포섭하는 우산과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니시다에 따르면, 이러한 하향식 개념화는 특수의 생동력을 구속해버리는 "죽은, 고정된" 일반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참으로 일반적인 것은 특수한 것의 내면적 구속력이어야만" 한다.⁷⁸⁾ 그러나 모든 개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스스로를 한정하지 않아 고정성을 잃어버린다면, 세계는 무질서한 상태에 이르고 만다. 그래서 니시다는 이를 묶어내는 불변성의 동력인 "논리"를 발견하고자 했다. 그는 피히테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약동과 로고스 추구"라는 일견 상충되는 두 동학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생성과 존재의 절대 모순의 자기 동일"⁷⁹⁾을 설명하려 한다.⁸⁰⁾⁸¹⁾ 그럼 이제 니시다의 철학적 여정을 거슬러 올라가, 근대 초극론이 어째서 태평양전쟁을 정당화하는 도의적으로 어긋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자.

니시다에게 역사철학적 관심은 "순수 경험"에서 출발한다. 니시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는 순간 구체적인 "경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예컨대 예술 작품을 향유하거나, 조용한 숲속을 산책하거나, 공부에 몰두하여 물아일체(物我一體)에 도달하는 경험을 떠올려 보자. 이때 내가 나 자신을 자각하여 경험하고 있는 나를 의식하는 순간,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⁸²⁾. 순수경험이 객관에 의해 오염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니시다는 주체와 대상이 아직 분화하기 이전의 상태, 즉 양자가 미분(未分)된 채로 순수경험이 발생하는 초월적인 장소를 상정했다. 이 장소는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기 이전의 무(無)의 차원이었다. 이 차원을 무(無)의 장소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어떠한 것을 서술하는 술어가 등장하는 순간 그것이 나머지에서부터 분리되기 때문이다.

77) 허우성, *근대 일본의 두 얼굴: 니시다 철학*, 2000 p.116

78) 내부 구조를 말한다는 점에서 니시다의 생(生)이 칸트의 물자체와 같은 개념이라 오해할 수 있다. 내 부로부터 인간을 추동하는 원리 내지 본질로 이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칸트의 물자체가 주체의 인식(현상)을 선행한다면, 피히테나 니시다 계열의 논의에서는 오히려 인식이 경험적 세계를 구성한다. 칸트의 목적이 인식론적 차원에서 본질을 찾아내는 데 있었다면, 피히테와 니시다의 관심은 존재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의식의 활동으로부터 형성되며, 자아가 자기 자신을 정립하는 과정이 곧 세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칸트의 현상/본질 이원론을 거부하고 일원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니시다는 말한다. "칸트처럼 인식과 실천을 처음부터 구별하여 생각해간다면 확실히 한 가지 방식의 문제 해결은 얻어지리라. 그러나 모두 세계가 어떻게 관계할지 하는 점이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다. 나는 그걸 하나로 모아서 생각해가고 싶다." (허우성 (2000) p.128)

79) 허우성, *근대 일본의 두 얼굴: 니시다 철학*, 2000, p.130

80) Ibid. p.120

81) 기존의 보편-특수 관계와 니시다의 그것 사이의 차이는 논리학적 개념인 동일률(law of identity)에 대한 입장에서도 확인된다. 동일률은 A=A라는 비모순성 원칙인데, 피히테는 이것을 자아가 자기 자신을 세우는 행위로 규정한다.

82) 필자는 이를 읽으면서 사르트르의 "시선regard"과 "즉자即自en-soi/대자對自pour-soi" 개념을 떠올리며, 니시다의 논의와 무엇이 다른지 고민해보았다. 가장 큰 차이는 사르트르가 대자-즉자 이분법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출발하는 것과 달리, 니시다는 순수경험을 바탕으로 객관과 주관 결합하겠다는 훨씬 담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한다는 점인 것 같다. 실제로 니시다가 서양의 실존주의를 "자각주의"라는 이름으로 지칭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니시다는 해소되지 않는 난점에 직면한다. 만약 주체와 대상이 본래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면, 나(주체) 역시 대상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그리고 무질서하게 변화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 수준에서 나(我)라는 존재의 자기동일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라는 질문으로 표현된다. 주체의 의식이 자기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경험을 이처럼 초월적인 형태로 옮겨놓으면 구체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니시다는 초점을 역사철학으로 이동시킨다. 그에게 역사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공간이자 과정이었다.

니시다는 개인적 차원의 혼돈과 민족·국가적 차원의 혼돈을 유비적으로 연결한다. 위의 질문이 국가·민족이 어떻게 자기동일성을 확보하는가라는 사회적 수준의 질문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이때 니시다는 역사를 순수 경험과 구분한다. 순수 경험이 주체와 대상의 미분된 상태라면, 역사는 다양한 경험들의 이질성, 순간성과 개성을 관통하는 무언가를 포착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구성된 역사학은 과학과 예술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적 학문이다. 절대 의지를 부정하고 대상으로 나아가면 결정론적인 과학이 성립하고, 의지를 상대적으로 긍정하여 개성을 강조하면 역사학이 탄생한다. 마지막으로 개성이 완전히 살아 움직인다면 예술이나 종교로 나아간다. 같은 맥락에서 니시다는 세계를 물질적 세계, 생물학적 세계, 역사적 세계라는 세 층위로 구분한다. 이 중 역사적 세계는 인간이 의도적 행위를 통해 세계의 자기 창조에 기여하는 차원이고, 전체와 부분, 환경과 개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역사는 어떻게 추동되는가? 여기서 현재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현재는 과거의 무게와 미래의 지평이라는 두 힘에 의해 “눌려” 있는 상태로 이해된다. 요컨대, 과거가 현재를 제한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미래는 현재에게 변화를 최촉하는 강압으로 기능한다. 현재는 이처럼 자기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넘어서는 것을 요청받고, 그 결과로 항시적인 자기 부정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얻게 된다. 이렇게 역사는 현재의 자기 부정을 통해 추동된다. 한편 이처럼 자기 부정을 수행하는 현재는 창조적이고 단일한, 비반복적 순간이기에, 역사는 결정론·기계론적 인과관계의 나열이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역사적 과정은 이미 성립된 주체의 의지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자기 부정 속에서 주체의 자유와 창조성이 사후적으로 생성되는 것이기에 의지론적 결과물도 아니다.⁸³⁾

이런 맥락에서 니시다는 순수 경험이라는 개념이 실제 세계에서 드러난 경험적 사례를 제시할 수 없다는 난관에 직면한다. 이에 그는 대상과 주체, 전체와 부분 사이의 중간적 위치를 점하는 역사를 통해 “순수 경험의 근사치를 내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나아가 니시다는 존재론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역사철학을 택했다.

83) 허우성, *근대 일본의 두 얼굴: 니시다 철학*, 2000 p.313. 우리의 직접 경험은 시시각각으로 이행해가는 하나하나 이질적인 연속적 발전이다. 즉 하나하나 개성을 띤 것이다. 그런데 자연과학은 가능한 한 그 이질성과 개성을 버리고, 모든 경험을 일반적 성질 아래에 통일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후기 교토학파는, 본래 니시다가 경험적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호명되었던 역사철학을 오히려 이론의 핵심적인 축으로 삼는다. 이 과정에서 첫째, 니시다의 주체와 대상의 안티노미를 해소했던 역사적 현재의 매개적이고 모호한 지위는 약화되고, 역사 발전에서 개별 인간 집단의 주체성이 강조된다. 둘째, 이렇게 새롭게 강조된 주체성을 대변하는 현실세계의 담지자로 문화, 민족과 국가가 호출되고, 또 세계사적 사명을 수행할 주체로 규정된다.

2. 대동아공영권: 근대 초극론의 신공간

종의 논리와 도덕적 에너지: 대동아공영권의 논리

니시다 기타로 자신 역시 서양 대 동양이라는 문제의식은 오래전부터 2세대와 공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를 단순한 토착적 전회(nativist turn)로 해소하는 것에는 거부감을 내비쳤으며, 동양과 서양의 이분법 자체를 넘어설 돌파구를 찾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의 정치적 사상이 구체적인 방안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2세대 교토학파에 이르러, 니시다가 제안했던 무(無)는 서양적 유(有)에 대비되는 동양 또는 일본의 고유한 특질로 본질화되었다. 서양의 근대성이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는 판단 아래, 그 탈출구로서 동양적 무를 내세운 것이다. 동양적 무를 보편적 해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본이라는 국가에 귀속시키는 시도는 근거가 빈약해 보일 수 있었기에, 2세대 교토학파들은 두 가지 정당화 논리를 소환한다.

첫째는 1세대 교토학파 사상가인 타나베 하지메의 “종의 논리”이다. 본래 니시다의 철학은 개인과 전체라는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구체적인 정치철학으로 연결되기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타나베는 개인과 전체 사이에 중간적 매개항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그것을 종(species) 개념에서 찾았다. 타나베의 종의 논리는 개인(individual)-종(species)-속(genus)의 삼분 구조 위에서 전개되는데, 이는 개인-국가-국제라는 국제정치사상의 익숙한 삼층위 구조와 유사하다. 비직관적이게도, 타나베의 체계에서 인류는 종이 아닌 속에 해당하고, 종은 문화 및 그 문화를 체현하는 국가에 해당한다. 타나베는 개인과 자유를 결부시키는 한편, 종을 자유의 제한과 연결된 한 쌍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상충하는 두 논리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길항관계가 형성되는데, 이 긴장의 균형 속에서 출현한 것이 바로 국민국가다. 그리고 이 국민국가는 곧 역사를 추동하는 주체로 설정된다. 고야마와 고사카는 타나베의 이러한 종의 논리를 빌려 이념과 실천을 결합하고, 주도적인 종이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의 의의를 창조하는 과정을 “세계사의 창조”라고 규정한다.

고야마: 사변의 의의나 이념이 사후에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대개 그런 것이지요. 사변의 진행과 함께 현실의 의의가 창조되어갑니다. 그런 의의를 창조하는 것이 우리의 활동입니다. 지나사변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앞으로 우리의 활동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만, 신황정통기에 있는 천지의 시작은 오

늘을 시작으로 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지창조라는 것은 특별히 오래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의 창조여야 합니다. 낡은 세계가 깨지고 신질서가 만들어지는 것, ABCD 포위선을 어떻게 깨부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것인가-이것이 천지 창조입니다. (...) 오히려 앞으로 우리의 활약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부여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도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그 진정한 의의가 창조되어갑니다. 과거를 살리고 죽이는 것도 현재의 활동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우주 창조의 의미가 있고, 그것이 오늘이 천지의 시작이라는 까닭입니다. (...)

고사카: 물론 역사 문제는 멋대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매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해결해 나가고 새로운 세계로 전개해 나가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그 해결 주체가 국가적 민족입니다. (...)⁸⁴⁾

역사를 추동하는 법칙: 모랄리세 에네르기(*moralische energie*)

이러한 국가의 “주체됨”에 학문적 권위를 더하기 위해 소환된 두 번째 개념이 바로 랑케의 도의적 생명력(*moralische energie*)이다. 랑케는 역사 발전과 개별 국가들의 흥망을 설명할 때, 자연적/객관적 조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고, 국가와 민족으로 하여금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구현하게 만드는 힘에 “도의적 생명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도의적 생명력은 헤겔의 운명론적 역사관과 대척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헤겔이 일선적이고 목적론적인 역사관을 제시했다면, 랑케는 무질서와 운명론 사이에서 인간 자유의 역할을 찾고자 했다. 랑케에게 역사는 인간의 자유가 과거의 힘이라는 저항에 부딪히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나아가는 과정이다. 역사는 과거와 미래의 연속선 위에 놓여 있되, 그 귀결은 어떤 방식으로든 미리 예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⁸⁵⁾

고야마: 프랑스가 패배했다고 할 때, 프랑스가 패전한 근본 원인은 뭘까요? 랑케의 말로 하면, 즉 모랄리세 에네르기가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문화 상에 틈이나 대립이 생겨 문화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었지요. 문화도 정치도 모두 건강한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 절정기의 파리가 잿더미가 되어도 조국 프랑스를 지킨다는 도의적 에네르기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프랑스 문화였습니다. (...)

고사카: 현실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경제라든가 학문만이 아니라, 좀더 Subjektiv한, 주체적인 것, 구체적으로는 민족의 생명력 같은 것입니다. 물론 문화적인 것을 내용으로 하지만요. (...)

(...) 모랄리세 에네르기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봅니다. “민족”은 19세기의 문화사적 개념

84) 나카무라 미츠오, 니시타니 게이치, *태평양전쟁의 사상 - 일본정신의 기원. “세계사적 입장과 일본”으로 본 “근대의 초극” 좌담회*, (이하 태평양전쟁의 사상), 이매진, p.219

85) Leopold von Ranke (Georg G. Iggers ed.), “Chapter 7: The Great Powers”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history*, 1833.

“World history does not present such a chaotic tumult, warring, and planless succession of states and peoples (...) There are forces and indeed spiritual, life-giving, creative forces, nay life itself, and there are moral energies, whose development we see (...) In their interaction and succession, in their life, in their decline and rejuvenation (...) lies the secret of history.”

인데, 설사 과거의 역사가 어떻든 간에 오늘날 “민족”은 세계사적 힘이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모랄리세 에네르기는 개인 윤리도 아니고 인격 윤리도 아니며 피의 순결함도 아닙니다.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국민에 집중하는 것이 오늘날 모랄리세 에네르기의 중심이 아닐까요? (...) 주체성을 갖지 않고 자기한 정성을 갖지 않은 민족, 다시 말해 국민이 되지 않은 민족은 무력합니다. 그 증거로 미국 인디언 같은 경우는 결국 독립된 민족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다른 국가적 민족 안으로 흡수되어버렸습니다. 유대 민족의 경우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계사의 주체는 국가적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⁸⁶⁾

종의 논리와 도의적 생명력이라는 두 가지 사상적 자원을 통해, 2세대 교토학파는 자유를 “법칙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일본이라는 특수한 정치체를 “도의적 생명력”을 보유한 “종”으로 승화함으로써, 특수와 보편을 잇는 사상적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동아공영권 구상은 유럽발 근대성이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스스로의 도덕적 한계를 노출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일본은 동양적 무(無)를 체현한 국가인 동시에, 비유럽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러일전쟁에서 유럽 열강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강대국이였다. 이 점에서 일본은 아시아인들을 선도할 수 있는 도덕적 우위, 즉 도의적 생명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논리가 구성되었다. 이렇게 “지나사변”과 “대동아전쟁”은 “모럴의 싸움”으로 승화되고, “동양의 도덕과 서양의 도덕 사이의 싸움”으로 의미를 부여받았다.⁸⁷⁾

고야마에 따르면, 서양의 도덕적 파탄은 근대성이 촉발한 세계대전이 아니라, 그러한 전쟁을 가능하게 했던 개인주의에서 기원한다. 개인주의는 미시적 차원에서는 애국심의 결여를 낳았고, 거시적 차원에서는 근대 국제관계가 힘의 논리라는 실상을 은폐한 채 강국과 약소국 사이의 계급구조를 재생산하는 질서를 형성했다. 국내적 차원에서 원자론적 인간관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경쟁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계급투쟁을 산출했다. 이처럼 고야마는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모랄리세 에네르기의 부재를 “원자론적 세계관”이라는 하나의 공통 원리로 묶어내고 있다. 하지만 고야마는 이 원자론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제공하지 않은 채 논의를 이 대목에서 멈추고 있다.

근대의 국제관계는 (...) 원자론적 사상, 즉,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된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각 민족과 각 국가에는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는 한 표식의 투표권이 있습니다. 대, 소국도 강, 약국도 모두 권리에 있어서는 평등하다는 윤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근대 사회의 원자론적인 사상의 연장이기 때문에, 개인주의 사상이 그대로 국제관계로 연장된 꼴이죠. 하지만 형식상으로야 그렇지만 역시 실제로는 강국이 약국을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 이 자유주의가 국내 사회에서 자유경쟁이라는 이름 하에 강자가 약자를 복종시키는 계급투쟁으로 되어 버립니다. 국제적인 제국주의건 국내적인 투쟁이건 그 원리는 하나의 근본 원칙을 이루고 있습니다.⁸⁸⁾

86) Ibid. p.206

87) Ibid. p.224

이런 차원에서, 원자론적 자유주의를 대체하는 일본의 모랄리세 에네르기는 개인, 국내와 국제를 동일한 원칙 하에 결합하는 신질서인 것이다. 예컨대, 개인적 차원에 대해서는 니시타니가 “나머지 다른 민족은 수준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런 민족들을 끌고 민족적인 자각을 일깨워주고 대동아권이라는 것을 자발적이고도 주체적으로 짊어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대동아권에 있어서 일본의 특수 사명이다.⁸⁹⁾ 민족의 정신 구조까지 확 바뀌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⁹⁰⁾”고 쓰고 있다.

기존 제국과 대동아공영권의 차이

전술했지만, 광역권Grossraum은 좌담회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 하지만 좌담회 참석자들은 공영권과 그로스라움이나 기존 제국과의 차별점을 강조한다.

고사카: 현재 문제는 하나의 국가적 민족의 그것이라기보다는, 민족 상호간이 얼마나 깊게 매개하느냐하는 문제입니다. (...)

고야마: 광역권이라든가 공영권이라든가 하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 역사적 필연성은 오로지 민족문제에서만 생기는 것일까요? 경제적인 문제는요?

고사카: 오로지만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계기죠.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주체성이 흐려져버립니다.

스즈키: 광역권이라는 개념이 경제권, 즉 경제 자급권의 개념, 자유무역에 대한 아우타르키 경제이론에서 나온 건 분명해요. (...) 자유주의 경제가 본질적으로 더는 갈 데가 없게 되고 그 결과 1929년부터 1931년에 걸쳐 세계불황을 맞이하죠. 세계불황 가운데 자본주의에 대한 구제책 혹은 자본주의에 대한 강화책으로서 블록 경제가 생각된 것입니다. (...) 광역권의 기본 개념에는 경제관계가 근본을 이루지만, 정확히 말하면 근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필연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⁹¹⁾

역사철학은 이렇게 슈미트와 근대 초극론 모두에서 기존 질서의 전환과 변혁을 정당화하는 장치로 기능했다. 고야마 역시 영미적 자유주의를 가리켜, 그것이 “역사 속에 있으면서 역사를 비시간화하고 영원화하는 반역사적인 타력[이며] 반윤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역사적 현실 안에서 앵글로색슨적인 세계질서만을 초역사화하고, 구질서를 영원의 질서로 생각하려는 반역사적 힘에 대해 어디까지나 역사적 생명의 입장에 서서 싸우는 윤리와 반윤리간의 싸움이라는 면도 있습니다.⁹²⁾

88) Ibid. p.267

89) Ibid. p.265

90) Ibid. p.286

91) Ibid. p.286

92) Ibid. p.272

역설적으로, 근대 초극론의 역사철학은 역사의 방향성을 “모랄리제 에네르기”라는 준법칙적 원리로 설명하면서, 역사를 일종의 자연법으로 환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동적이여야 하는 역사철학을 도리어 정태적인 것으로 고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점에서 근대 초극론은, 자유주의적 무질서라는 구체적 문제를 대지의 노모스라는 대안을 통해 진단하면서도, 이를 완결된 법칙으로 자연법화하기보다는 지속적인 탐구의 과정으로 제시함으로써 역사철학의 자연법화를 회피한 슈미트와 대조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공영권의 수립은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신경제 질서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일본과 조선 각지에서 활동하던 사회주의자들에게 전향의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총력전은 자원의 총동원을 요구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채택되는 단기적 대응책으로 이해되고, 위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다시 기존 질서로 복귀하는 임시적 수단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스즈키의 인식은 이런 통상적 이해와는 사뭇 다르다. 스즈키는 전쟁 이전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오히려 전쟁 그 자체를 신질서를 구축하고 실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맥락에서 구체적 제도로서 계획경제의 수립을 제안한다.

세계의 모든 질서가 총체적으로 막다른 데 이르러 전면적으로 변화하는 대대적인 변혁이 바로 총력전입니다. 경제 질서도 자유주의 경제에서 계획 경제로 변하고, 국가의 구조나 체제, 세계관도 변합니다. 19세기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붕괴되는 것이지요.⁹³⁾

전술했다시피, 이와 같은 “총력전의 이념”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친일로 전향의 계기를 제공했지만, 그 전향이 근대 초극론의 무비판적인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서인식의 사례는 식민지 조선이라는 個를 살리면서, 새로운 세계적 보편을 지향하는 독특한 사상적 전개를 보여준다.

III. 서인식, 個를 살리는 매개체로써 사회계층

서인식은 식민지 조선의 역사철학자으로써, 함흥에서 태어나 1924년부터 와세다 대학에서 수학했다. 이래로, 그는 도쿄에서 조선공산당의 일본총국, 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에서 운동가로 활동하고 그로 인해 투옥되기도 했다. 193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그는 조선 논단의 전방위에서 일본 근대 초극론에 대적할 대표 논객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⁹⁴⁾ 이 무렵, 일본은 중일전쟁에 돌입하면서 한반도와 만주를 중국 정벌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였고, 조선에 징병제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본래 치안 유지 목적에 국한되었던 조선군은 관동군과의 합동작전에 본격적으로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식민지 조선은 경제적으로는 전시경제체제로 재편되었고, 사회적으로는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슬로건 아래 황민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움직임에 미키 기요시와 같이 일본 본토에서 마르크스주의에 몸담았던 학자들과 조선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비

93) Ibid. p.314

94) 홍종욱, 식민지/근대 초극 연구회,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 초극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판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서인식은 중일전쟁을 “세계사적 의의를 가진” 거대한 역사적 변곡점이라 판단하고, 이에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철학적 독해법을 적용하여 자유주의와 전체주의라는 양대 경향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려고 했다. 이러한 서인식의 해법을 일종의 “근대와 근대초극에 대한 초극”이라 명명할 수 있으리라. 그의 주된 문제의식은 “에폭을 결정”할 수 있는 “정히 중대한 일지사변(日支事變)”와 마주한 시급한 상황에서, “현대일본의 최고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론가들”이 그 세계사적 의의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근대초극론의 세계사를 전체주의라고 규정하고, 식민지라는 주변부에 주체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그는 “문화”를 “제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탈중심적 공동체로 옹호한 것은, 중심-주변의 논리를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일본식 협동주의를 다원주의적 세계 속으로 희석하려는 목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상을 바탕으로, 서인식 역사철학의 논리적 구조를 살펴보자. 그의 역사철학은 필연적인 자연성과 가변적인 역사성이라는 두 항 사이의 긴장에서 출발한다. 그는 역사적 현실의 전개가 자유의지적 요소와 결정론적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역사적 차원에서 “자유의지”와 “결정론”으로 호명되는 이 요소들은 정치적 차원에서는 각각 “리베랄리즘(자유주의)”와 “전체주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후, 서인식은 일견 상호배타적으로 보이는 이 두 요소를 매개하는 가교를 노동에서 찾았다. 나아가 이런 통합 논리와 나란히 하는 동학을 지성, 그리고 문화에서 발견했다. 그는 1930-40년대에 들어 두 가지 역사적 추세에 주목한다. 하나는 세계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단일한 세계성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융합적 문화의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2차 세계대전으로 기존 질서가 무너짐에 따라 신질서가 임박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는 근대 초극론 지식인들이 제시하는 대안적 세계질서를 검토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비판을 내놓는다.

1. 자연과학과 역사과학의 긴장: 필연성과 자유의 대립을 넘어서

서인식의 역사철학적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역사를 추동하는 두 요소, 즉 필연과 우연의 길항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었다. 그는 현재까지 역사철학자들의 역사의 필연과 우연의 단면에만 주목하면서, 그것을 초월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그는 “역사철학잡제”에서 역사철학 선행 연구와 최근 동향(1938년 기준)을 개괄하면서, 역사철학의 발전사를 삼등분하여 정리한다. 첫째는 이른바 “전기 역사철학”으로, 콩트나 헤겔로 대표되는 형이상학적 역사철학이다. 이 단계에서는 “절대정신”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합리주의를 역사 영역에까지 확장하고, 모든 역사적 전개를 포괄하는 단일한 필연적 발전법칙을 발견하고자 했다. 둘째는 딜타이나 빈델발트 등의 중기 역사철학으로, 일선적 발전 법칙을 찾는다는 야망을 포기하는 대신, 역사를 인식론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자연과학적 방법론에 비견될 만한 합리적 연구 방법론을 구축하고자 했다. 마지막은 하이데거, 니시다 기타로, 미키 기요시 등이 선도한 형이전학(形而前學prophysik적)⁹⁵⁾ 시기

95) 이 prophysik은 말 그대로 자연학physik 이전의 영역을 지칭한다. 서인식은 니시다의 객체와 주체 분화 이전의 경험론을 염두에 둔 듯하다. 다시 말해, 여기서 서인식이 말하는 physik란, 자연학physics이나 형이상학形而上學, 즉 形을 초월한 사유가 아니라, 형화形化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지만 形化

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1930년대의 세계적 위기 속에서 딜타이의 인식론적 접근을 안 일한 것으로 평가하여 역사학을 존재론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헤겔과도 단절하여 합리적 법칙의 탐구를 포기하고, 베르그송의 생의 철학과 같이 유동적이고 비연속적인 측면에서 현재적 개성을 찾는 데 주력한다. 그러나 서인식은 이 세 가지 접근법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전적으로 동조하지 않으며, 모두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역사철학적 토론이 전개되는 지반의 저변에는 보다 근본적이면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깔려있다. 이른바 칸트 이래 지속되어 온 자연과 역사 사이의 긴장이다.

주지하다시피, 칸트는 객관적 삶의 가능성을 유한한 시공간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존재 조건, 즉 선험적(a priori) 영역에 귀속시킴으로써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을 완성했다. 그 결과 객체의 영역은 보편적이고 비시간적인 인과관계의 지배를 받는 영역으로 규정되었고, 이는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주체의 영역, 즉 역사의 영역과 대비되었다. 다시 말해 칸트는 자연을 인과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필연의 세계로 파악함으로써, 자연대 역사라는 이분법을 고착화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서인식은 칸트가 상정한 자연의 비역사성의 정당성이 20세기 과학적 발견들에 의해 부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로 다윈의 진화론이나 천문학의 진보는 별과 생명체 역시 고유한 역사성을 지니고 시시각각 변화한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이로써 자연이 시간 초월적인 보편적 존재 조건으로 기능한다는 전제는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행태에도 일정한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이 발견될 수 있었다. 이렇게, 자연만을 필연성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역사를 무질서의 영역으로 분리하는 칸트적 구도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적 규범성과 물화학적 자연성이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 교차 지점이 인간 역사의 존재 양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상품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객체인 동시에, 그 가치가 노동이나 (노동가치론) 경제과학의 수리적 법칙(시장주의: 수요와 공급 가치론)에 의해 규정되는 실체적 모습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사회의 감성이라는 매개를 통해야지만 가치를 갖는다는 규범적 차원 역시 갖고 있다. 이렇듯 서인식의 중심적 과제는 칸트가 분리해낸 자연의 필연성과 역사의 우연성을 결합시키는데 있었다. “현대의 세계사적 의의”(1939)에서 그는 말한다.⁹⁶⁾

역사가 가능과 우연, 필연과 우연의 통일이라 하는 말은, 그가 곧 우연의 계기(繼起⁹⁷⁾)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에 있어서 역사는 또한 운명이다. 그러나 역사가 우연의 계기라 하는 말은 결코 그의 필연성을 부정함은 아니다. 필연이란 우연 아닌 그 무엇이 아니라 우연의 총화(總和)가 곧 필연이다. 역사적 현실은 그 개개에 있어서는 우연이나 전계열(全系列)로서는 필연이다. 필연은 이방 개개의 우연에 대립하면서도 또한

되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체로서의 역사를 통로로 하고, 객체로서의 역사에 도달하려는 것이 현대 역사의식이 노리는 里程이다.”

96) 홍종욱, 식민지/근대 초극 연구회,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 초극론*, “現代의 世界史的 意義”, 2017

97) 契機가 아닌 繼起이다. “繼起”는 Succession, 즉 잇따라 일어남 또는 연이어 발생함을 뜻한다.

그들 제우연(諸偶然)을 자기실현의 제계기(諸契機)로 통일하여 가지고 그들의 전계기과정(全繼起過程)을 통하여 자기의 철칙(鐵則)을 관철하는 법이다. (...) 그러나 우연을 필연으로 전화하고 필연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은 인간의 능동적 행동뿐이다. (...) 이러한 고난에 찬 행위가 없는 한 필연도 우연으로 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서인식이 교토학파의 진단에 그토록 불만족스러워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서인식은 중일전쟁을 16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시기를 끝맺고 새로운 세계사적 국면을 여는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파악했다. 나아가 그는 “우연을 필연으로 전화하고 필연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이 인간의 능동적 행위뿐”이라는 확신을 지니고 있었다. 이 점에서 서인식과 근대초극론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그가 자신이 속한 세계사적 시대의 핵심 원리로 파악한 것,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은 근대초극론자들과 결을 달리했다. 근대초극론자들 역시 자유주의를 문제 삼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근대 유럽의 몇 가지 특징을 본질화한 데 그쳤다. 이들은 일본이 세계사적 의의가 전환하는 시점을 목격하고, 그것이 변곡점임을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세계사의 피동적 수반자가 아닌 능동적 행위자가 될 수 있으리라 여겼다. “도의적 생명력”이라는 표어로 함축된 한정된 민족 공동체로서의 자각은, 세계사의 주체가 특정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 가능한 것이었다. 이처럼 근대초극론자들에게 문화가 민족국가를 구성하는 기층을 이루었던 것과 달리, 서인식에게 “문화”란 특수한 “민족”이나 “국가”에 귀속되는 민족문화와, 보편적인 “계층성”에 귀속되는 인류문화(人類文化) 내지 일반문화(一般文化)로 양분되는 개념이었다. 그는 “문화의 유형”을 논하며 계층문화와 민족문화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한다.⁹⁸⁾

오늘날의 세계문화는 횡단(橫斷)하여 놓고 보면 두 날 이하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종관(縱貫)하여 보면 두 날 이상의 민족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날의 시대문화로서는 이른바 시민문화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시민계급의 관념형태로서의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으나 민족문화로서는 제 각기 상이한 전통적 차별성을 갖고 있다. (...) 현대의 시민문화 속에서도 감성적, 지성적 불란서문화와 정신적, 신비적인 독일문화를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시대문화 속에서 제다(諸多)의 민족문화를 구별할 수 있는 반대로 또한 한 민족문화 속에서도 그 역사적 성격을 달리하는 제다의 시대문화를 발견할 수 있다. 같은 “일본문화” 속에서도 고대의 덴조비토(殿上)문화와 중세의 무인문화와 근세의 초닌(町人)문화⁹⁹⁾를 구별할 수 있으며, 또 조선서도 신라의 화랑문화, 고려의 승려문화, 이조의 양반문화를 구별할 수 있다. 그러면 문화의 계층성과 민족성은 각각 어떠한 지반 위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문화의 발전행정에 있어서 서로 어떠한 연관을 갖고 있는가?

이후 서인식은 각 특수 문화 역시 본질적으로는 역사적 발전의 보편 원리에 착근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을 가한다. 서인식은 각 국가 간 상이한 민족 문화의 특수성이 사실상 외피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것은 계층이라고 역설하는 듯 보인다.

98) 서인식 전집, 歷史와 文化, “문화의 유형과 단계”, 역락, 2006

99) 殿上和 町人의 의미에 대해서는 홍종욱, 식민지/근대 초극 연구회(2017)을 참고

한 시대의 문화형태는 그 시대의 사회생활의 특수한 구조를 반영하는 만큼, 그 사회를 콘트롤하는 사회성층(社會成層)의 생활의욕(生活意慾)이 그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결정적인 의의를 차지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 문화사의 발전행정을 시대사적으로 (...) 논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한 그것을 계층을 기준하고 (...) 일계열(一系列)의 표식을 부쳐서 역사제단계(歷史諸段階)에 배열할 수 있다. 그런데 계층성이 그의 발전제단계를 구별하는 반대로 문화의 민족성은 그의 정신적 유형을 표시하는 표식밖에 더 될 것이 없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민족성과 계층성 역시 지금은 안티노미의 관계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헤겔적 변증법의 합(합, synthesis)으로 초월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만일 승의(勝義)의 문화란 원래 이론이성의 산물로서 그 대응주체로서는 보편개성을 전제하며 그 발전동향에 있어서는 세계를 지향함을 알 수 있지 않는가? 문화의 문화성을 결정하는 표식은 인간성을 완전히 이탈한 객관성, 합리성, 보편성에 있는 것이다. 표현제형식(表現諸形式)은 신화, 언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지행(知行)이 분리하기 이전의 정의 표현형태로서 개념성이 말하자면 상징성 속에 수면(睡眠)하고 있지만, 문화제형식은 수리나 과학에서 볼 수 있듯이 지행 분리 이후의 지성의 개념적 구성의 산물이다. 전자가 생대생(生對生)의 공동유대로서 사회생활의 주체적 측면을 형성하는 만큼 생에 부착하는 주관성을 탈각할 수 없지만, 후자는 지성의 대상화를 걸쳐서 구성되는 만큼 생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독자의 객관성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의의 문화는 보편개성 즉 의식일반을 전제하고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승의의 문화가 그 대응주체로서 의식일반 즉 이성일반을 전제한다면 문화가 그 본질에 있어서 세계성 즉 보편성을 요청하고 지향할 것은 두말할 것 없다. 그런데 보편개성은 구체적 개성이 아니고 개성일반이며, 이성인간은 구체적 인간이 아니고 인간일반이다. 인간=개성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이성의 허수아비가 아니고 이성과 함께 정의(情意)를 가진 것이다. 단순히 추상적 존재가 아니고 역사적 사회적 존재이다. (...) 민족이 가족과 함께 공동사회의 범주에 속하며 계층이 개인과 함께 이익사회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정설이다]. (...) 전자는 개인을 사회유기체의 일분지(一分肢)로서 흡수하는 유기체적 원리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이며, 후자는 사회가 개인의 산술, 총화로서 결합되는 원자론적 원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동사회는 개인의 매개를 걸치지 않은 직접적 전체성의 원리에 입각한 전체주의사회이며, 이익사회는 개인에 매개만 된 추상적 보편성의 원리에 입각한 개인주의사회이다.

이 지극히 난해한 문단은 세 층위로 나누어 독해할 수 있다.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이다. 이것은 문화적 원리이다. 언뜻 이는 서인식이 특수한 정치체를 지양하고 세계적 일통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는 지금까지 특수적 문화의 구성방식에 애로가 있었음을 파악하고, 그것을 보편적 원칙에 입각하여 재구성하자는 주장이다. 둘째, 문화는 두 형식을 띤다. 신화나 언어와 같은 특수적 요소는 "표현제형식"으로서 공동체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고, 주관적 요소가 강하다. 반면 수리나 과학과 같은 요소는 인간성과 삶에서 완전히 탈각되어 있고, 독자적 객관성을 갖는다. 셋째, 하지만 인간의 문화는 인간성에서 완전히 탈각된 보

편적 추상성 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적 인간이란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고, 따라서 인간은 "보편적으로 구체적인 역사성"의 산물이다. 기존의 사회 구성 원리는 "개인을 사회유기체가 흡수"해버리는 사회와 "원자론적 원리"에 의하여 구성되는 "개인의 산술[적 합]인 사회, 이 두 가지였는데, 서인식에게 이 둘은 모두 초극해야 할 대상이다. 참고로 이 두 사회 유형은 각각 페르디난트 뢰니스(Ferdinand Tönnies)의 게젤샤프트(이익사회)와 게마인샤프트(공동/유기체사회)에 대응한다.

2. 특수성과 일반성, 그리고 자연성과 일반성의 매개로써 노동

위에서와 같이, 서인식의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일견 무질서해 보이는 역사와 필연적인 자연이 상이한 이해 방식, 나아가 구조 논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했다. 서인식이 자연적 필연성과 역사적 우연성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이를 위해 먼저 지성이 자연성과 역사성 사이에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논한다.¹⁰⁰⁾ 주지하다시피, 마르크스주의 사회 이론에서는 사상적인 상부구조가 물질적인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의 관계를 맺는다.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 즉 지성과 문화로 규정될 수 있는 상부구조가, 생산수단이나 생산관계 등이 포함된 하부구조가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는 반면, 하부구조는 상부구조를 조직하는 조건이다. 카를 만하임의 지식사회학 역시 이러한 도식 속에서 역사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¹⁰¹⁾ 몽상가들의 유토피아는 현존 질서를 넘어서는 질서를 상상하고, 그 혁명적 상상을 통해 기존 이데올로기를 초극하지만, 종국적으로는 그 유토피아가 다시 이데올로기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따라서,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지성의 영역은 이러한 변증법을 통해서 추동된다는 것이다.

서인식에게 역시 계몽주의적인 시대초월적이고 보편 적용 가능한 과학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그는 "인간의 인식의 방법과 구조가 사회와 민족, 신분과 계급이 다른 데 따라 적든 크든 각각 상이하다"고 웅변하며, 또 "지성의 운동이란 노동의 운동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모든 지성은 특수한 노동양식에 얽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합리적인 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나아가 우리가 고대 희랍인들 과도, 독일인들과도 감성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보아 노동양식과 시대의 변화로 인해 단절된다거나, 완전한 상대주의로 환원하진 않지만, 단지 일반성이 시대에 묻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그 노동양식이 합리적인 한에서만 합리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의 지성이 오늘날까지도 불멸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그 속에 지성으로서의 합리성, 일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지성의 일반성은 직접으로든 간접으로든 사회체제의 하부구조에 있어서의 생산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의 지성이 지성으로서의 일반성을 가지면서도 특수성을 가지며 합리성을 가지면서도 비합리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절대로 비합리적인 지성도 없거니와 절대로 합리적인 지성도 없는 것이다. 일정한 노동양식은 일정한 기술적 기초 위에서 노동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하는 만큼 합리성을 가지나 기술적 기초가 변하면 노동

100) 서인식 전집, 歷史와 文化, "'지성'의 자연성과 역사성", p.30, 역락, 2006

101) Karl Mannheim, *Ideology and Utopia: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Knowledge*, 1936

의 일반적 특성과 배치되는 비합리적인 것이 되고 만다.

하지만, 그는 기존 상부구조-하부구조 도식에 머무르지 않고, 이 마르크스주의적 도식을 넘어서면서 노동을 자연과 역사를 매개하는 궁극적 중간자로 위치 짓는다. 기존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지성과 이데올로기를 물질적인 하부구조에 조직되는 파생물 또는 현상 정도로 파악했다면, 서인식은 상부구조의 내적 상호작용에 천착한다. 한편으로, 지성이 생산구조라는 준자연적 요소에 배태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역사성이라는 추가적 제약 조건이 지성의 운동 궤도를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서인식에게 지성은 부유초처럼 자유롭게 부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역사성이라는 두 제약 조건에 한정되어 운동한다. 그는 이에 어부의 예를 든다.

인간이 자연과 관계하는 것은 그 동기는 사회에 있으나 그 행동은 자연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다. 고기를 잡는 동기는 예하면 현대 노동자에게는 화폐획득에 있고 중세 농민에게는 자가수요에 있을는지 모르나 고기잡는 데는 고기의 습성, 즉 노동대상의 자연적 성질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은 서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지성은 생산노동과 결합된 확도가 크면 클수록 사회로부터 제약되는 확도는 적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서인식은 노동이 자연성과 역사성의 대립에서 매개체로 지목하고 있다.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고기의 습성이라는 조건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지만, 사회와 그 규범이 변함에 따라 어부는 고래의 자급자족이라는 목표로 고기를 잡는 것에서 화폐획득을 위하여 고기를 잡는 동인이 변했다. 그런데, 문화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노동과의 관계는 어떠할까?

문화의 자연성과 역사성은 인간존재의 자연성과 역사성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과를 결합하여 두 날 존재양식의 교차점을 이루고 있는 생산노동의 역사성과 자연성에서 유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인간의 노동과정(勞動過程)을 전인류과정(全人類過程)을 관통하여 그 기저를 이루는 추상적, 자연사적 과정으로 볼 때에 그에 대응하는 것이 문명이며, 그와 반대로 인간의 노동과정을 개개의 사회형태에 따라 생산양식을 달리하는 구체적, 사회사적 과정으로 볼 때에 그에 대응하는 것이 문화이다.

서인식은 결론을 내린다. 지성은 노동에 배태된 것이고, 노동은 자연성과 역사성을 매개한다. 그럼에도, 지성은 어떠한 특수한 생산양식 속에서 내적 합리성을 갖는다. 이를 전(全)과 개(個)에 비유하자면, 자연적 전체성과 역사적 개체성이 동시에 존재 의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문화의 운동형식은 문명이 구체화되어 그 사회의 규범을 체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문화가 문화로써 존속하려면, 문명의 일반성을 체현해야만 문화로써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일반성과 특수성의 동학에서 서인식의 대동아공영권에 대한 비판이, 그리고 個와 全이 동시에 살 수 있는 방식이 이해될 수 있다.

3. 無의 논리에서 多의 논리로: 個 대 衆의 구도를 넘어서

서인식의 역사철학적 논리는 헤겔-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전개 방식을 따른다. 자연성과 역사성을 안티노미(antinomy)를 노동이 해결하는 식의 정반합(正反合)의 논리다. 풀어서 말하자면, 자연성의 원리와 역사성의 원리는 둘 다 참이지만 상호긴장 관계에 있다. 한편으로, 인간은 물질적 제약 속에 위치하기에 “인간의 행동 양태는 물질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자연성의 원리를 따른다 (正, thesis).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단순 자연물이 아니라 문화, 제도 등에 의해서 형성되는 존재이기에, “인간은 역사를 만든다”는 역사성의 원리 역시 따른다 (反, antithesis). 이 두 상충되고 모순되는 원리를 해결해주는 요소가 바로 노동(合, synthesis)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1940년대의 미래적 지평을 서인식이 그리는 역사철학은 어떤 변증법으로 사유되었을까? 서인식은 자유주의(리베랄리즘)와 전체주의를 두 가지적으로 지목한다. 자유주의가 세계성은 있으나 계층성이 없는 안이라면, 전체주의는 세계를 통일해나가는 계층문화를 민족주의라는 지역문화에 종속시켜 세계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재래의 리베랄리즘의 사관을 인류사관이라 말하고, 쏘시알리즘의 사관을 계급사관이라 말한다면, 전체주의 사관은 인종사관 또는 민족사관이라고 말할 수 없을까? (...) 전체주의가 말하는 “부분에 앞서는 전체”란 끝까지 민족과 그를 대표하는 국가이다.¹⁰²⁾

여기서 그가 나치스와 이탈리아와 더불어 일본을 파시스트 정권의 일레로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우려하는 것이 일본이라는 점을 다음 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현대일본의 세계사적 과제를 동양을 서양으로부터 해방하는 데 둔다. 그러나 서양으로부터 동양의 해방 그 자체가 곧 세계사적 의의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서양으로부터 동양을 해방하는 것도 단순한 사실로서는 동양을 서양에 예속시키던 사실이나 다를 것 없이 한낱의 흥망사적 사실밖에 될 것이 없다. 그러나 (...) 동양의 해방도 오늘날 세계사의 현대적 과제와 내면적 연관을 갖고 수성될 수 있다면 그는 물론 세계사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세계사의 내면적 구조연관을 통찰한다면 누구나 캐피털리즘 문제와의 실천적 연관을 [할 수 있다].¹⁰³⁾

서인식이 보기에 일견 대립하는 듯 보이는 두 이데올로기 - 또는 서인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역사문화”가 - 그 기본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한 양식을 띠고 있었다. 전체주의 문화와 자유주의 문화가 똑같이 문화구성의 단위를 민족에 두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다만 차이는 전체주의가 민족을 최우선으로 두는 국민주의 문화라면, 자유주의는 개인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인주의 문화라는 것이 문제점이었다. 서인식은 “리베랄

102) 서인식 전집, 1편 歴史와 文化, “전체주의 역사관”, p.165, 166, 역락, 2006

103) Ibid. “현대의 과제(2)”, p.150

리즘은 개인을 개성 일반 (...)으로 정립하고 민족을 개인의 단순한 산술적 총화로 이해하지만 전체주의는 민족을 불가분의 유기적 개체로 정립하고 개인은 민족=정치를 매개하고서만 존재할 수 있는 단순한 지체로밖에 더 안 본다.” 이렇듯, 기존 보편지향주의적이었던 자유주의와 전체주의가 민족이라는 특수문화로 분화하면서 종래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었다. 서인식이 이에 제안하는 방안은 바로 민족성에서 계층성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이 계층 문화는 종국적으로 개별문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주의적인 세계 문명을 낳는 단계로 기능할 것이었다.

따라서 서인식에게 세계성을 이어주는 중간자가 계층성이다. 개와 전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인식의 문제의식은 니시다 기타로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역시 전체와 개인을 매개하는 것에 대해 고민했다. 그의 전체란 단순히 다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주변부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전체가 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주체와 대상의 경계를 없애면서 모든 것을 같은 경험 안으로 통일시켜버리는 절대 무보다는, 개를 살리면서 전으로 가는 것을 택했다. 그는 사회주의의 도래로 인해 세계성의 도달이 임박했다고 인식했으며, 바로 이 세계적 보편성을 갖고 있는 계층성이 개와 전체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매개라고 인식했다. 타나베 하지메나 근대 초극론에서 “전체”와 “개체”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역사적 현대를 추동하는 종(種), 즉 문화로 정의된 민족국가였다면, 서인식에게 매개체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 현재가 그 어떠한 전형기에 있어서든 다양한 가능성의 혼돈한 투장이라는 것은 곧 다양한 가능성적 미래가 현재의 속에 병립 또는 대립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역사적 현재는 일의적 다방향적이기보다도 도리어 다의적 방향적의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현재가 미래에의 동향에 있어서 시사하는 제다의 가능성은 그 존재 연관에서 볼 때에는 ‘현대 역사’를 구성하는 사회 제 성층을 기초로 하고 그들의 ‘이데올로기’로서 발현하는 것이며 의미 연관에서 볼 때에는 현대 역사에 내포된 사회 제 시대의 문화 제 성층을 기초로 하고 그들 제 성층의 각양각색의 신결합에 의한 새로운 ‘뮤토쓰’ 혹은 ‘유토피아’로서 발현하는 것이다. (...) 구체적인 문화는 늘 계층문화였다. 그 의미에 있어서 민족과 세계, 자연과 이념을 역사에 매개하는 것은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익사회는 이념으로서는 보편개성을 요청하면서도 존재로서는 계층적 조성(組成)을 가졌다면, 그는 또한 세계구조에 있어서 이념으로서는 도처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원자론적 세계를 요청하나 사실에 있어서는 중심과 주위가 지배와 귀속의 관계를 일우지 않을 수 없다. 문화에는 원래 국경이 없는 법이다.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의 자유로운 교환이 문화로 형성하나, 정치는 다중심을 불허한다.¹⁰⁴⁾ (...)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공동사회가 될 수 없다. 단순한 공동사회는 직접적인 전체노동을 기초로 한 것으로 직접적 전체성의 원리에 입각한 세계이나, 이것은 매개적인 전체노동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개인에 앞서면서도 또한 개인에 매개되는 매개적 전체성의 원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공동사회가 개인없는 전체사회이며 단순한 이익사회가 전체없는 개인 결합임에 반하여, 이것은 개인에 매개된 전체, 전체에 매개된 개인을 요구하게 된다.

104) Ibid. “문화의 유형과 단계”, p.218

이러한 계층성은 단지 구체적인 문화라는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가 아니라, 실제 구성원들의 행복과 직결된 것이었다. 서인식은 전(全)이 존재할 수 있는 전제로 개(個)의 행복을 내세운다.

인간과 사회, 내재와 초월의 통일은 내재가 그대로 곧 초월이고 초월이 그대로 곧 내재 될 수 있는 장소, 개인이 그대로 곧 사회이고 사회가 그대로 개인이 될 수 있는 사회 상태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다가 그대로 곧 하나가 아니고, 하나가 그대로 곧 다가 될 수 있는 세계, 한 사람의 행복이 만 사람의 그것을 전제하고 만 사람의 행복이 곧 한 사람의 그것이 될 수 있는 사회에서만 현대 인간의 상극하는 양면을 새로운 통일로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¹⁰⁵⁾

이렇게 그에게는 개와 전과의 공생 관계가 선제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서인식은 일본이 이러한 질서를 만들 능력이 있다고 보았을까? 서인식은 이후 그는 구라파 문명이 쇠퇴해가고 있음은 기정사실이며, “구주 제국이 장내의 상잔을 되풀이하는 것이 구물의 운명을 최축하기 쉬운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도 지금까지 가지가지로 전쟁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오로지 양보를 거듭하면서 국면의 파탄을 미봉하여 온 것이다”고 주장한다. 즉, 2차 대전을 하나의 필연이자, 유럽의 세력 균형 기반 질서가 한계에 도달하여 새로운 질서를 요구한다는 진단은 근대 초극론의 그것과 동일하다. 물론, 여기서 일본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후의 새로운 질서를 예측하기 위해 그는 구주문화의 발전 과정을 도식적으로 설명하여, 거기서 구라파 붕괴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이 부분은 고야마 이와오의 논의와 거의 동일하다. 중세의 신의 후퇴로 근대 사회가 발생했고, 다시 기계론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개개인에 의하여 조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자의로부터 독립하여 한낱의 절대적 필요물로 소여되는 것이다. 사회가 자동적 메카니즘으로 전화하였다는 것은 인간이 사회의 주체의 지위에서 허수아비의 지위로 전락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야마 이와오가 말하는 정신적 위기는 현실이지만, 일본이 그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이 부족할뿐더러, 사상적 자원 역시 모자라다는 것이다.

현대의 혼란을 극복할 원리는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 사람에 따라서는 동양의 원리에서 구주 재흥의 정신적 근거를 찾을는지 모른다. 허나 동양의 형이상학적 세계는 피로한 정신의 은유체는 될망정 아직까지는 착잡한 현실을 정리할 무기를 제공하기 어렵다. 구라파 부흥의 원리는 구라파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 즉, 현대 구라파의 파탄이 인간이 제작한 사회가 인간을 초월한 자동적 기계로 전화한 데 있다면, 그 파탄을 구제하는 것은 일단 초월하였던 사회를 다시 내재화시킬 수 있는 원리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105) 차승기, 정종현, *서인식 전집, 신문, 잡지편*, “제2차 대전을 해부한다”, p.84, 역락, 2006

나아가 그는 일본이 제시하는 과제로써 동양과 서양의 대립을 단지 뮤토스, 즉 외형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시대 분리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 세계사적 현대의 시간적 내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 세계의 원리로서의 캐피탈리즘이었다. (...) 세계사의 현대적 과제를 캐피탈리즘의 문제라 하면, 그의 근대적 과제는 포이달리즘의 문제였다. (...) 오늘날 제창하는 사상적 원리로서의 동아협동이론도 그것이 단순한 동양적 뮤토스로서 [논의된다].¹⁰⁶⁾

IV. 결론

본 논문은 근대 초극론과 서인식이 주목한 근대의 문제의식, 그리고 근대를 초극하기 위해 제시된 역사철학적 구상을 살펴보았다. 교토학파가 직면한 핵심 문제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래 적극적으로 모방·수입해 온 유럽적 근대가 차츰 그 내적 모순을 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착수한 작업은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한편으로는 일본 정신의 심층에까지 침투한 근대성의 본질을 규명하고 일본 사회가 그로 인해 붕괴하지 않도록 이를 “정화”하는 작업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중심의 세계화가 산출한 전례 없는 차원의 세계성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좌담회의 논자들에 따르면, 유럽 정신이 내포한 모순은 개인주의적이고 수동적인 인간상을 낳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덕적 상실을 초래하였다. 이에 더해 근대 초극론 좌담회는, 유럽적 근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르네상스 즈음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초극해야 할 대상은 유럽의 역사 구조 자체임을 역설했다. 고야마 이와오가 강조했듯이, 실체적 유(有)의 자기모순을 부정하며 전진하는 역사학은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한 유럽 정신구조의 필연적인 귀결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오직 서양적 유(有)에 대비된 동양적 무(無)의 철학을 통해서만 이 순환적 굴레를 종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세계사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도의적 생명력이 요구되었는데, 좌담회 논자들은 일본이야말로 그러한 도의적 생명력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라고 자임했다. 근대 초극론이 이처럼 국가주의적 결론으로 귀결되면서, 최종적으로 공영권이라는 독특한 공간 개념이 산출되었다. 태평양 전쟁으로 인한 총력전 체제는 새로운 공간 운용 방식을 요구했고, 근대 초극론은 정신적 우월성을 보유한 일본이 인접 국가들을 지도·조직해야 한다고 웅변했다.

다른 한편, 서인식은 일반성을 함축하는 자연성과 특수성을 의미하는 역사성을 헤겔적 변증법 속에서 서로 대립하는 안티노미이자 초극해야 할 대상으로 읽었다. 민족과 세계, 전체와 개체,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같은 여타의 대립항들은 모두 이 근본적 대립에서 파생되는 것이었다. 서인식은 중일전쟁을 새로운 세계사적 변화를 예고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파악했는데, 이 새로운 시대에 세계사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일본의 지성계가 제출한 “협동주의”와 “대동아공영권”은, 초극을 표방하면서도 위의 안티노미를

106) Ibid. p.152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제한적 해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에게 당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보편과 특수성의 대립이었고, 캐피탈리즘의 모순은 그 증상으로 표출되는 것이었다. 식민지의 사회주의자 지식인으로서 그는 중심에 의해 주변의 주체성이 희생되는 상황에 불만을 품었지만, 동시에 보편주의가 지닌 뿌리칠 수 없는 매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은 그의 글에서 자명하게 드러난다. 아울러 그는 노동 양식의 통합을 매개로 한 계층적 세계성의 도래가 임박했다고 전망하면서, 그 속에서 특수성이 어떠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가 도달한 결론은, 전체가 지속 가능하려면 이 근본 모순, 즉 보편의 법칙에 의해 구성되면서도 그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특수성을 유지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그는 전(全)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개(個)를 내세움으로써, 개를 전체 속에 융화시켜 버리는 근대 초극론의 모순을 폭로하고자 했다.

[참고문헌]

교토학파 및 근대초극론 관련 자료

- 허우성, *근대 일본의 두 얼굴: 니시다 철학*, 2000
- 나카무라 미츠오, 니시타니 게이치, *태평양전쟁의 사상 - 일본정신의 기원. “세계사적 입장과 일본”으로 본 “근대의 초극” 좌담회*, 2007
- 히로마쓰 와타루 지음, 김항 옮김, *근대초극론 : 일본 근대 사상사에 대한 시각*, 민음사, 2003
- Heisig, James W., *Philosophers of Nothingness : An Essay on the Kyoto School*,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1
- Leopold von Ranke (Georg G. Iggers ed.), *The theory and practice of history*, 1833
- Sugawara Jun, “Kōyama Iwao’s Philosophy of World History: Discussions with Suzuki Shigetaka” in Sugawara Jun, *Frontiers of Japanese Philosophy 4: Facing the 21st Century*, Nanzan Institute for Religion & Culture, pp.176-194, 2009
- 장인성, “세계사와 포월적 주체 : 고야마 이와오의 역사철학과 근대비판”, *일본비평*, 19, 272-307, 2018
- 김태진, “근대초극론에서 ‘도의적 생명력’의 의미 - 생명과 주권의 만남“, *日本學(일본학)*, 52(0), 52, 89-116, 2020
- Christian Uhl, “What was the ‘Japanese philosophy of history’? An inquiry into the dynamics of the ‘world historical standpoint’ of the Kyoto School”, in Christopher Goto-Jones ed, *Re-Politicising the Kyoto School as Philosophy*, Routledge, 2007

일본 IR와 교토학파의 현대적 함의

- Thuy T. Do, “Between East and West: Japanese IR at a crossroads”, *The Pacific Review*, 2020
- Kosuke Shimizu, *The Kyoto School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Non-Western Attempts for a New World Order*, 2022
- Karl Mannheim, *Ideology and Utopia: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Knowledge*, 1936

서인식 관련 자료

- 홍종욱, *식민지/근대 초극 연구회,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 초극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차승기, 정종현, *서인식 전집 I, 歴史와 文化*, 역락, 2006
- 차승기, 정종현, *서인식 전집 II, 신문, 잡지편*, 역락, 2006
- 조관자, “세계사의 가능성과 〈나의 운명〉-서인식의 역사철학과 교토학파-” *일본연*

7, 9, 43-71, 2008

〈다음 기수를 위한 사랑방 25기의 답사 준비 꿀팁〉

교통

규슈는 너무 넓어서 택시로 이동하기에 부담이 있고 버스나 대중교통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후쿠오카 공항에서 시내 호텔까지는 공항버스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첫날에는 차량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시내행 버스표는 공항에서 직접 구매했지만, 23기는 <https://www.highwaybus.com/gp/index>를 통해서 미리 부킹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총 6인(교수님 포함)이었는데, 대중교통 요금과 택시 비용 차이가 크지 않아 그때 그때 2대의 택시로 이동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관광을 마친 후에 길거리에서 바로 택시를 잡거나 우버를 사용했는데, 택시를 더 빠르게 잡는 방법(현지 앱?)이 있다면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 대절은 큐큐국제여행사(<https://qqtour.com/en/japan/van-6/>)를 이용했습니다. 저희 버스 기사님이 일본어만 가능하셨지만, 기사님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버스 견적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세 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여행계획서를 미리 작성하고 업체와 연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벤의 기본 예약 시간이 하루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었고 추가 요금이 시간당 5,000엔 가량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과 일정을 짤 때 미리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 정산 방법

저희는 카카오뱅크 모임통장(공동계좌)와, 개인카드 사용 후 정산하는 두 방법을 택했습니다. 카카오뱅크 경우에는, 버스 예약금은 인원수로 N분의 1로 하고, 교수님 지상공비는 EAI가 모임통장에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머지 현지 일비는 학생 한 명이 선결제하고 여행 이후에 N분했는데, 이를 위해선 여행 이후에 예산을 다시 다 정리해야 해서, 처음부터 모임통장에 여행 비용을 예치해두고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더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팁

- 출발하기 전에 Visit Japan Web, eSIM/로밍을 먼저 등록하면 좋습니다.
- 음식점은 타베로그(<https://tabelog.com/kr/>)와 구글에서 평점을 확인한 뒤 예약했습니다.
- 자유시간에는 돈키호테, 텐진 지하상가 등을 방문했는데, 둘 다 구경할 것이 많아 추천드립니다.